통독과정연구 95－Ⅰ

〈통독5주년 상반기〉

각분야별 통합현황 및 평가

1995. 5

통 일 원

○ 이 책자는 주독한국대사관(통일연구관)이 작성·송부한 자료를 통일원이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복제·발간한 것입니다.

○ 이 책자는 통독5주년이 되는 '95년도 상반기까지의 각 분야별 통합실현 과정과 구 동독지역의 재건현황 및 이에대한 평가와 최근까지의 관련통계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통 일 정 책 실

차 례

Ⅰ. 독일 통일 요인

1. 국제 환경의 변화 ····· 3
2. 동독 주민의 민주 혁명과 독재 체제 붕괴 ····· 4
3. 양독간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민족 동질성 유지 ····· 5
4. 서독 체제의 우월성 ····· 8
5. 동·서독 정치인들의 활발한 접촉과 협상 ····· 10

Ⅱ. 정치·외교·안보·헌법·행정·사법 통합

1. 정치·외교·안보 분야 ····· 13
2. 국가·헌법 분야 ····· 19
3. 행정 분야 ····· 22
4. 사법 분야 ····· 27
5. 치안 분야 ····· 32

Ⅲ. 구동독 불법 문제 청산

1. 반법치국가적 가해자 처벌 문제 ····· 37
2. 복권을 통한 SED 불법 행위 청산(피해자 구제) ····· 39
3. 미해결 재산 문제 처리 ····· 42
4. 구동독 국가 보위부(Stasi) 문서 관리 ····· 44
5. SED 독재 체제 잔재 청산 특별위원회 ····· 45

Ⅳ. 재정 · 경제 분야 통합

1. 화폐 · 경제 · 사회 · 통합(제1차 국가 조약) ····· 49
2. 신연방주 재건을 위한 재정적 기초(통일 비용) ····· 54
3. 신연방주의 경제 재건 ····· 68
4. 신연방주의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 80

Ⅴ. 노동 · 사회 · 환경 분야 통합

1. 노동 분야 ····· 87
2. 사회 분야 ····· 92
3. 환경 분야 ····· 96

Ⅵ. 기타 분야 통합

1. 교육 · 학문 · 연구 분야 ····· 101
2. 가정 · 여성 · 청소년 · 노인 분야 ····· 105
3. 문화 · 언론 · 스포츠 분야 ····· 109

Ⅶ. 평가 및 향후 과제

1. 평가 ····· 115
2. 분야별 향후 과제 ····· 117

〈부 록〉 독일 통일 과정 일지 ····· 119
통독 관련 연구자료 목록 ····· 125

I. 독일 통일 요인

1. 국제 환경의 변화

2. 동독 주민의 민주 혁명과

   독재 체제 붕괴

3. 양독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민족 동질성 유지

4. 서독 체제의 우월성

5. 동·서독 정치인들의

   활발한 접촉과 협상

1. 국제 환경의 변화

가. 고르바초프의 등장

o 고르바초프는 1985년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한 이래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o 1989년 10월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의에서 브레즈네프 독트린 완전 폐기 선언을 통해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개입 포기

o 동독 시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중립을 지켰을 뿐 아니라 동독 지도부의 개혁 촉구

나. 동구 공산권의 개방

o 1989년 9월 헝가리 국경 개방을 비롯, 동구권의 국경 개방으로 동독 주민들의 서독 탈출 가능

o 헝가리 및 체코 주재 서독 대사관에 체류 중인 동독 탈출민의 인도를 위한 외교 교섭에 성공, 동독의 평화 혁명 촉발 ('89. 9말까지 3만명 이상이 서독으로 탈출)

다. 독일 통일에 대한 전승 4대국과 인접국들의 동의

o 유럽 인접국들은 냉전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유럽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일 통일이 불가피하다고 인식

o Kohl 수상은 독일 통일을 전승 4대국의 합의 및 유럽 통합 과정의 일부로서 추진 (미국의 일관된 지지 입장

주효)

o 통일 독일의 NATO 잔류에 대한 소련측의 양보 유도 성공

o 1990년 9월 제 4차 2+4 회담 타결로 통독 관련 외적 요인 완전 제거

2. 동독 주민의 민주 혁명과 독재 체제 붕괴

가. 동독 경제 및 재정 파탄

o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의 실패로 '70년대 이후 경제 침체 계속

o 동독 정부의 부채 증가 및 지불 불능 상태

o 동독 마르크화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상실

나. 동독 정권의 경직성으로 인한 적응력 상실

o 동독 지도부는 소련 및 여타 동구 국가들에서 진행 중인 민주화 개혁 거부

o 여행의 자유 등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처 능력 결여

다. 체제 대항 세력 생성 및 대규모 이주 사태 발생

o '89. 5 지방자치단체 선거 부정을 계기로 저항 세력 조직화

o Leipzig 월요 데모가 전 동독으로 확산, '89. 11월 동베를린 시위에서는 100만명 참가

o '89년 한 해 동안 약 35만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이주, 동독 일상 생활에 막대한 지장 초래

- 동독 주민의 이주는 동독 정권에 대한 거부와 국가의 정통성 상실을 의미하는 "발에 의한 결정"

라. 동독 시민들의 조속한 통일 요구

o '90. 3 동독 최초의 자유 총선에서 동독 주민들은 서독 마르크화 도입과 조속한 통일 입장 지지

3. 양독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민족 동질성 유지

가. 상호 실체 인정

o 동·서독은 서로 상대방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치 체제로서의 실체를 인정, 양독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내독간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유지해 왔음.

나. 베를린 협정을 통해 내독간 무역 기초 마련 (1951년)

o 대 공산권 수출 금지 품목을 제외하고 무역 자유화

o 내독 무역은 내부 거래로 간주, 관세 면제

o 중앙 은행간 청산 계정 설치, 동독에 무이자 신용 대부 (Swing) 제공

다. 1960년대부터 서독 정부의 「작은 걸음 정책」 시작

o 동독의 정치범 석방 거래

o 이산 가족 합류에 노력 (25만명 이산 가족 재회)

o 양독간 우편 왕래 전개

o 동·서 베를린간 지하철 노선 통과 등

라. 동·서독 통행 협정 체결 ('72. 5)

o 동독측으로부터 인적 교류 제한 조치 완화 보장

- 합법 이주 또는 탈출을 통한 완전 거주 이전 ('50-'92)
  - 동독에서 서독으로 : 375 만
  - 서독에서 동독으로 : 47 만
- 동독에서 서독으로 여행 : 200 만 (80년대 후반 매년 평균)
- 서독에서 동독으로 여행 : 600 만 (80년대 후반 매년 평균)

마. 동·서독 기본 조약 체결 ('72. 12)

o 양독간 기본 관계 규율, 후속 협정 체결을 위한 기본 장전

o 동·서독은 강대국간의 화해 무드에 편승

o 양독간 현상 인정을 토대로 실질적, 지속적 화해·협력 추진

o 동독에 대한 사실상 (de facto)의 주권 인정

o 양독간 관계 증진 과정에서 동독이 실질적,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약속

바. 신문·방송사 특파원들의 상호 취재 활동 허용 ('73. 3)

o 서독 언론인이 동독에 취재 등록 및 상주

- '88년말 20명의 서독 특파원, 8명의 동독 특파원

사. 상주대표부 설치 ('74. 5)

o 양독간 협상 창구 마련

아. 양독간 체육 협정 체결 ('74. 5)

o 정기적으로 체육 경기 개최 합의, 경기 일정 작성 교환

자. 양독간 보건 협정 체결 ('74. 6)

o 양측의 여행·방문자들이 긴급한 질병 발생시 상대편 지역에서 무료 치료 제공

차. 양독간 우편·전화 협정 체결 ('76. 3)

o 양독간 우편물 교환 및 전화 통화 현황

- 소포 왕래 ('88) : 연간 3,600 만건
- 편지 왕래 ('88) : 연간 1억 9,500 만건
- 전화 회선 ('88) : 1,529 선
- 전화 통화 ('88) : 연간 3,900 만 통화

카. 양독 청소년 단체간 청소년 교류 합의 ('82. 9)

o 정부 지원 수학 여행 장려

- 동독에서 서독으로 여행 ('88) : 연간 5,500 명
- 서독에서 동독으로 여행 ('88) : 연간 74,000 명

타. 양독간 문화 협정 체결 ('86. 5)

o 도서 전시회 개최, 상업적 음악 공연 유치

- 연극 순회 공연, 학술 회의, TV 프로그램 교환 방송, 소장 문화재 교환 전시

파. 양독 도시간 자매 결연 ('86. 10)

o 지방자치단체 주민간 상호 방문을 통한 접촉 증대

- 62개 동·서독 도시간 자매 결연 ('89 말까지)

하. 양독간 환경 보호 및 과학·기술 협정 체결 ('87. 9)

o 환경 오염 제거를 위한 경험·기술 정보 교환

o 서독 과학·기술자 협회와 동독 아카데미간 학문 교환, 공동 연구, 학술 회의 개최

- 자연 과학, 공학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합의 (27건)

4. 서독 체제의 우월성

가. 의회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 민주 체제의 우월성

나. 사회적 시장 경제 제도의 정착으로 지속적 경제 성장과 모범적 사회 복지 국가 실현

다. 동독에 비해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서독 사회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동경

* 뒷면 「'89년 당시 동·서독간 주요 지표 비교」 참조

1989년 동·서독간 주요 지표 비교

	서 독	동 독
o 국가 일반		
- 국명	독일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정부수립일	1949. 9. 21	1949. 10. 7
- 유엔가입일	1973. 9. 18	1973. 9. 18
- 수교국가수	162 개국	134 개국
o 인문 지리		
- 인구	6천 3백만	1천 6백만(서독의 25%)
- 면적	24만 9천 Km2	10만 8천 Km2 (서독의 43%)
o 경제 지표		
- GNP	2조 2,452억 DM	2,837억DM (서독의 13%)
- 1인당 GNP	36,176 DM	17,076 DM (서독의 47%)
- 실질성장율	3.8%	1.9% (서독의 50%)
- 무역 규모	6,111억 $	470억 $ (서독의 7.7%)
· 수출	3,413억 $	237억 $
· 수입	2,698억 $	233억 $
- 화폐 단위	Deutsche Mark (DM)	Mark
o 국방 지표		
- 병력	49만 5천	17만
· 육군	34만 7천	12만
· 공군	10만 5천	3만 7천
· 해군	4만 3천	1만 3천
- 국방비	280억 $	220억 $
- 외국군주둔	NATO 군 40만	소련군 38만
-군사동맹가입조약	나토 가입 ('55. 5. 9)	바르샤바 조약 가입 ('55. 5. 15)
o 사회·복지 지표		
- 가계별 월 가처분 소득 ('88말)	4,024 DM	1,900 마르크
- 총취업인구	27,742천명	8,547천명
- 의사	18만 8천명	4만명
- 종합병원	3,046개	539개
- 일반학교 학생수	6백 88만명	2백 8만명

* 출처: 주독대사관, 「숫자로 본 독일 통일」 1992

5. 동·서독 정치인들의 활발한 접촉과 협상

o 아데나워의 「힘에 의한 정치」를 통해 강력한 힘을 구축한 서독은 '70년대 이후 동독 정치인들과 활발한 접촉을 가졌음.

o 통일 당시 콜 수상, 겐셔 외무장관, 쇼이블레 내무장관 등의 적극적 통일 협상 입장은 혼란한 정국을 통일로 이끄는 구심점이 되었음.

동·서독 정상 회담 및 접촉

	접촉 대표	일시 및 장소			논의 내용
공식 접촉	1. 브란트 수상 - 슈토프 수상	1970. 3.19	에어푸르트	(동독)	양국관계 정상화
	2. 브란트 수상 - 슈토프 수상	1970. 5.21	카셀	(서독)	〃
	3. 슈미트 수상 - 호네커 의장	1981.12.11 -12.13	동베를린 근교	(동독)	양독관계 전반
	4. 콜 수상 - 호네커 의장	1987. 9. 7 - 9.11	본	(서독)	여행자유 환경·과학 교류
	5. 콜 수상 - 모드로 수상	1989.12.19 -12.20	드레스덴	(동독)	조약공동체 형성
	6. 콜 수상 - 모드로 수상	1990. 2.13 -2.14	본	(서독)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비공식 접촉	1. 카스텐트 대통령 - 호네커 의장	1982.11.14	모스크바	(소련)	브레즈네프 장례식 참석
	2. 콜 수상 - 호네커 의장	1984. 2.14	모스크바	(소련)	안드로포프 장례식 참석
	3. 콜 수상 - 호네커 의장	1985. 3.12	모스크바	(소련)	체르넨코 장례식 참석

II. 정치 외교·안보·헌법·행정·사법 통합

1. 정치·외교·안보 분야

2. 국가·헌법 분야

3. 행정 분야

4. 사법 분야

5. 치안 분야

1. 정치·외교·안보 분야

가. 정치 체제 개편

1) 민권 운동 단체들의 정치 세력화

o '85년 창설된 평화·인권 단체(IFM) 외에 '89년 여름 이후 공산당 집권에 반대하는 각종 민권 운동 단체들이 결성되었음.

- Demokratie Jetzt ('89. 9. 16, DJ)

  Neues Forum ('89. 9. 13, NF)

  Demokratischer Aufbruch ('89. 10. 2, DA).

  Vereinigte Linke ('89. 9. VL)

o 원탁회의 구성

- 구동독 공산당 및 위성 정당 (5): SED, CDU, DBD, LDPD, NDPD

- 민권 운동 단체측 (7): DA, DJ, IFM, NF, VL, Grüne Partei, Sozialdemokratische Partei (SPD).

o 원탁회의는 총 16회 개최되었으며, 초기에는 공산당 활동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큰 역할을 했으나 후기에는 너무 좌편향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2) 구동독 기존 정당들의 개혁

o SED는 '89. 12. 특별 정당 대회를 개최, 당명을 SED-PDS (독일 PDS로 개칭)로 정하고 스탈린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하였음.

- '89년 SED 당원수는 230만명이었으나 PDS로 바뀐 후 '90. 6에는 35만명, '91. 6에는 23만명으로 줄어 들었음.

o 구동독의 4개 위성 정당인 동독기민당(CDU), 동독자민당 (LDPD), 독일민족민주당 (NDPD), 독일민주농민당 (DBD) 역시 당 지도부의 쇄신과 당 강령 수정을 통해 개혁 추진

- CDU는 '89. 12. 특별 전당대회에서 SED와의 결별을 선언

- LDPD(LDP)와 NDPD는 '89. 12 중순 사회주의 포기 선언

- DBD는 '90. 1. SED-PDS와 결별 선언

3) 구동독지역 신생정당 결성 및 구서독 정당들과의 제휴

o '89년 8월 이후 구동독지역에는 서독 기존 정당들의 지원을 받아 많은 정당들이 결성되었음.

- Sozialdemokratische Partei ('89. 10, SDP), Deutsche Soziale Union ('90. 1. DSU), 동독 FDP ('90. 2. 4), 동독 Grüne ('89. 11).

o '90. 3. 18 동독 인민의회 선거를 앞두고 동독지역의 기존 정당, 신생 정당, 민권 운동 단체들은 서독 정당들의 지원 아래 연합체 형성

- 독일 동맹 (AD): 서독 CDU 주도 하에 동독 CDU, DA및 DSU (서독 CSU가 지원)가 연합
- 자유민주연합 (BFD): 서독 FDP의 주도하에 동독 FDP, LDP 및 DFP (독일 포럼)가 연합
- Bündnis 90: 서독 녹색당 주도하에 NF, DJ, IFM, 동독 녹색당, 독립 여성 협회 (UFV)가 연합

'90. 3. 18. 동독 인민의회선거 득표율

(%)

독일연맹	SPD	PDS	자유민주연합	B'90
48.1	21.8	16.3	5.2	2.9

4) 동·서독 정당 완전 통합 및 전독 총선 실시

o '90. 12. 2 전체 독일 총선을 앞두고 서독의 기존 정당들은 '90년 가을 각각 통일 전당 대회를 개최, 동독 자매 정당들과 합당을 완료

- 기민/기사당 ('90. 10. 1), 사민당 ('90. 9. 26), 자민당 ('90. 8. 11), B'90/Grüne ('90. 8. 5)

o 독일의 통합 정당은 제 12대 총선 ('90. 12. 2) 및 제 13

대 총선 ('94. 10. 16)을 거치면서 당내 통합 완료.

연방 하원 총선 득표율

%, ( )안은 의석수

	CDU-CSU	FDP	SPD	B'90/Grüne	PDS
제 12대	43.8 (319)	11.0 (79)	33.5 (239)	5.1 (8)	2.4 (17)
제 13대	41.5 (294)	6.9 (47)	36.4 (252)	7.3 (49)	4.4 (30)

* PDS는 5% 미만이지만 베를린지역구 4석확보에 힘입어 원내 진입

o 동독 지역에서의 민사당 (PDS) 지지율은 통일 당시에는 감소하였으나 ('90. 3월 16.3%, '90. 12월 11.1%) 통일 후 4년이 지난 '94. 10월 총선에서는 19.8%로 상승하였는 바,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 데 있다고 봄.

- 구동독 지역의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좌파 야당적 잠재력
- 통일 후 기대감 상실
  - 사회적 안정성과 정의감이 파괴된 데 대한 불만
  - 구동독 역사에 대한 무분별한 처리
  - 구동독인들의 권익, 소유권, 문화, 자의식 등에 대한 구서독인들의 무시 경향
- 과거 지지했던 구서독 기성정당에 대한 실망

- PDS의 일부 저명 인사에 대한 개인적 호감 (Gysi, Luft 등)

나. 외교 관계 재정립

o 독일의 주권 회복

- 1990. 9. 12 서독과 전승 4대국에 의해 서명된 "독일 관련 최종 처리에 관한 조약 (2 + 4 회담)"으로 독일의 완전한 주권 회복 달성

o 신연방주의 EC 조약 및 EC 정책에의 편입

- 1990. 12. 4 신연방주를 위한 EC 종합대책 채택

o 독일과 인접국가들간 조약 관계 재편

- NATO 동맹 체제의 구조 및 전략 변화 기본 원칙 가결

o 소련군 철수

- 통독 당시 동독 주둔 소련군 병력 34만명, 군속 21만명 등 55만명의 소련인 완전 철수 (1994. 8. 31)
- 철군 비용 120억 DM 지불

o 동독이 체결한 국제 조약 처리

- 총 2,200 건 중 80%는 1990. 10. 3 을 기해 효력 상실

o 외교망 확충

- 구동독의 재외 공관을 폐쇄하는 대신 일련의 재외 공관 신설

다. 연방군 재편

o 동독 인민군(NVA)의 해체

- '90. 8. 17 군인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연방국방부 「통합 대비단」 20명을 동년 10.3 까지 동독 국방부 내에 설치 (그 후 베를린에 연방국방부 외청 설립)
- '90. 10. 3일 0시를 기해 약 103,000명의 NVA 군인의 근무 해제 (동독 국방장관의 명령)
- NVA 고급 지휘관은 동독 국방장관에 의해 직위 해제
- 약 7,000명의 NVA 소속 직업 장교가 자발적으로 전역
- 국경수비대와 민방위 대원 6,000명은 연방군내 민간 근무직에 한시적으로 근무
- 통독과 더불어 전차 2,337대, 장갑차 5,980대, 대포 2,245문, 항공기 및 헬리콥터 479기, 군함 71척을 NVA로부터 인수
- 약 2,288건의 각종 군용 부동산 중 약 80%를 일반 부동산으로 전환
- 국경 차단 시설 제거('93. 12. 완료) 및 지뢰 탐지 작업 추진('95년 말 완료 예정)

o 신연방주에의 연방군 신설

- 통일 직후부터 1991. 6. 30까지 연방군 동부 지역 사령부 설치
- 통독으로 약 1,500개 단위 부대 증가

- PDS의 일부 저명 인사에 대한 개인적 호감 (Gysi, Luft 등)

나. 외교 관계 재정립

o 독일의 주권 회복

- 1990. 9. 12 서독과 전승 4대국에 의해 서명된 "독일 관련 최종 처리에 관한 조약 (2 + 4 회담)"으로 독일의 완전한 주권 회복 달성

o 신연방주의 EC 조약 및 EC 정책에의 편입

- 1990. 12. 4 신연방주를 위한 EC 종합대책 채택

o 독일과 인접국가들간 조약 관계 재편

- NATO 동맹 체제의 구조 및 전략 변화 기본 원칙 가결

o 소련군 철수

- 통독 당시 동독 주둔 소련군 병력 34만명, 군속 21만명 등 55만명의 소련인 완전 철수 (1994. 8. 31)
- 철군 비용 120억 DM 지불

o 동독이 체결한 국제 조약 처리

- 총 2,200 건 중 80%는 1990. 10. 3 을 기해 효력 상실

o 외교망 확충

- 구동독의 재외 공관을 폐쇄하는 대신 일련의 재외 공관 신설

다. 연방군 재편

o 동독 인민군(NVA)의 해체

- '90. 8. 17 군인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연방국방부 「통합 대비단」 20명을 동년 10.3 까지 동독 국방부 내에 설치 (그 후 베를린에 연방국방부 외청 설립)
- '90. 10. 3일 0시를 기해 약 103,000명의 NVA 군인의 근무 해제 (동독 국방장관의 명령)
- NVA 고급 지휘관은 동독 국방장관에 의해 직위 해제
- 약 7,000명의 NVA 소속 직업 장교가 자발적으로 전역
- 국경수비대와 민방위 대원 6,000명은 연방군내 민간 근무직에 한시적으로 근무
- 통독과 더불어 전차 2,337대, 장갑차 5,980대, 대포 2,245문, 항공기 및 헬리콥터 479기, 군함 71척을 NVA로부터 인수
- 약 2,288건의 각종 군용 부동산 중 약 80%를 일반 부동산으로 전환
- 국경 차단 시설 제거('93. 12. 완료) 및 지뢰 탐지 작업 추진('95년 말 완료 예정)

o 신연방주에의 연방군 신설

- 통일 직후부터 1991. 6. 30까지 연방군 동부 지역 사령부 설치
- 통독으로 약 1,500개 단위 부대 증가

- 1994년 말 현재 58,000명이 신연방주에 주둔
- 단위 부대와 근무처 이전
- 구동독 직업 군인으로서 계속 근무 여부는 "초당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제 7 병무 행정청을 설치하여 신연방주 병무행정 관할

* 연방군의 병력 수는 1994년 말 현재 36만 7천명이며, 향후 2-3년 내에 34만으로 감축할 예정임.

2. 국가·헌법 분야

가. 국가와 헌법

1) 통일조약상 기본법 개정

o 1990. 10. 3을 기해 기본법의 효력이 동베를린 및 신연방 5개 주에까지 확대 됨.

o 통일 조약 제 4조 (기본법 개정 규정)에 의거 기본법을 개정 또는 보완

- 전문 개정
  - 재통일 관련 문항, 기본법의 과도적 성격 삭제
- 제 23조 삭제
  -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더 이상의 독일 연방 가

입 차단 (특히 폴란드 서부 지역)

- 제 143조 개정
  - 완전한 법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도 기간 동안 헌법 규범의 통일적 적용에 대한 예외 인정
- 제 51조 2항 개정
  - 투표권 조정
- 제 135조 a 제 2항 신설
  - 구동독의 채무 승계 규정
- 제 146조 개정, 존치
  - 독일 통일 이후에도 국민의 자기 결정으로 신헌법 제정 가능성 부여

o 기본법 제 131조 적용 배제

- '45. 5. 8 이전 구동독 공무 종사자의 연금 등 청구 배제

o 재정에 관한 기본법 제 106조, 제 107조 수정 적용

2) 통독후 기본법 개정

o 통일 조약 제 5조의 권고 사항에 따라 연방과 주 간의 상호 관계, 국가 목표 규정, 기본법 제 146조의 적용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64명의 정위원과 64명의 대표인으로 구성된 상·하원 합동 헌법 위원회 발족

o 1994. 9. 제 12대 국회 마감시까지 연방 하원과 상원은 환경 보호, 실질적인 남·여 평등 보장, 장애자 보호,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간의 권한 일부 재조정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 완료

나. 신연방주의 형성 및 재편

o 통독과 함께 발효한 주 설치법 (Ländereinführungsgesetz)에 의거 1990. 10. 14 을 기해 브란덴부르크, 멕클렌부르크-포퍼메른, 작센-안할트, 작센, 튀링엔 5개 주가 형성

o 기본법 제 143조 제 2항에 의거 1992년 브란덴부르크주와 멕클렌부르크-포퍼메른주, 튀링엔주와 작센주간에 각각 주 경계 변경에 관한 조약을 체결 (1995. 12. 31 까지만 유효, 그 후는 기본법 29조 적용)

o 브란덴부르크주와 베를린시의 통합 결정 (1995. 3)

o 주 설치법에 의거 신연방주들의 주헌법이 제정, 발효됨.

- 의회 민주주의 정부 체제를 구체화
- 모든 정당에 대한 기회 균등 보장, 시민의 국가 활동 참여 보장

다. 수도 및 국가 기관 소재지

o 통일 조약 제 2조에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의회와 행정부의 소재지는 독일 통일의 달성 이후에 결정한다" 라고 규정

o 1991. 6. 20 독일 연방 하원은 의회의 소재지를 베를린으

로 의결하고, 행정부도 베를린에 두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

o 연방 정부는 1991. 6. 21 연방 내무부 산하에 베를린-본 수도 이전 실무단 구성

o '94. 3. 연방 정부 및 연방 하원의 베를린 이전에 관한 「베를린-본 법안」이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

- 연방 부처 중 10개와 연방 하원 이전 시기를 1998-2000년 사이로 확정

- 수도 이전 후 Bonn 지역의 낙후를 낙기 위해 본을 연방 도시 (Bundesstadt)로 개칭하고, 연방 부처 7개를 잔류시킴.

3. 행정 분야

가. 연방 행정 체계 구축

o 통일 조약 제 13조에 의거 구동독 지역의 행정 기관들을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에 귀속

- 200개 이상의 기관 (철도, 체신, 국방 분야 포함시 4,000 개 이상)이 56만명의 직원과 함께 연방 정부로 이관)

o 연방 재산 관리청 설치

- '90. 10. 3자 연방 재무성 부령에 의거 구동독 지구

(Bezirk) 단위마다 연방 재산 관리청 (총 15개) 설치

- 동 관리청은 구동독 인민군 부동산과 주택의 인수 및 매각, 소련군 부동산의 인수 및 매각, 구 인민 공유 재산의 연방 귀속, 재정 재산의 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 담당

o 관세 행정의 구축

- 화폐 통합 전까지 동독에는 관세법, 소비세법이 없었음.

- 신연방주의 관세법, 소비세법의 이행 책임은 연방 관세청에서 담당

  · 상당수의 동독 세관 직원을 인수하여 연수 교육, 관세 실무 수습 등을 받게 함.

- 1991. 1. 각 신연방주에 고등재정관리국 설치, 산하 세무서 직무 감독

- '93. 1 현재 5개 관세·소비세국, 20개 중앙 세관, 동베를린 연방 금고등에서 7,200명의 직원 근무

o '90. 9. 28자 연방 교통부령에 의거 신연방주 주요 지역에 수운국 설치

나. 주 행정 체계의 구축

o 구동독 지구 행정 기관에 근무하던 인력은 대부분 구동독 공산 정권과 밀착되어 새로운 행정 구축에 부적절했음.

o 1991년부터 주 행정 구축을 위한 주된 임무는 구서독 지역 자매주에 의해 수행

- 사법 행정, 조세 행정, 일반 행정 등에 장기 전보 발령, 단기 파견 근무, 공무 출장 등을 통한 인력 지원 제공

- 구동독 지역의 행정 인력에 대해 자문 활동, 교육 훈련, 재교육 등의 자질 향상 조치를 취함.

o 1990. 7. 1 화폐·경제·사회 통합과 동시에 120개의 세무서 설치

- 연방 재무부와 구서독주 조세 행정 기관에서 인적·물적 지원

다.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적 지원

o 연방 내무부는 「연방-주 조직 정비처」를 설치, 행정 체계 구축 과정을 지원

- 동독 중앙 정부 기관 약 1,000개를 연방과 주 정부에 귀속

- 주 범위를 초월하는 업무 또는 공공 행정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은 폐쇄

- 신연방주 행정 기관에 자문관을 파견, 조직과 행정 구축을 자문

o 1991년 베를린에 인력 소개소를 설치, 신연방주의 인력 수요와 구서독주의 지원자 통합 관리

o 1991-1992년간 연방 내무부는「신연방주 재건단」을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문제 자문, 인력 알선 및 '구동독 부흥 공동 대응책'에 의한 사업 지원 등을 수행

o 1990-1991년 연방 내무장관 주도하에 관련 연방 부서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개최

- 시장, 군수 등 단체장들의 업무 숙지, 연방 정부 지원 가능성 협의 등

라.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o 서독 지역 공무원을 동독 지역에 파견·전보 ('94년 말 현재 총 34,937명)

- 연방 정부 16,600명, 서독 주 8,337명, 서독 자치단체에서 10,000명 이상 파견 (월 450 DM 수당 지급)

- 전보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연금 산정시 혜택 외에 이사비용 지급, 승진상의 특혜 부여

o 연방 정부는 신설주 및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 보조금 지원

마. 특수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o 연방 내무부의 '지방 자치 단체 재산' 실무단

o 연방 내무부의 동독지역 지자단체 측량 행정 지원

o 신연방주 특수 행정 공직자 교육 훈련 및 연수 지원

바. 직업 공무원 제도의 도입

o 구동독에는 1945. 9 소련 군정 명령을 통해 직업 공무원 제도가 폐지

- 공직자는 공산당의 의지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봉사해 왔음.
- 통일 조약 협약 당시 구동독 지역 공직자 수는 총 인구의 14.5%에 해당하는 225만-230만명 (무장 조직, 제국 철도, 체신 포함)

o 통일 조약 제 20조에 의거 '92년 말까지 주 공무원 법을 제정

o 공무원의 재임용, 봉급, 원호 등에 관한 주요 경과 규정은 통일 조약에 의한 권한 위임에 따라 연방 법률 규정으로 마련

o 구동독 공직자의 재임용 심사

- 적성, 자격, 전문성,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한 헌신 등의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 심사
- 통일 조약에 의한 해고 근거는 임용 대상자가 인간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거나 Stasi 활동으로 공직 신분 유지가 비합리적인 경우임.
- '92. 1. 1 까지 24,451명, '93. 1. 1 까지 57,799명이 재임용 됨.

o 공직 근무자의 법적 지위

- 통일 조약 제 13조 2항은 구동독 공직 근무자들의 법

적 지위가 당분간 유효하도록 규정

- 동부 협약 임금지역 (Tarifgebiet Ost)의 급료와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1991년 서부의 60%에서 '93년 80% 인상)

4. 사법 분야

가. 법의 동화 과정

o 통화·경제·사회 동맹 체결을 통한 동·서독 법률 조화

- 동 조약 제 2조 조약상의 기본 원칙과 지도문을 통해 동독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사법의 도구적 성격 배제
- 제 4조 법률 개폐 규정에 따라 동·서독이 각각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할 법규 명시

* 제 1차 국가 조약에 의한 법률 동화는 동·서독의 정치 체제가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률 조화 (Harmonisierung)로 보는 것이 타당

o 통일 조약을 통한 동화

- 서독의 5,500개 법률 전체를 동독 지역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법 동화 추진 (Rechtsangleichung)
- 통일 조약은 전문, 45조, 의정서, 제 1, 2, 3 부속의정서 및 추가 협정으로 구성
- 제 1 부속 의정서는 연방법의 확장 적용, 제 2 부속

의정서는 동독법의 계속 적용, 제 3 부속 의정서는 미해결 재산 문제 처리를 위한 양독간 공동 선언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 협정은 슈타지 문서 처리에 관한 입장 표명 등을 포함.

o 통일후 법률 개폐를 통한 동화

- 완전한 법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률 개정, 제정 계속 ('95. 4 현재 700개 법률이 동화되지 않고 있음)

나. 분야별 법 통합의 기본 원칙

o 민사법

- 통일 조약 제 8조에 의하여 연방 민법은 원칙적으로 독일 전역에 적용 (통일 조약 제 1 부속의정서 제 3장 B 2절에 의한 연방 민법 시행법률 개정)

- 단, 연방 민법 616조 2항, 3항, 622조, 제 1706조 내지 1710조 등은 적용 제외

o 상사법

- 동독의 경제 관련 법률은 화폐·경제 동맹 조약 체결 시부터 서독과 비슷해지기 시작했음 (예, 회사법)

- 통일 조약 제 8조와 제 1 부속의정서 3장 D 부문에 따라 상법, 회사법, 보험계약법 등의 동독 적용 규정

- DM 대차대조표법 제정, 시행

o 형사법

- 제 1차 국가 조약의 정신에 따라 1990. 7. 1 구동독은 제 6차 형법개정법률을 통해 형사법 개혁 시도
- 통일 조약 8조와 제 1, 2 부속의정서 3장 C에서 서독 형사법의 동독 적용 관련 사항 규정 (특히 낙태에 관한 법률 동화는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음).

다. 사법 조직의 통합

o 통일 조약
- 연방의 법원 제도를 즉각 도입하지 않고 경과 규정으로 구동독의 사법 조직 잠정 유지

o 사법조정법 공포 (1992. 6. 30)
- 전문 재판권의 분리와 법원 정상화 과정에 관한 전제 조건 마련

o 주 헌법 재판소 신설
- 각 주의 연방주의에 기초한 헌법적 책무 수행

o 구동독의 최고 법원과 대검찰청 폐지 (1990. 10. 3)

o 통일 조약에 따라 구동독 법무부 해체, 각 주 정부 산하 주 법무부로 업무 이관

o 각 법원과 검찰청의 관할 및 조직 개편
- 동독의 사회적 법원 폐지
- 동독의 지구 및 군법원 관할 조정
- '93년까지 구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조직 체계 완료

o '92년 말까지 행정·재정·노동·사회 법원 등 전문 법원 설치 (제 1차 국가 조약 제 6조에 의거)

o 사법 보조관 제도 도입

- 특히 토지 등기 제도 확립에 주력

o 변호사 면허, 공증인 임명, 명예 판사 선임에 대한 심사 법률 ('92. 7. 24) 시행

o 신연방주 사법 재건을 위한 사법 부담 완화를 위한 법률 ('93. 1. 11) 시행

라. 법조인의 재임용 및 인력 지원

o 동독 지역 판·검사의 과거 전력 심사

- 사회주의 체제 수호 및 불법 정권 유지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구동독 법관 및 검사의 원칙적 배제

- 통일 조약은 구동독법에 의해 자격증을 획득한 판·검사가 자격 심사 완료시까지 계속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

- 각 주 정부마다 판사 선출 위원회 및 검사 선임 위원회 설치 (법관 선출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방식에 의한 규정, 1990. 7. 22)

- 위원회의 긍정적인 판정을 받으면 일단 시보 또는 임시 판·검사로 임용

- 구동독 판·검사 중 1,889명이 심사를 받고, 그 중 1,094명 (58%) 재임용됨.

o 판·검사 신규 임용 및 파견을 통한 지원

- 연방 정부는 서독 지역 법관들의 파견 지원을 위해 '94년 말까지 약 2억 7천만 DM 지출

- 1994. 4. 1. 현재 신연방주에는 1,190명의 법관, 변호사, 그 밖의 고위급 법률 종사자 및 구연방주로부터 파견된 643명의 법관들이 활동하고 있음.

- 기타 퇴직한 판·검사를 신연방주에 재임용 ('93. 4. 1 현재 판사 66명, 검사 8명).

o 동독 지역 사법 재건을 위한 기타 각종 지원

- 서독 지역의 각 주들은 동독 지역 주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사법 재건부(Aufbaustab)를 지원.

- 연방 법무부는 베를린 지부에 상설 상담소 설치

- 사법 보조관 및 기타 관련 공무원 2,200명 중 서독 각 주에서 600명 파견

- 등기처리신속화법 ('93. 12. 25. 시행)을 통해 각종 등기 신속 처리

- 구동독 출신 판·검사를 비롯한 사법 종사원들에 대한 보충 교육 실시

- 1993년 초 현재 변호사 4,000명, 공증인 518명 활동

- 신연방주 교도소의 수리, 신축

- 연방 법무부는 구동독 사법 제도 전시회를 통해 동·서독 독일인간 상호 이해 증진 도모

5. 치안 분야

가. 신연방주 경찰 체계 구축 및 지원

- o 통일 조약 13조에 따라 동독의 국내 치안 행정 기관은 신연방주의 관할권으로 이양
- o 구동독 인민 경찰 재임용 여부는 적성, 능력, 전문성에 따라 결정
- o 연방 정부는 신연방주에 기동 경찰을 구축 (작센주 2개, 기타 신연방주에 1개씩 구축)하였으며 단위 부대 편성과 장비 구축은 1996년 말까지 완료 예정
- o 연방 범죄청 (BKA)은 주 범죄청의 구축을 위해 막대한 인력과 조직 지원

나. 신연방주에의 연방 국경 수비대 창설 및 편입

- o 통일 조약에 따라 연방 국경 수비대 (BGS) 동부 지부 (BGS-OST) 창설. 철도 경찰, 항공 교통 안전 대비 임무 수행 (약 7,000명 근무)
- o 1991-1995년까지 연방 국경 수비대 동부 지부 구축을 위해 매년 2억 6천만 DM 예산 책정
- o 1992. 4. 1 연방국경수비 임무 일체를 관장하는 5대 지역 국경수비대로 재편 (과거 내독 국경을 초월하여 편성)

다. 주 헌법 보호청의 설립

o 극우 및 극좌 성향, 외국에 대한 안보 내지 첩보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라. 민방위 및 재난 보호 체제 구축

o 약 27,000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960개 전문 봉사단 구축

III. 구동독 불법 문제 청산

1. 반법치국가적 가해자 처벌 문제

2. 복권을 통한 SED 불법 행위 청산

   (피해자 구제)

3. 미해결 재산 문제 처리

4. 구동독 국가보위부 (Stasi) 문서 관리

5. SED 독재 체제 잔재 청산

   특별위원회 설치

1. 반법치국가적 가해자 처벌 문제

가. 기본 원칙

o 서독의 형법 체계가 주로 개인의 법질서에 대한 침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동독의 국가에 의한 불법 행위를 규율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음.

o 통일 조약에서는 행위 당시 동독에서 유효하던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 (행위지법 우선 원칙)

- 다만, 연방법이 구동독법보다 가벼운 처벌을 보장하는 경우 연방법 우선.
- 또한 독일인에 대한 납치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방법 우선

나. 1993. 1. 21. "SED 정권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시효 정지에 관한 법" 발효

o 과거 SED 정권하에 행하여진 불법 행위들 중 국가 또는 당지도부의 명백한 또는 추정적인 의사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1949년 10월 11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 시효 정지

다. 1993. 9. 27. "형법 시효 연장에 관한 법" 시행

o 1992년 12월 31일까지 동독 지역에서 행하여진 범죄들 중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법행위의 시효는 '95년 말까지, 징역 1년-5년 정도의 범법행위는 '97년 말까지 연장

- 연장 이유는 업무 폭주, Stasi 문서를 통해 범법 행위 계속 확인 필요 등 때문임.

라. 정권적 범죄 행위

o SED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각 주의 형사 소추 기관과 법원에서 담당

o 베를린 주에는 "구동독 정부에 의한 범죄 행위 특별 수사부"가 구성되어 활동 중임.

o 베를린 주에는 현재 1,700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 중 약 1,250건은 국경수비대 총격 사건, 구동독 법관들에 의한 법률 왜곡 문제임.

마. 국가보위부 요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

o 통일 전 이미 서독 형법에 의해 가벌성이 성립된 범죄는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형사 소추가 중지되는 것은 아님.

o 이에 따라 전 Stasi 대외정찰총국장 Markus Wolf 는 6년 징역 선고를 받았으며 (보석으로 풀려남), 전 국가보

위부장 밀케도 현재 재판 진행 중임.

- 그 외 현재 Stasi 관련 1,740건의 수사가 진행 중임.

바. 통일 관련 경제 사범 처리

o 통일과 관련하여 수십억 마르크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경제 범죄 (대개 사기죄와 배임죄) 처벌

o 신탁청 또는 구동독 정당과 대중 단체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배임 행위 처벌

※ 가해자 처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탈출자 사살 관련 병사는 투옥된 반면, 명령을 내린 지도자들은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법적 불공평에 대한 비난임 (지난 3. 14 베를린 검찰청은 에곤 크렌츠를 비롯한 7명의 구동독 당 정치국원을 기소한 바 있음).

2. 복권을 통한 SED 불법 행위 청산 (피해자 구제)

가. 복권의 의의와 원칙

o 피해자 복권은 잘못된 구동독 역사를 바로 잡고 내적 화해와 단결을 이룩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o 연방 하원은 1992. 6. 17 "공산 폭력 정권하의 희생자들

에 대한 명예 회복 선언" 채택

o 원상 회복시 2대 원칙

- 피해자들이 입은 물질적, 비물질적 여러 가지 형태의 손실에 대해 어느 특정 형태 손실 보상에만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보상 (평등 원칙)

- 피해자는 어느 누구도 국가의 원상 회복 조치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 (공평 원칙).

나. 형법상의 복권

o 통일 조약 17조에서 정치적 형사 처벌의 희생자 또는 반법치국가적 판결로 인한 피해자에게 복권의 길을 열려 줄 것을 약속

o 1992. 11. 4 SED 불법 청산을 위한 제 1차 법률 (형사복권법)을 통해 형사법적 복권 실현

- 복권 대상 판결은 '45. 5. 8 - '90. 10. 2 까지 동독 지역에서 내려진 모든 형사 판결임

- 복권 형태는 판결 취소, 전과 기록 말소, 명예 회복, 재정적 보상 등임

o '94. 12. 말 현재 13만 여건의 복권 신청 중 11만건 처리

o 금전 보상액은 '94. 말까지 5억 5천만 DM 지출

- 연방 정부는 총 보상액을 20억 DM으로 예상

다. 직업상 복권

o '94. 7. 1 발효된 SED 불법 청산을 위한 제 2차 법률에서 직업적 복권 규정

o 구동독 공산 정권의 정치적 핍박으로 인해 직장 생활이나 직업 교육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보상

o 보상 형태

- 연금 지급, 직업 교육 및 보충 교육 지원, 특별 손해에 대한 보상

라. 행정법상 복권

o SED 불법 청산을 위한 제 2차 법률에 따라 구동독 시절 이루어진 반법치국가적 행정 결정의 취소 및 원상 회복 조치

o 강제 이주 조치를 포함한 반법치국가적 행정 처분, 당사자의 건강·재산·직업에 침해를 가져 온 행정 처분 등은 취소

o 행정 처분의 취소에 따른 보상은 연방 원호법, 재산법, 직업 복권법의 규정에 따름.

3. 미해결 재산 문제 처리

가. 재산법에 따른 처리

o 미해결 재산 문제의 처리를 위한 기준은 1990. 6. 15 양독 정부간 미해결 재산 문제의 처리를 위한 공동 성명서에서 확정되었으며 이는 통일 조약 부속 문서 III에 수록되었음.

o 미해결 재산 처리의 기본 원칙

- 1949. 10. 7 이후 동독 영토에 있던 재산으로서 아무런 보상금없이 몰수된 재산이면 원소유자에게 반환
- 1933. 1. 30 - 1945. 5. 8 까지 나찌 폭정시기 강요성 재산도 반환할 것을 규정
- 1945. 5. 8 - 1949. 10. 7 (동독 건국)까지 점령법 또는 점령고권을 근거로 몰수된 재산은 반환 불가

o 전시용 문화재 및 예술품은 20년간 박물관에 전시된 후 반환

o 반환 원칙의 한계

- 소유권 반환이 사회적·경제적 또는 객관적 근거로 불가능하거나 현 점유자가 소유권 또는 물적 이용권을 정당하게 구입할 때는 반환 원칙 적용 불가능 (이 경우에 원 소유자에게 보상 청구권 부여)
- 재산권의 반환으로 인해 투자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통일조약 제 41조 2항에 따라 투자우선법 마련('92. 6.)

o 연방 미해결 재산 관리청 산하 6개주 관리청과 201개 지방 사무소 (직원 5,360여명)에서 반환 대상 재산의 소유권 확정 심사

- '94. 3월말 현재 124만명이 276만 건의 재산권 반환 신청을 했으며, 그 중 98만 7천여건 (35.7%) 해결 ('92. 12월말 24.5%)

- 소유권 반환 청구 처리의 지연은 한정된 행정 업무 처리 능력, 관계 규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피해 당사자들의 이해 부족,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과 불완전성에 기인

- 또한, 동독이 토지 개혁후 등기 서류를 폐기해 버렸거나 남아 있더라도 서독과 등기부 형식이 달라 소유권 확인에 큰 지장을 초래

나. 보상법에 따른 처리

o '94. 12. 1 과거 몰수 재산 보상 및 조정에 관한 법률(보상법) 발효

o 보상법은 권리자에게 재산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권리자가 재산 반환 대신 보상금 지불을 선택할 경우 권리자에게 보상금이 지불되도록 규정

o 총 보상액 규모: 180억 DM

- '45-'49년간 몰수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 126억 DM

- 구동독 거주 과거 실향민에 대한 일시 지원금 24억 DM (1인당 4,000 DM의 일회성 보조금 지급)

- 구동독지역 나찌 희생자 보상금 20억 DM
- 보상금을 신연방주에 투자할 경우 최고 20% 상당의 투자 보너스 지원금 10억 DM

o 총 보상금 180억 DM 중 110억 DM은 연방 예산에서 충당

o 보상금은 당사자에게 채권 형태로 지급, 2004년까지 연 6% 이자율을 적용, 누진적으로 계산하여 현금 상환

o 보상대신 재산 구입 선택 가능

- 해당 토지에 지상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한 구동독 이용권자 및 신탁청으로부터 농지를 장기 임차한 농업생산협동조합 (LPG) 후속 법인의 경우 최고 6,000 농지 단위까지 1935년 기준 시가의 1.5배로 구입 가능
- '45-'49년간 몰수 당한 재산에 대한 원소유주는 채권보상 대신 1935년 기준 시가의 3배 가격으로 3,000 토지 단위까지 구입 가능 (이 경우, 구동독지역 이용권자 및 차지인이 구입 우선권을 가짐).

4. 구동독 국가 보위부(Stasi) 문서 관리

o 구동독 국가 보위부는 약 600만 명에 대한 기록문 (178 Km)을 남겼는 바, 이를 관리·활용하기 위해 1991. 12. 29 국가보위부 문서 관리법을 제정하였음.

o 동 법은 정보 사항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자신 관련 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며 구동독 주요 인사들의 과거 Stasi 와 협력 여부 심사 등을 규정

o Stasi 문서 관리청(가욱 관청)에는 3,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94. 말까지 약 250만 건의 문서 관련 신청이 있었으며 그 중 182만 건이 처리되었음.

5. SED 독재 체제 잔재 청산 특별위원회 (Enquete-Kommission) 설치 ('92. 3. 12)

o 연방 하원에 국회의원 32명, 관계 전문가 11명 등 총 43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

o 동 위원회는 구동독 체제의 정치적·역사적 평가 및 청산 작업 수행

- 구동독 억압 체제에 대한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
- 체제 반대자에 대한 탄압 및 자의적인 권력 행사 사례 조사
- 내독관계 및 국제적인 상황 평가
- 반체제운동, '89년 평화 혁명, 독일 통일 문제 조명

o '94. 6. 17 최종 활동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한 후 해체

IV. 재정·경제 분야 통합

1. 화폐·경제·사회 통합 (제 1차 국가 조약)

2. 신연방주 재건을 위한 재정적 기초

   (통일 비용)

3. 신연방주의 경제 재건

4. 신연방주의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1. 화폐·경제·사회 통합 (제 1차 국가 조약)

가. 통일 이전의 동독 경제 상황

o 낮은 노동생산성 및 고도의 잠재 실업

- 80년대 말 생산성은 서독의 1/3 수준
- 1990. 7 동독의 잠재실업자 140만명 (ifo 추정치)

※ 경영합리화를 고려하면 300만명 추산

o 일방적인 대외무역정책과 불충분한 국제 경쟁력

o 주민들에 대한 물자 공급 상황 악화 및 개별 계층의 불이익

o 민간 기업 활동의 폐지 및 경제 구조의 중앙 집중화

o 능률 저해적 임금제도 및 왜곡된 가격 구조

o 노후한 자본 스톡 및 불충분한 구조 개혁

o 심각한 환경 훼손 및 환경 오염

- 동독의 1인당 CO_2 방출량은 서독의 2배

o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및 주택 정책의 실패

- 철도, 도로,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주택 부족

나. 화폐 통합

o 여행 외환 기금 : 통화정책적 협력의 시작

- 1989년 콜이 제안한 10개 통일 방안에서 처음 언급
- 전체 기금 규모는 29억 DM (동독 정부 7억 5천만, 서독 정부가 21억 5천만 DM 분담)
- 약 1,500만에 이르는 동독 주민들이 이 기금을 이용 (동독 주민이면 누구나 200 DM 수준의 지불 수단을 얻을 수 있으며, 100 DM은 1:1, 나머지 100 DM은 1:5로 교환)

o 신속한 마르크화 도입

- 처음에는 단계적 화폐 통합 모델을 마련했으나, 동독 해체의 가속화로 인해 신속한 화폐 통합 결정 (1990. 2. 7)
- '90. 7. 1 부터 서독 DM을 동독 지역의 법정 통화로 결정

o 교환율 결정

- 동독 주민의 임금, 봉급, 보조금, 연금, 집세, 임대료 및 기타 정기적 지급은 1:1로 교환
- 동독 마르크로 된 채권·채무의 교환율은 원칙적으로 2:1로 교환
- 동독외 거주자의 경우 '89. 12. 31 이전 예금은 2:1, 그 후 예금은 3:1로 교환

o 화폐 교환 차액 보전기금

- 1992년 말까지 동독 금융 기관들에 약 650억 DM 규모의 차액보전 청구권 분배

o 채무청산기금 (Kreditabwicklungsfonds) 설치

- 차액보전청구권 총 1,100억 DM 예상
- 1990. 10. 3자로 구동독 국가 부채 280억 DM
- 기타 대외 부채 청산 비용 20억 DM

o 구채무 변제기금 (Erblastentilgungsfonds) 설치

- 1994년 말 현재 구동독의 재정적 유산에서 생겨나는 부채 총 망라
- 채무청산기금 부채 1,400 DM과 2,750억 DM으로 추정되는 신탁청 부채 청산

o 동독 화폐 제도와 은행 제도의 개혁

- 통일 조약에 따라 독일연방은행을 동독 지역에 확대·적용 (15개 지점과 베를린 1개 관리소 설치)으로 1992. 10. 22 독일연방은행법 개정
-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는 1990. 4. 1자로 신설된 독일신용은행 (DKB)과 베를린 시립은행 (BSB)으로 이관

o 화폐 통합에 대한 잠정 평가

- 통화량에 미친 영향
  - 3,000억 동독 마르크가 1,820억 서독 마르크로 교환 (평균 교환율 1.65:1)
- 가격 변동에 미친 영향

- 자본 시장에 미친 영향

다. 경제 통합

o 사유 재산제, 자유 경쟁, 자유로운 가격 등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인력·자본·재화·서비스의 완전 자유 이동이 보장되는 공동경제지역 구축

o 내독간 거래에 서독 DM 사용

- DM 대차대조표법 적용

- 베를린 협정 ('51. 9. 20)에 의한 청산 결재 방식 폐지

o 동독은 GATT 의 제반 원칙에 부합되도록 대외거래제도 재편

o 환경 통합은 경제 통합의 범위에서 규정

라. 사회 통합

o 임금 협상의 자율성 및 노동 쟁의법 도입

- 서독의 임금 협상법 확대 적용

o 기업 헌장 및 공동 결정 확대 적용

o 해고 보호 및 노동 보호

o 각종 사회 보장 제도 도입

- 실업 보험,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상해 보험 등을 서독의 고용 촉진법, 연금법, 의료 보험법, 상해 보험법

에 따라 조정

o 사회 부조

- 1991. 1. 1. 서독의 연방 사회 부조법 확대 적용

마. 시장경제적 소유권 제도 부활

o 과거 인민 공유 재산의 귀속

- 통일 조약 21조, 22조, 신탁법 ('90. 6. 17),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90. 7. 6), 정당법 ('90. 2. 21), 재산귀속법 ('92. 8. 3) 등이 법적 기초가 됨.

- 약 1백만건의 재산권 귀속 신청 예상 (1993. 1/4 분기 현재 35만건 접수, 그 중 42% 처리)

o 동독의 정당 및 대중 조직 재산

- 구동독 정당 및 대중 조직 재산관리위원회 (UKPV)와 신탁청에서 담당

o 투자 우선 정책

- 소유권의 "원상 회복에 앞서 투자 우선" 원칙 확립

o 물권법 개정

- 부동산 소유권자와 이용권자 사이의 각종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시장경제적 부동산 거래 근거 마련

o 채권법 개정

- 지금까지의 양도 계약을 임대차 계약으로 대체

o 토지 등기부 제도 신속 처리

o 측량제도 도입

- 미분리 대지, 큰 토지 분할 등

2. 신연방주 재건 을 위한 재정적 기초

가. 통일 비용 추정

o 통일 독일 정부는 통일 비용을 공식적으로 산출, 발표한 적이 없으므로 통일 비용 산출은 관련 연구소, 전문가 등의 추정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환경 재건, 주택 현대화 비용 등 개별 연구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o 통일 비용은 신탁청 재정 적자액, 구동독의 대·내외 부채 지변 등 통일 관련 직접 경비와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o 공공 분야 및 민간 분야의 투자를 통일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으나 동독 지역을 서독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통일 비용으로 볼 수 있음.

- 민간 분야의 투자액을 계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독일 정부는 투자 촉진 조치에 따른 투자 보조금 신청 서류를 근거로 투자액을 추정하고 있음.

o 2,000년까지 10년동안 소요되는 통일 비용 (투자 포함)

은 약 2조 6천억 DM 으로 추정

- 구동독 부채 인수 등 통일과 직접 관련된 비용 : 5,150억 DM (24%)
- 구동독 재건 비용 (투자성) : 2조 1,280억 DM (76%)

* 구동독 지역의 실업 보험,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적자분은 각 기금에서 각출금 요율 조정으로 지원

통일 관련 직접 경비 (대사관 추정치)

(단위: 10억 DM)

o 신탁청 재정 적자액	270
o 채무청산기금 (KAF)	140
- 구동독 국가 재정 부채 약 300억 DM	
- 화폐교환시 차액보전 청구액 약 1,100억 DM	
o 구동독 주택 부문 부채	30
o 구동독 체제 희생자 복권·보상	20
- 형사 처벌자 보상: 20억, 미반환 재산 보상: 180억	
o 소련군 철수 비용	15
o 수도 이전 비용	40
합 계	515

신연방주 재건을 위한 투자 소요액 (1991-2000년)

(단위: 10억 마르크, 1991년 불변 가격)

o 고정 설비 투자액 (설비 투자 + 건설 투자)	1,000
- 500만 기존 피고용자를 위한 설비의 현대화	500
- 250만의 신규 고용을 위한 설비 투자액	500
o 주택 건설 투자	470
- 주택 600만호의 개량	120
- 1억 4천만 m2에 해당하는 주택 건설	350
o 환경 보호 투자	211
o 에너지 공급을 위한 투자	50
o 교통 부문 투자	210
o 우편·통신 부문 투자	60
o 동서독 지역간 교육 환경 격차 해소	70
o 농업 구조 개편 지원금	7
o 의료 시설 현대화	50
총 액	2,128

* 출처: Jan Piewe und Rudolf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en der deutschen
Vereinigung, (Frankfurt a.M., 1991), p. 123.

나. 신연방주 재건 관련 공공 재정 이전

1) 총 재정 이전 규모

o 신연방주 재건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재정이전에 두고 있음.

- '91-'94년까지 4년간 공공재정이전 총액은 6,400억 DM (약 340조원)이었으며 '95년에는 2,000억 DM (약 100조원)이 이전될 예정임.
- 신연방주로부터 연방이 거두어들인 조세 수입 등을 감한 순이전액만 해도 지난 4년간 약 5천억 DM 이었으며, '95년에도 1,550억 DM이 순 이전될 예정임.

o 총 재정이전금액과 공공재정의 실제 총부담액은 다름.

- 공공재정의 실제부담액에는 구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구 소련군에 대한 지출 등이 추가되어야 하지만, 통일로 인해 유발된 정부의 세수 초과와 분단지출금은 삭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재정이전액을 앞장에서 추정한 통일비용에 비추어 보고자 하면 사회보장지출을 고려해야 함.

신연방주 공공재정 이전 현황 (사회보장금 포함)

(단위: 10억 DM)

	1991	1992	1993	1994	1995
I. 총이전액					
연방 예산 1)	75	88	114	128	151
독일 통일 기금 2)	31	24	15	5	-
EC 3)	4	5	5	6	7
연금 보험 2)	-	5	9	14	14
연방 고용청 4)	24	25	15	14	14
구서독주/ 자치단체 5)	5	5	10	14	14
소 계	139	152	168	181	200
II. 연방 역수입액					
조세 수입	31	35	37	40	43
행정 수수료 수입	2	2	2	2	2
소 계	33	37	39	42	45
III. 순이전액	106	115	129	139	155

주: 1) 신연방주 및 지자단체에 대한 교부금과 신연방주에서의 연방 지출: 1995년부터 연방은 새로운 재정 균형 제도로 인해 350억 DM 상당의 세금 할당액 포기. 1994년은 예상치이고 1995년은 재정 이전 관련 연방 정부의 제 2차 계획에서 나온 수치임.

2) 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 연방과 주들의 보조금 제외

3) 평가치

4) 동독 총 결손액 (연방 예산에서 이미 재정이전으로 들어간 연방보조금 제외): 1991년도의 50억 DM이 1992년도에 포함되어 있음: 1994년은 연방고용청 예산: 1995년은 예상치임.

5) 1993년과 1994년에는 독일통일기금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음: 1995년에는 새로운 재형균형제도로 인해 세금 할당액이 포함됨.

* 출처: 연방수상실, Der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95. 3. 1.

2) 연방 예산

o 연방 정부는 '91년과 '92년 총재정이전액의 약 50%, '93-'94년에는 약 70%를 부담하였으며, '95년에는 75%를 부담하게 됨.

o 연방 정부는 '91-'92년 중 총 예산의 약 20%, '93-'94년에는 25%를 이전하였으며 '95년에는 31%를 신연방주로 이전하게 됨.

서독 연방, 주 정부, 기초 지자단체의 예산 현황

(단위: 10억 DM)

	1990	1991	1992	1993	1994
연 방	380	401	427	457	480
주 정 부	299	409	437	461	472
기초 지자단체	210	277	315	327	331
공공예산 총계	**889**	**1,087**	**1,179**	**1,245**	**1,283**
연방예산⇒신연방주 이전 규모	-	**75**	**88**	**114**	**128**

o 연방재정이전액이 신연방주에 지출된 내역을 보면 신연방 주 정부와 지자단체에 대한 교부, 동독 주민에 대한 직접 지출, 기타 구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 지출로 나누어 짐.

연방 예산 이전 지출 내역

(단위: 10억 DM)

	1992	1993	1994	1995
신연방주와 지자단체 예산 교부금	24.7	28.2	34.2	20.4
동독 주민에 대한 급부	35.7	50.6	49.6	47.0
기타 지출 (도로, 철도, 국방 등)	27.8	34.8	44.1	48.1
계	88.2	113.6	127.9	115.5

출처 : 연방수상실, 1995. 3. 1.

3) 독일 통일 기금

o '90. 5 연방과 서독 주정부는 신설주에 대한 재정균형화 원칙 적용을 1994년까지 유보하는 대신 독일통일기금을 마련, 지원키로 합의

- '90. 6. 25 「독일통일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 마련

o 독일통일기금 1,600억 DM 중 950억 DM은 자본 시장에서 기채를 통해 조달, 660억 DM은 연방재정보조금 (496억 DM), 서독주 보조금 (161억 DM)으로 충당

o 동 기금은 주민수에 비례하여 신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독일통일기금 조달 및 지출 내역

(단위: 십억 DM)

	'90 하반기	'91	'92	'93	'94	총 액
o 총 액	22	35	33.9	35.2	34.6	160.7
o 조 달						
- 예산	2	4	9.9	20.2	29.6	65.7
- 기채	20	31	24.0	15.0	5.0	95.0
o 지 출						
- 동독주 (60%)	-	21	20.3	21	20.7	83.2
- 지자단체 (40%)	-	14	13.5	14	13.8	55.4

* 1990년 지출 내역은 미상

4) 유럽 공동체에 의한 재원

o '91-'93년까지 EU는 신연방주를 위해 EU 구조기금으로부터 연간 약 20억 DM을 지원하고 약 25억 DM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했음.

- 이 재원은 인프라스트럭쳐 확충,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직업 교육 훈련 등에 사용되었음.

o '94. 1. 1.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은 EU 구조기금 최고 촉진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94-'99년간 총 140억 ECU (약 265억 DM)을 지원받게 되었음.

5) 사회보장비 지출

o 구동독 부흥을 사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대부분 사회보장비 재정에서 나옴.

o 연방 정부는 제 1차 국가 조약에서 이미 27억 DM의 구동독 지역 사회 보장금 지원을 약속했으며, 그 후 추가로 1990년 구동독의 모든 사회 보장 부문에 대해 138억 DM을 제공했음.

o 동독 지역의 사회보장제도가 확충 됨에 따라 서독의 사회보장비 지불 당사자들은 상당한 재정 부담 (4,000억 DM)을 갖게 되었음.

- 1991년 - 1996년 사이 서독의 연금 수입 중 580억 DM이 동독의 연금 지불에 사용됨.
- 동 기간 중 연방 고용청으로부터 2,000억 DM이 적극적인 노동 정책 및 실업자 생계비 보장을 위해 지출됨.
- 연방은 동 기간 중 1,450억 DM 연방 보조금을 조달하게 되어 있음.

o 이전 재원의 주된 조달 수단이 재정 차입(2/3)인데 반해, 이전액의 1/3 이상이 투자 목적이 아닌 사회 보장 등 소비성 용도에 지출되는 데 대한 비난 대두

- 그러나 사회보장비의 이전은 계획 경제를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임.

다. 구 부채의 처리

o 구동독 경제가 남긴 구 부채는 현재 약 4,400억 DM으로 추산됨.

- 신탁청 부채 2,750 억 DM
- 구채무 변제 기금 1,700 억 DM
  - 채무 청산 기금 1,400 억 DM
  - 구동독 주택부문 부채 300 억 DM

o 4,400억 DM의 총 부채는 자본 시장에서 새로 차입할 필요는 없음.

- 재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연간 300 억 DM 이상의 원리임.
- 이 부채의 이자 및 원금 상황은 1995년부터 연방이 떠 맡게 됨.

라. 통일 비용 조달을 위한 재원 확보

1) 재정 차입

o 콜 정부는 재정 이전액의 2/3을 재정 차입으로 조달

- 독일 정부는 특수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공채를 발행, 국내 자본 시장에서 재원을 조달
- 통일 공채와 강제 공채 등 특수 공채를 고려한 바 있으나, 채택하지 않음.

· 일반 공채보다 이자가 낮으므로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하며, 추후에 국민들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불만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큼.

·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 공채는 결국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됨.

o 연방 정부의 순 재정 차입액은 '89년 192억 DM에서 '94년 691억 DM으로 증가

- 공공 부문 (연방 정부, 주 정부, 신탁청, 연방 철도, 연방 우편 등) 총 부채 누적액이 '95년에는 2조억 DM을 초과할 전망

연도별 공공분야 순 재정 차입액 현황

(단위: 십억 DM)

	1991	1992	1993	1994	1995
연 방	52.0	38.6	66.2	69.1	69.0
구서독주	18.7	15.5	15.4	28.0	29.5
구동독주	11.4	16.2	20.0	22.0	9.5
구서독 자치단체	5.6	7.8	9	9.0	8.0
구동독 자치단체	6.2	5.9	5	3.0	2.0
유럽 부흥 기금	7.0	8.0	3.9	5.5	7.0
독일 통일 기금	31.0	23.6	13.4	3.5	-2.0
채무 청산 기금	-0.6	-0.5	0.1	0	-
구채무 변제 기금	-	-	-	-	-0.5
연방 철도 재산	-	-	-	6.0	-6.5
계	131.3	115.1	133.0	146.5	129.5
GNP 대비 (%)	4.6	3.8	4.5	4.5	4.0

* 출처 : 연방 의회 Drucksache 12/8227 (1994. 3. 4)

연도별 공공 부문 총 부채 누적액

(단위 : 10억 DM)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총액(10억 DM)	1,166.0	1,331.5	1,496.1	1,689.5	2,098.5
주민 1인당 부채 (DM)	14,500.0	16,400.0	18,400.0	20,800.0	25,800.0
GNP 대비 (%)	41.0	43.7	48.2	52.5	62.5

* 출처: 연방 의회 Drucksache 12/8227 (1994. 3. 4)

2) 국가 세입 증대

o 세금 및 사회 보장 보험료율 인상

- '91년 4월부터 실업보험료 2.5%, 연금보험료 1% 인상
- '91년 7월부터 1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7.5% 연대부과금 징수
- 석유세, 담배세 인상
- '93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14%에서 15%로 인상
- '93년 7월부터 보험세 10%에서 12% 인상
- '95년부터 7.5% 연대부과금 재 부과

※ '91-'92년간 연대 부과금과 간접세 인상으로 440억 DM 세수 증가

o 성장으로 인한 세수 증대

- 서독 경제는 '90-'91년간 통일 특수로 인해, 여타 선진국보다 늦게 불황 시작

- '91년 중 서독의 세수가 200억 DM 증가

3) 정부 지출 삭감

o 정부 지출 삭감은 재정 이전 재원 조달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연대 협약과 "절약, 건실화 및 성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o 연대 협약

- '93. 3 연방 정부, 16개 주 정부 및 여·야 정당 대표들간에 연방 재정 건실화를 위한 10개 원칙에 합의하고 동년 5월 연방 상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 제정

- '91. 7. 1부터 1년간 실시한 바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7.5% 연대 부과금을 '95. 1 재 도입: 매년 약 300억 DM 조달

  * 부과 기간 설정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은 계속 실시 입장이나, 사민당 및 경제 5현, 경제연구소 등은 한시적 실시 주장

- 사회 보장 혜택의 남용 방지 및 정부 지출 삭감

- 독일 통일 기금 해체에 따라 '95년부터 신설주에 대한 주 정부간 재정 균형 원칙의 확대 적용, 연방과 서독 주로부터 매년 520억 DM 이전

- 신설주 생산품에 대한 판매촉진 및 연방 철도 개혁 추진
- 주택 분야 과거 부채 해소 등을 위해 '구채무 변제기금' 설치 (연방은 310억 DM의 구채무 인수)
- 1993년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보장키 위해 20억 DM의 추가 지원
- 1993년 독일통일기금 37억 DM, 1994년 107억 DM 추가 증액

o 절약, 건실화 및 성장 프로그램

- '93. 12. 30 절약, 건실화 및 성장 프로그램 1, 2차 법률 제정
- 인력비 절감, 국방비 삭감, 임금 대체 지출, 예산 남용 근절책 등을 규정
- 1994년 210억 DM 절약, 1996년에는 250억 DM 절감 예정

4) 재원 조달상의 갈등

o 기채에 의한 조달은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부담을 가중시킴.

o 사회 보장 기여금 인상, 특소세 (휘발유, 담배) 및 부가가치세 인상, 연대 부과금 적용 등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 정의면에서 비난 대두

o 사화 보장비 지출을 포함한 정부 지출 삭감은 저소득층

에 불만을 가중시키며 지나친 긴축 재정 정책은 거꾸로 정부 재정 적자를 늘리는 결과 초래

마. 신연방주에의 민간 투자

o 민간 부문의 투자는 신연방주 재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o 뮌헨의 ifo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1991-1994년간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 신연방주에 투자한 총 투자 규모는 5,499억 DM 이며, 그 중 민간 부문에서 4,530억 DM, 공공 부문에서 969억 DM이 투자되어 민간 부문이 82%를 차지하였음.

o 한편, 금년에는 신연방주에 약 2,006억 DM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중 민간 부문이 85%인 1,715억 DM (이 중 서독 및 외국 기업 895억) 공공 부문이 350억 DM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 상세 내역 후술

3. 신연방주의 경제 재건

가. 신연방주 경제 발전 현황

o 국내 총생산 (GDP) 발전

- '90-'91년 통독 초기에는 생산의 감소가 있었지만 '92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94년에는 9.2%의 높은 성장을 기록 (유럽 최고)
- 동독의 1인당 생산성은 '91년 상반기 25.8%에서 '94년 상반기 50.3%에 도달, 현저히 개선되었음.
- 건설업과 판매·운수·서비스업이 초기 동독 경제 발전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공업 부문과 농림업이 경제 구조 전환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현재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실업률은 완만한 속도로 감소되고 있음 ('93년 15%, '94년 14.8%)

o 소비자 물가 상승은 '91년 12.8%에서 '94년 3%로 크게 안정되었음.

o 동독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90년 하반기 서독의 41%에 불과했으나 '94년 66.6%에 달했음.

o 동독 취업자 1인당 월 평균 소득 (임금과 봉급)은 '91년 1,820 DM (서독의 37%)에서 '94년 3,000 DM 으로 증가하여 서독 (4.100 DM)의 73%에 도달

o 동독 가계에 지불되는 사회보장비, 연금, 실업수당, 사회부조금 등 이전 자금은 '92년 930억 DM 으로써 동독 가계 가처분 소득의 38% 차지 (서독은 25%)

동·서독 지역 주요 경제 지표 비교

	구서독 지역				구동독 지역			
	1992	1993	1994	1995	1992	1993	1994	1995
GDP (십억 DM)1)	2,676	2,649	2,710	2,777	198	235	257	279
경제성장율(%)	1.6	-1.7	2.3	2.5	9.7	5.8	9.2	8.5
취업인구 (천명)2)	29,487	28,994	28,619	28,620	6,344	6,196	6,267	6,395
실업자(천명)	1,808	2,271	2,556	2,480	1,170	1,149	1,142	1,015
실업율(%)	5.8	7.3	8.3	8.1	14.8	15.0	14.8	13.1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	4.1	3.2	2.6	2.0	10.1	8.4	3.0	3.0
단위당 임금 비용(전년대비, %) 3)	-	3.3	-1.0	1.0	-	3.0	-0.5	-1.0

	독 일 전 체			
	1992	1993	1994	1995
GDP (십억 DM)1)	3,022	2,884	2,966	3,056
경제성장율(%)	2.1	-1.1	2.9	3.0
취업인구 (천명)2)	35,831	35,190	34,886	35,015
실업자(천명)	2,978	3,420	3,698	3,495
실업율(%)	7.7	8.9	9.6	9.1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	4.7	3.9	2.7	2.0
단위당 임금 비용(전년대비, %) 3)	-	3.6	-0.7	1.0

주: 1) 1991년 가격 기준

2) 국내 기준

3) 총임금비용/총생산량 (갯수, 생산 단위)

* 자료 출처 : 독일경제연구소(DIW),
독일 6대 경제연구소 '95 춘계보고서

나. 동독 부흥 (Aufschwung Ost) 전략

o 통독 직후 동독 경제 재건의 핵심 조치로서 1990년말/1990년초 동독 부흥 전략을 수립, 민간 투자 장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신탁청에 의한 민영화 등 제반 정책 시행

o 구동독 부흥을 위한 공동 대응책 ('91. 3. 8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시행

- 연방 정부 각 부처는 '91-'92년간 실업 해소, 교통, 주택 환경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총 244억 DM의 재원 투입

- 투자 보조금 및 50%의 특별 감가 상각을 누적적으로 사용 ('96년까지 연장)

- 지역 경제 지원 (Regionale Wirtschaftsförderung)을 통해 상공업과 인프라스트럭쳐에 145 억 DM 투입

o 민간 투자 장려를 위한 각종 조치 마련

- 투자 보조금법 ('96년까지 연장), 투자촉진법 ('95년부터 10년간 매년 66억 DM 확보)

- 산업입지안정법, 투자간소화법('93.5.1.), 연대협약 등
- 자기자본 지원 프로그램, 마샬플랜 융자 프로그램

o 투자 장애 요인 제거

- 통일 조약에서 "보상 이전에 반환 원칙"을 "반환 이전에 투자"라는 원칙으로 보완
- 행정망 정비 가속화
- 계획 및 허가 절차의 신속화
- 주택 건설 부문의 구 부채 탕감
- 환경 오염 잔재 처리 비용 부담

o 신연방주에 대한 투자 현황

- 뮌헨의 ifo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1991-1994년간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 신연방주에 투자한 총 투자 규모는 5,499억 DM이며 그 중 민간 부문에서 4,530억 DM, 공공 부문에서 969억 DM이 투자되어 민간 부문이 82%를 차지하였음.
- 분야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31%인 1,682억 (그 중 주택 임대가 63%인 1,061억 DM 차지), 제조업 역시 31%인 1,679억 (그 중 가공업이 53%로서 893억 DM 차지), 교통·통신이 16%인 902억 DM 등으로 나타나 주택 임대, 가공업 및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금년에는 신연방주에 약 2,006억 DM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중 민간 부문이 85%인 1,715

억 DM, 공공 부문이 350억 DM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 분야별로 보면 서비스 분야가 역시 789억 DM (그 중 566억 DM이 주택 임대 투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제조업 562억 DM (그 중 가공업 275억, 에너지·수도·광산 223억 DM), 교통·통신 288억 DM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됨.

신연방주의 분야별 투자현황 (1995. 1. 현재)

(단위: 10억 DM 1))

분 야	1991	1992	1993	1994	1995
농림업	0.95	1.10	1.30	1.50	1.80
제조업	32.45	41.10	45.20	49.20	56.20
- 에너지/수도,광산업	10.35	14.15	17.00	19.10	22.30
- 가공업 2)	18.50	22.50	23.70	24.60	27.50
- 건축업	3.60	4.45	4.50	5.50	6.40
무 역	4.35	5.30	5.70	6.00	5.80
교통·통신	16.15	22.50	24.90	26.70	28.80
서비스업	23.70	34.60	46.90	63.40	78.90
- 주택 임대	15.90	23.90	31.40	44.90	56.60
- 기타 서비스업 3)	7.80	10.70	15.50	18.50	22.30
기업 투자 합계	77.60	104.60	124.00	146.80	171.50
국가 공공기관 투자	14.90	23.30	26.50	32.20	35.00
총 투자 합계	92.50	127.90	150.50	179.00	206.50

1) ifo 평가치
2) 주유소 설치 포함
3) 은행·보험 포함

* 출처 : ifo, 연방 통계청

- 동독 주민 1인당 투자 비율도 1993년부터 서독을 능가하기 시작했음.

서독 대비 동독 주민 1인당 민간 및 공공 투자 비율

(단위 : %)

	1991	1992	1993	1994
전 체	66	89	114	133
민 간	62	82	108	128
공 공	97	142	161	171

* 출처 : 연방 경제성 자료 ('94. 9. 14)

o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후술)

o 구동독 기업의 판로 지원

o 노동 시장 정책 및 지역 정책을 통한 지원

다. 신탁청에 의한 기업의 민영화 및 정비

o '90. 6. 17 동독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신탁청은 통일 조약 25조에 수용되어 동독 ,지역의 신속한 사유화, 기업 정비 및 청산 임무 수행

- 신탁청은 신연방주의 또 하나의 정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 행사

o 1994. 12. 31 해체되기까지 신탁청이 사유화시킨 기업은 14,576개, 일자리 창출은 약 150만 개, 투자 유치는 2,000억 DM에 달했음.

o 그러나 4년간 신탁청은 지출 3,490억 DM, 수입 740억 DM으로 2,750억 DM의 부채를 남겼음.

- 주요 지출 항목은 구채무 인수와 그 이자 부담 1,050억 DM, 기업 관련 환경 오염 정비 440억 DM, 투자 보조금, 자기 자본 확충, 손실 보전 대부, 사회 보장 목적의 증여 등 신규 자본 공급 1,540억 DM, 신탁청 후속 기관이 부담할 부채 450억 DM 임.

o 신탁청 해체후 후속 기관은 3개로 대별됨.

- 신탁후속연방특별관리청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 BVS)

  · BVS는 75,000 여개에 달하는 사유화 계약 이행을 감독하고 15,000건 이상의 재사유화 처리 등을 담당

  · BVS 관할하에 임야와 농지를 매각 관리하는 토지 매각관리회사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 GmbH, BVVG)와 정보서비스회사 (DV-Informationssysteme, Organisation und Service GmbH, DISOS)가 있음.

신탁청의 활동 실적

o 1990. 7. 1 출발 당시
- 인수받은 기업 13,799개, 고용자 410만명
- 농경지 167만 헥타, 임야 201만 헥타
- 소매업 및 요식업 4만개
- 신탁부동산회사 (TLG)에의해 처분될 부동산 122,000개 (그 중 57,000개는 주택)

o 1994. 12. 21 현재 처리 실적
- 기업 사유화 14,576개
- 기업 청산 (청산 완료 및 진행 중 포함) 3,713개
- 기업 매각 수익 649억 DM
- 일자리 창출 1,487,000개
- 투자 유치 2,065억 DM
- 부채 2,750억 DM

o 남은 과제
- 사유화해야 할 기업 268개 (그 중 108개는 매각 예정), 고용자 90,597 명
- 농경지 396,480 헥타, 임야 184만 헥타
- TLG 에 의해 처분되어야 할 부동산 63,400

o 신탁청 관련 소송 진행
- 신탁청이 제소한 것 814건
- 신탁청이 제소당한 것 868건
- 중재 재판 6건

* 출처 : Welt, 1994. 12. 31

- 경영참가회사 (Beteiligungs- Management Gesellschaft Berlin mbH, BMBG)

  BMGB는 사유화되지 않는 신탁청 기업을 사유화하는 업무 수행

- 신탁청부동산회사 (Liegenschaftsgesellschaft der Treuhandanstalt mbH, TLG)

  TLG는 1991년에 이미 설립되었으며 신탁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임야와 농지 이외의 부동산 사유화 업무 지원

라. 구동독 지역 생산업 부문별 발전

o 구동독 지역 생산업의 발전은 주로 건설업 및 건설 관련 업종에 기인하고 있음.

- 특히 공공 건설 부문

o 제조업은 판로 상실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

- 다만 건설업과 관련되는 석재 및 토재 산업, 철강 및 경금속 산업은 다소 호황을 누리고 있음.
- 민간 소비로 이익을 누리는 식품 및 기호품 산업은 크게 회복되었음.

* '95년부터 제조업과 무역업이 건설업 및 서비스업보다 호전될 전망

o 동독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단위당 임금 비용

(Lohnstückkosten)이 서독보다 두 배나 높은 점임.

마. 중소기업 육성

o 연방 정부는 중소 기업의 창업 및 기업 안정화 지원, 기업 현대화 투자 및 상담 지원, 정보 제공 및 직업 교육, 판매 지원 등을 통해 동독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94. 10월 말 현재 동독 지역에는 약 46만개의 중소 기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고용된 근로자는 320만 명에 이름.

o 수공업: 14만 업체에 120만 명 종사

o 공업 부문의 중소 기업

o 서비스업

o 판매업

o 관광업

o 자유업

바. 에너지 산업

o 갈탄 산업의 구조 조정

o 전력 공급 및 지역 난방 공급

o 가스 공급

o 석유 산업

사. 주택 및 건설 부문 혁신

o 주택 부문의 소유권 관계 확인

- 동독 지역 구 인민 소유 주택 중 30%는 소유권 관계 불명

o 임대료 개혁

- 임대료 인상 ('91. 10. 1 제 1차 기본 임대료 인상 규정 및 '93. 1 제 2차 기본 임대료 인상 규정)을 통해 주택 관리 및 보수 강화

o 주택보조금 도입

- '91. 10. 1 주택보조금법 특별법 제정
- 임대료 인상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정의 보조금 지급

o 주택 건설 장려

- 주택 건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세제 지원 등 실시

o 구 채무 문제 해결

- 주택 기업들의 채무 탕감을 통해 투자력 강화

o 주택 민영화 추진

- 전체 민영화 대상 주택수는 100만호 가량됨

o 주택난 해소

- 사회복지 주택 건설을 통해 주택난 해소

o 시장경제적 건설 하청제도 도입

- 1990. 건설 수주 할당 규정 (VOB) 마련

o 건물의 에너지 절약 및 유해 물질 방출량 감소 대책 수립

아. 농업 구조 조정

o '91. 7. 3 농업 구조 조정법 제정으로 농업 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 기초 마련

o 소유권 및 재산권 문제 해결

- 재산법, 보상법에 따라 처리

o 농업 구조 변경

- '90. 7. 1. EC 농업 시장에 편입
- 단일 기업농, 작은 규모의 협동 조합, 사단 법인, 재단 법인 형태로 전환
- '94. 말 현재 22,500명의 독농가, 약 2,400개의 농업 협동 조합, 2,800개의 농업 관련 기업체가 생겼음.

4. 신연방주의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가. 교통

o 동·서독 경계선 개방 이후 긴급 조치

- '90. 1. 9 동서독 교통위원회 가동, 끊어진 도로/철도 연결 및 복구 계획 수립

- 연방 정부는 이를 위해 30억 DM 지원

o '91. 12. 교통 도로 계획 촉진법 및 투자조치법을 통해 교통 인프라스트럭쳐 확충을 위한 법적 기초 마련

o '92. 7. 연방 교통로 계획 1992 (BVWP '92) 의결

- 동·서 경제 중심지 간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4,930억 DM 투입 예정

o 철도 교통

- 9대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 중 선로 공사는 '94년 말까지 350 Km 완공 상태

- '94. 1. 1부로 독일 연방 철도와 구동독 제국 철도를 3개의 철도 주식 회사와 1개의 특별 재산으로 전환

o 연방 장거리 도로

- '90-'94년까지 신연방주에는 약 850 Km에 달하는 연방 고속 도로와 약 7300 Km에 달하는 연방 도로가 보수·신설·확장되었음.

o 연방 수로 확충

o 공공 근거리 여객 교통 운영 개선

o 항공 교통

- 동독 지역 4대 공항인 베를린, 라이프찌히, 드레스덴, 에어푸르트 공항 보수에 집중 투자

o 해상 교통

- 메클렌부르크-포어퍼메른 주의 3대 항구인 로스톡, 비스마르, 슈트랄준트 항구 보수

o 도로 교통 안전 대책 수립·시행

- 교통량 급증에 따른 대기 오염, 사고 빈발 등에 대처

나. 통신

o 통일 당시 동독 전화망 상태

- 전화선 100 가구당 11회선 또는 100인당 7회선 (서독은 100가구당 92회선 또는 100인당 42회선)
- 동독 전화 보급 대수 총 180만대 (서독 2,900만대)
- 전화 설치 신청후 대기 기간 20년
- 수동식 전화 연결시 대기 시간 10시간

o '90. 1. 독일 텔레콤 주식회사는 "Telekom 2000" 계획 수립

- '97년까지 동독 통신 수준을 서독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으로 600억 DM 투자, 9만개의 일자리 보장
- '89년 180만 회선이던 전화 회선 수는 '94. 11 까지 약 500만선에 도달했음.
- '97년 말까지 전화 회선 수는 서독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전화 보급률은 95%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그 외 공중전화기, 팩스, 이동 전화, 데이타 통신, 케이블 TV 회선 등 설치

o Telekom 직원 3,000명을 동독에 파견, 지원

다. 우편

o '90. 10. 3 구동독 독일 우편 (DP)이 독일 연방 우편에 편입되었음.

- 당시 우편 부문 종사자 88,000명, 영업소 수는 8,500개였으며, 동독 체신 기업은 서독보다 30-40년 뒤떨어졌음.

o '94년 말 현재 동독 지역에는 17개의 우편 센타와 8개의 소포 센타가 신규 설치되었음.

o '94. 5 로스톡라게 공항을 항공 우편망에 연결시킴으로써 우편 배달 시간 단축

라. 환경 보호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o 상수도 신설

o 하수 처리

o 쓰레기 처리

마. 도시 건설 및 지역 개발

o 건축법상 신연방주 도시 건축을 위한 법규 적용 완화

o 도시 재정비 응급 프로그램 시행

o 도시 건설 관련 기념물 보호 프로그램 마련

o 도시 건설 관련 연구 및 자문

o 지역 개발법에 따라 모든 지역의 생활 수준 동등화 추진

V. 노동·사회·환경 분야 통합

1. 노동 분야

2. 사회 분야

3. 환경 분야

1. 노동 분야

가. 임금협약 자율권 및 근로 조건

o 구동독 노동법에는 단체 노동권 (결사의 자유, 임금협약 자율권, 노동쟁의권)이 없었음.

- '90. 7. 1 제 1차 국가조약에 따라 동독은 단체 노동권 인정

o 통일과 더불어 구동독의 자유독일노조연합 및 노동 조합이 해체되고 서독의 노동조합들이 그 범위를 동독 지역으로 확대했음.

o '91년 말 단계별 임금조정협약을 체결, 서독과의 임금수준 조정 시도

나. 해고 보호

o 제 1차 국가 조약으로 서독의 해고 보호법이 동독에까지 확대·적용되었음.

다. 노동 보호

o 통일 조약에 따라 서독의 법규와 제도 확대 적용

- 서독을 모델로 한 노동보호기관 설립

o '91. 1. 1. 연방노동사회부는 베를린에 연방 산업의학청을 설립

라. 근로자의 참여권 보장

o 기업 헌장

- 제 1차 국가조약에 따라 서독의 기업 헌장을 동독 지역에 적용
- '90. 10. 3 까지 각 작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체 선출

o 기업의 공동 결정

- 근로자들과 기업간의 이해조정에 중요한 역할
- 제 1차 국가조약에 따라 서독의 각종 공동 결정법 확대 적용

마. 신연방주 노동시장 현황

o 대규모 고용 감축

- '89년 약 990만명이던 구동독의 총 취업자 수가 '92년에는 630만 명으로 줄어 들었음.
- '89년 말 약 13만 명이던 외국인 근로자도 '92년 말까지 이들의 약 90%가 조기에 귀국

o 대규모 실업 발생

- '90. 6. 화폐통합 직전 구동독 지역의 등록 실업자는 14만 명이었으나, '90. 12 에는 64만 명으로 늘어났고

단축노동자 특별 구정이 만료된 '92년 초에는 130만 명으로 늘어났음.

-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실업률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지만 '94년 말까지도 동독 지역 실업율은 14.8%로써 서독의 8.3%에 비하면 거의 두 배나 높은 편임.

- 특히 여성들의 경우, 구동독 시절에는 80% 이상이 직장을 갖고 있었지만, '93. 7에는 동독 전체 실업자의 64.4%를 차지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는 바,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 고용 비율이 높은 업종들이 구조 조정을 겪거나 여성들의 기동성 부족에 기인함.

- 또한 신연방주에는 '94년 말 현재 33만명의 장기 실업자 (이 중 약 25만명이 여성)가 있는 바, 연방 정부는 앞으로 4년간 40억 DM을 투입하여 이를 극복하려고 함.

- '89-'92년간 360만명이 직장을 잃은 점을 감안하면, 130만 명이라는 실업자 수는 오히려 양호한 편인 바, 이는 각종 적극적 노동정책으로 실업을 완화하는 한편 서독 지역으로의 이주와 통근 노동이 가능했기 때문임.

신연방주 노동시장 현황

	실업자	단축 노동자	직업 훈련 참가자	ABM 고용자	조기 퇴직 연금 수령자	고용 촉진법 에 따른 고용자
'90. 6	142 100					
'90. 7	272 000	656 300				
'90.10	536 800	1 703 800		8 400		
'90.12	642 200	1 794 000		20 300		
'91. 1	757 200	1 840 600		34 400		
'91. 4	836 900	2 018 900	210 400	84 900	499 500	
'91.12	1 037 700	1 034 500	435 200	389 900	657 900	
'92. 1	1 343 400	520 600	438 000	394 100	771 600	
'92.12	1 100 800	233 400	479 600	354 700	834 500	
'93. 4	1 117 900	231 200	432 700	274 300	877 700	7 600
'93. 7	1 166 500	155 300	378 600	198 300	847 600	24 800
'94.12	1 014 620	58 896	280 675	225 541	488 895	103 026
'95. 2	1 107 237	85 096	259 216	217 127	420 972	99 843

* 출처 : 연방고용청

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추진

o '90. 7 제 1차 국가 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서독의 고용촉진법 확대 적용

- '93. 10 부터 연방노동청 (BA)이 산하 노동 관청과 더불어 고용촉진법에 의한 노동시장정책 수단 시행

o 단축 노동자 보조금 지원

- 단축 노동자 보조금 특별 규정에 의거 '91. 12. 31까지 해당 근로자의 단축 조업을 통한 일자리 보존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단축 노동자 보조금 지불

- '90-'91년 기간 중 고용 감축을 억제하는데 큰 기여를 했음. ('91. 4월 200만명 ⇒ '92. 1월 52만명)

o 조기 퇴직 조치

- 고연령층의 장기적 실업상태 면제 및 젊은층의 고용 기회 부여

- '93. 7 기준 20만명에 이르는 조기 퇴직 연금 수령자들과 64만명의 노인 과도기 연금 수혜자들이 퇴직하였음.

o 고용 창출 조치 (ABM)

- ABM 시행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회, 사회복지단체 등이며, 이 시행자들은 연방노동청으로부터 임금 코스트의 최고 75%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ABM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귀중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였는 바, '92. 1에는 거의 40만명이 이 혜택을 받았

음.

- '92. 12. 31 ABM 지원이 만료됨에 따라 ABM 조치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여 '93. 7 현재 20만 명임.

o 동독 지역 고용촉진조치 (Arbeitsförderung Ost: 고용촉진법 249조 h항)

- '93. 1. 1부터 실시된 것으로 환경 보호, 사회봉사, 청소년 선도 분야 등에 고용 기회 부여

- '94. 8 현재 9만 6천명이 혜택

o 직업 훈련 조치

- 유휴 노동력이 많은 조선, 전자, 화공, 광업 분야에 집중

- '91년 중 직업 훈련 조치 참가자는 연평균 28만명, '92년 49만명, '93. 7 에는 38만명이었음.

o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91년 295억 DM, '92년 406억 DM, '93년 412억 DM 이었음.

2. 사회 분야

가. 기본 원칙

o 국가 조약 및 통일 조약은 서독의 사회 보장 제도를 신연방주에 확대 적용키로 결정

- 이에 따라 동독 지역에 실업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의료 보험 제도 및 사회부조기관 구축

나. 노후 보장, 취업 불능시 보장

o '92. 1. 1부로 독일 전역에 동일한 연금법 적용으로 연금 수혜 연령, 유가족 후생 복지 및 연금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63세부터 (구동독 시절 65세) 연금 수혜, 15만 명의 미망인들이 월 270 DM의 유가족 연금 혜택
- 신설주의 기준 연금 (평균 소득자가 45년간 보험금을 지불한 경우)은 화폐 통합시 672 DM (서독의 40.3%)에서 '95. 1. 1부터 1,484 DM (서독의 77%)으로 2배 이상 인상

  * '94. 7 부터 거의 서독 수준에 도달 (남자 86%, 여자 128%)

o '91. 1 부로 연방사회부조법을 도입, 생계 보장 및 특별한 상황에 대한 지원 가능

다. 질병 보장

o '91. 1. 1부로 법정 의료보험의 법률적 기초인 사회법전 (SGB) V가 신연방주에도 확대 적용

o 보건구조법을 통해 법적 의료 보험의 안정화 및 병원 구

조 개선 도모

- 1995-2004년 동안 연간 7억 DM을 병원 부문에 투자
- 동·서독간 경제 상태 평준화 시기까지 신·구연방주를 구분하여 수입·지출 계산 ('93년부터 동독은 흑자)

o 구동독 시절 질병시 생계 보장제도는 질병 6주간 사용주가 계속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대체

라. 간병에 대한 보장

o 신연방주에는 현재 1,400여개의 양로원에 14만개의 자리가 있는 바, 이 중 9만-10만개는 간병 대상 자리임.

마. 상해 보험 제도

o '92. 1. 1부터 단일한 상해 보험법 적용

바. 전쟁희생자 원호 대책

o '91. 1. 1 연방 원호법 확대 적용

사. 사회 부조

o '91. 1. 1 연방 사회 부조법 확대 적용

아. 보건제도 재편

o 외래 의료 서비스 및 치과의료 서비스

- 구조 조정 과정에서 개인 병원 운영 급증 ('90년 말 10% ⇒ '91년 초 30%)
- '92. 12 현재 사회법전에 근거한 신연방주의 외래 병원은 315개, 의사는 1,081명임.

o 입원 치료

- 신연방주의 입원 치료를 서독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1995-2005년 기간 중 연간 7억 DM 투자

o 정신병 치료

o 의약품 공급

- '94. 12. 현재 신연방주에는 2,250개의 민간 약국 설립
- 신연방주의 약제 산업은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양호한 상태

o 공중 보건 서비스

o 건강 보호

-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생필품 감독기관 확충 (생필품법)

o 장애자 재활 및 적응

- 의료 재활
- 장애자 직업 적응

자. 민간 사회복지 단체 구축 지원

3. 환경 분야

가. 환경법 도입

o 통일 조약은 구동독이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연방환경법을 수용하도록 했음.

- 환경법 수용과 더불어 6대원칙 수립

o '90. 10. 3 통일 시점부터 구동독에는 원칙적으로 유럽연합의 환경법 적용

나. 환경 정화 정책

o 2,000년까지 동·서독 지역 환경 수준 평준화 목표 설정

o 환경 보호 긴급 조치, 시범 프로젝트 및 오염 정화 연구 등을 시행

- 1993년 연방환경부 예산으로 1,860개 환경 보호 조치에 16억 DM 투입

- 환경 오염 해소 투자 계획에 의거, 1991-1993년간 28개 시범 사업에 3억 6천만 DM 투자

o 효율적인 환경 인프라스트럭쳐 확충

- 향후 10-15년간 1,000억 DM의 민간 자본을 유치

- 수질 정화 시설, 하수 처리장, 특수 폐기물 적치장 건립

o 방사능 오염 제거를 위해 '90년 이후 우라늄 채광 중단,

우라늄 채광에 따른 환경피해지역 1,500평방 킬로미터에 대한 탐사 실시 (1996년 종결)

o 소련식 핵 발전소 6기와 건설 중인 3기 중단.

o 갈탄 채광지역을 포함한 약 8만여 개의 토양오염지역 정화

o 환경 오염 잔재 해소 충당 방안에 관해 연방 정부와 구 동독 주 정부간 행정 협약 합의 ('92. 10)

o 환경 정화의 효과

- 엘베강 수은 오염은 '85년 28톤에서 '93년 1.9톤으로 줄어 듬.
- CO_2 배출량은 '87년 34억톤에서 '93년 17억톤으로 감소
- 일산화탄소 방출량은 '87년 405만톤에서 '91년 270만톤으로 감소
- 아황산 가스 오염은 '87년 545만톤에서 '91년 355만톤으로 감소
- 분진 방출량은 '87년 250만톤에서 '91년 135만톤으로 감소

다. 현대적 환경 기술의 축적

o Leipzig/Halle 환경연구센타 (UFZ)가 현대적 환경 기술 본부 역할, 각종 환경 연구 지원

VI. 기타 분야 통합

1. 교육·학문·연구 분야

2. 가정·여성·청소년·노인 분야

3. 문화·언론·스포츠 분야

1. 교육·학문·연구 분야

가. 초등 교육 및 직업 교육 분야

1) 초·중·고교 제도 개편

o 학교 제도 정비의 기초는 통일 조약에 따라 마련된 함부르크 협약과 문교장관 회의 (KMK)의 기타 관련 합의들임.

o 통일 조약에 따라 '91. 6. 30 까지 각 주의 초중고교 제도 정비 및 학교법 마련

- 통일 조약에서 동독 지역내 학교 제도는 각 주의 결정에 일임하였는 바, 튀링엔 주는 동독 제도 유지, 메클렌부르크-포어퍼메른 주는 서독 제도로 전환했으며 3개주는 절충 형태를 취했음.

- 의무 교육 기간은 함부르크 협약에 따라 9년으로 확정 (브란덴부르크 주만 10년)

- 동독에서 12년 수학 후 취득한 고등학교 졸업 증서를 '96년까지 과도기적으로 인정

o 구동독 출신 교원들은 일단 전부 임용한 후 자격 심사 실시

- 주요 보직 교원 (교장, 학장 등)부터 심사

- Stasi 에 대한 협력 여부가 주요 고려 요건

- 교장 등 관리직 교사는 대부분 교체하되, 구동독지역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구동독 출신으로 임용

o 잔류 교사 재교육 실시

- '92. 6 문교장관회의에서는 구동독 교사들을 대상으로 2-3년간 자유 민주정치, 법률, 시장경제 등에 관한 정치 교육 실시 결정

2) 직업 교육

o 직업 교육 체계 재구축

- 통일 조약 발효 후 서독의 직업 훈련 관련법 확대 적용 (직업교육법, 수공업 규정)
- 각종 직업 교육 지원 프로그램 실시
- 우수자 장학제도 실시
- 장애자 지원
- '91. 3. 직업 학교에 관한 문교장관회의의 합의를 기초로 신연방주 직업학교제도를 학교 법률에서 규정
- 연방 교육부는 중소기업의 직업 훈련을 장려하기 위해 신연방주에 초기업적 직업 교육기관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시행
- 동독 지역 직업 교육 인력 자격 부여 프로그램 (PQO)으로 직업 훈련 담당관들의 적응 능력 향상
- 경제계 및 직업 학교간 기술 전수 및 모델 연구

o 구동독에서 취득한 직업 교육 자격증 인정

- 통일 조약에 따라 신연방주에서 취득한 직업 훈련 자격증은 모두 유효 (서독과의 동등성 여부는 각 해당 관청이 확인)

- '93. 5 문교장관회의는 구동독의 전문학교 졸업이 서독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

o 직업 재교육의 장려

- 구동독의 급격한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약 400만 명의 취업자들이 직업 재교육을 통해 보완받아야 했음.

- 연방 노동청은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직업 보충교육 및 전환교육을 지원

3) 평생 교육

o 신연방주 주별로 평생 교육에 대한 입법 마련

o 연방 교육부는 시민 대학 (Volkshochschule)의 프로그램을 현실화하고 보충

나. 고등 교육 분야

o 통독 당시 구동독에는 54개 대학, 13만 여명의 대학생, 10만 여명의 대학종사인력이 있었음.

o 대학의 방향 전환

- 통일 조약 38조는 학술원 (Wissenschaftsrat)으로 하여금 신연방주의 학문과 연구에 필수적인 개혁안 준비 지시

- 각 주들은 통일 조약 및 학술원의 권고를 기초로 대학 개혁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91. 7. 대학 및 연구를 위한 공동 개혁 프로그램을 기초로 대학 인력 개혁, 학문 잠재력 보호, 학문과 연구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을 위한 긴급 조치 실시 (24억 DM 투입)

- 통일 조약 37조에 따라 구동독에서 취득한 대학 졸업 자격은 계속 유효

o 대학 개혁 현황

- 현재 신연방주에는 15개 종합 대학, 21개 공립 전문대학, 12개 예술대학 및 1개의 교육대학이 있음.

- 대학 신입생 수는 '89년 32,300명에서 '90년 39,500명, '92년 34,300으로 늘어났음 (2000년 경에는 통일 당시의 두 배로 증가 예상).

다. 연구·기술 분야

o 통일 조약 38조에 따라 중앙집권적 동독 연구 체제 해체, 구조전환 실시

- 독일 연방 학술원은 '91. 12 말까지 구동독 과학 아카

데미 소속 연구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면서 연구·기술 정책에 대한 권고안 마련

- 학술원의 권고에 따라 연방 정부는 신연방주 정부와 함께 연구기관 구조 전환 및 신 연구기관 설립 절차 확정

o 구동독 아카데미 학자들은 인력 선발 절차를 거쳐 새로 설립한 연구기관에 편입시킴.

o 연방과 주들은 동독지역에 총 140개의 연구기관 설립

- 13,000개 일자리 창출

2. 가정·여성·청소년·노인 분야

가. 가정 분야

o '91년 현재 독일의 가정수는 약 940만, 미성년 자녀수는 약 1,530만 명임.

- 그 중 신연방주 가정수는 약 230만, 미성년 자녀수는 360만 명임.

o 가정 정책의 2대 지주는 부모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과 가정의 수요에 따른 급부 제공임.

o 자녀 양육비

- 신연방주에서는 '91. 1. 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녀 양육비 제공

o 자녀 수당

- 자녀 수당은 16세 까지의 모든 어린이에 해당되며, 신연방주에는 '91. 1. 1부터 적용
- '92. 1. 1 부터 인상된 자녀 수당은 첫째 70 DM, 둘째 130 DM, 셋째가 220 DM 등임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은 둘째부터 70 DM).

o 생계비 보조

- 자녀가 있는 독신 양육자는 생계비 보조법 (UVG)에 따라 생계비 보조 (신연방주는 '92. 1. 1부터 적용)
- '93. 1. 1부터 청구권 있는 자녀의 최고 연령은 11세

o 임신부를 위한 지원 기금 마련

o 가정 지원 사업 촉진

- 가정 지원 단체 구축 (독일 가정지원단, 신교 가정 문제 해결공동체, 독일 카톨릭 가정지원단, 독신부모협회)
- 임신 상담망 구축
- 가정 상담 및 가정 교육 지원
- 다기능 가정 센터 설치
- 가족 휴식처 제공
- 산모 요양 자리 마련

나. 여성 분야

o 통일 조약 31조는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계속 추진 규정

o 여성의 직업 기회 확대

- 현재 신연방주 여성의 2/3는 실직자이며, 이는 남성 실직자의 두 배임.
- 고용창출대책 (ABM), 직업전환교육, 적응교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여성의 직장 생활 재개 지원
- 직업 관련 상담 실시

o 가정과 직장 생활의 병행 지원

- 산모 보호 ('91. 1. 1. 산모보호법 도입)
- 독신 양육자 지원 ('91. 4. 현재 신연방주의 독신 양육자는 564,000명임)
- 탁아 제도
- 노후 보장
  - '93. 7. 현재 신연방주 여성의 평균 가처분 연금 수령액은 매월 950 DM으로 '90. 7 보다 2배 증가 (구서독 여성은 평균 매월 757 DM)

o 각종 여성단체 설립 지원

o 여성 보호소 설립

다. 청소년 분야

o '90. 10. 3 청소년 지원법을 기초로 하여 공공 및 민간의 청소년 지원 구조 구축

- 신연방주 자율 단체에 의한 청소년 지원 구조의 구축과 확충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 (AFT)를 통해 '92년부터 지역별 청소년 사업 시행

o 청소년들의 의식 긍정적 발전

- '93. 구동독 청소년의 83%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 71%는 서독식 정치 제도 도입에 만족했음 (IPOS, Mannheim 1993).
- 동서독 청소년의 90%는 민주주의 사상 지지
- 구동독 청소년들이 구서독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가정 중심적임.

라. 노인 분야

o 통일 독일에서 70세 이상되는 노인 (이 중 2/3는 여성)은 약 800만명, 그 중 650만 명은 서독, 150만 명은 구동독에 살고 있음.

o 통일조약 32조에 따라 자율적 사회복지단체 연합회가 신연방주의 도시 노인 지원 상담

o 양로원 및 간병 양로원 보수·신축 지원

o 외래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원 구축

- 현재 약 800개의 공인된 복지원 운영

o 노인 자체 구제 단체의 설립 지원

- '93년 중 32개 노인 사무소 설립

마. 병역 대체 사회 봉사 근무 제도 시행

o 통일 조약에 따라 구서독의 병역 대체 사회 봉사 근무법 확대 적용

3. 문화·언론·스포츠 분야

가. 문화 분야

o 통일 조약 35조에 의거 연방 정부는 '90-'91년간 신연방주 문화 부문에 과도기적 재정 지원

- 원형 보존, 기념물 보호, 문화 간접 시설 확충에 투입

- '91-'93년 연방 정부는 32억 DM 지출

o 통일 조약에 따라 문화 시설물들은 대부분 시 또는 지자단체에 이관

o 범국가적 의의를 지닌 문화재 지원

- 프로이쎈 문화 관리 재단과 베를린 축제 회사

- 연방은 라이프찌히 바하(Bach) 문서고, 데사우 건축학교 등 신연방주의 문화재에 직접 지원

- 영화 부문의 보존·발전 지원

o 동·서독 도서관을 합병하여 독일 도서관 설립

o 문서보관소 관리

- 통일 조약에 따라 연방문서보관소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가 기관에서 생겨난 문서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존

- '93년부터 "동독 정당 및 대중 조직 문서 보관소 재단" 활동 시작

o 문화재 반환

- 러시아, 폴란드와 협의

o 교회를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

- 연방 내무부는 동독 교회 보수를 위해 매년 8천만 DM 지원

나. 언론 분야

o '91. 8. 동서독 지역 모든 주 수상들은 통일 독일의 라디오 방송에 관한 국가 조약에 서명

- 구 동·서독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송법 창출

o 도이취란트 방송과 베를린 방송 합병

o 일간지

- 구동독 시절에는 39개 일간지 (31개는 지역 신문, 8개는 전국지) 960만 부가 발행되었음.

- 현재 구동독의 일간지는 총 590만 부 발행되고 있음.

o 잡지

o 신문 보급

다. 스포츠 분야

o 통일과 더불어 스포츠의 자율성 확보라는 원칙 아래 새로운 스포츠 체제 구축

o 일반 체육

- 각종 스포츠 단체 설립

o 장애자 체육

- 장애자 스포츠 협회 설립

o 선수 체육

VII. 평가 및 향후 과제

1. 평 가

2. 향후 과제

1. 평 가

o 독일 통일 과정은 각 분야별 내적 통합 과정과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부터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과정이란 두 가지 중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역사상 선례가 없는 힘든 일임.

o 독일 정부는 통독 당시의 낙관론적인 전망 대신에 내적 통합 과정이 예상보다 더 어렵고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동·서독 국민들에게 연대 의식과 자기 절제를 호소하고 있음.

o 구동독 주민들도 동·서독 생활 수준의 신속한 균등화에 대한 낙관적 꿈에서 깨어나, 균등화는 단기간에 달성될 수 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음.

- 통독 당시 구동독 주민의 51%가 5년 이내에 동·서독 간의 생활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92년에는 20%, '93년에는 8%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통독 이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나, 동·서독 주민들이 통일 그 자체를 부정하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희망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님.

- 급속한 통일 추진이 문제점을 야기한 주 요인이라는 주장보다는 동독 상황의 급격한 악화때문에 그 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독으로의 편입에 의한 통일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동독 주민이 약 70% 정도에 이르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8%로 나타나고 있음.

- 통독후 4년이 지난 1994년 말 현재 동독 주민들은 NATO, 유럽 연합, 실업 문제, 범죄 등에 대해 서독 주민들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사회주의와 PDS (구동독 공산당 후신)에 대해서만 동·서독 주민간 견해 차이가 있음.

o 과거 49여년에 걸친 동·서독간 상이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조건에 기인하는 다른 경험 및 인식 체계가 동화되어, 심리적인 장벽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동독 지역의 경제 재건이 조속히 달성되어 동·서독간의 생활 수준 격차가 해소되고 꾸준한 민주주의 정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콜 수상은 '94년 가을 통독 4주년 인터뷰에서 '서독의 풍요가 단 4년만에 달성되지 않았음을 동독인들이 납득할 때, 그리고 동독인들이 40년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서독인들이 이해할 때라야 인간적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함.

2. 분야별 향후 과제

o 정치·외교·안보 분야

- 민사당(PDS)의 진로와 극좌·우파 문제
- NATO 체제의 동구권 확장 논란
- 연방군 감축

o 국가·헌법·행정·사법 분야

- 기본법 제 146조 적용 문제 등 기본법 개정 계속
- 수도 이전 (1998-2000)
- 브란덴부르크와 베를린 시 통합 (1996)
- 분야별 법 통합 완성을 위한 각종 법률 개정·제정 계속
- 구동독 법률 관련 인력 (특히 사법보조관) 확보.

o 구동독 불법 청산 분야

- 가해자 처벌에 대한 형평성 문제
- 피해자들의 보상 청구 미숙
- 재산권 관련 분규 계속
- 구 SED 활동자들에 대한 일반 사면 문제

o 재정·경제 분야

- 신연방주 재건을 위한 재원조달 문제
- 신연방주 경제의 자생력 향상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따른 막대한 비용

o 노동·사회·환경 분야

- 실업자 문제
- 동·서독 사회보장 평준화에 따른 서독인들의 부담 가중
- 환경오염 정비에 따른 막대한 비용

o 기타 분야

- 직업 교육 및 각종 직업 연수 기회 확대
- 동독 지역의 대학 및 연구시설 확충
- 여성 고용 문제
- 동·서독간 심리적 갈등 해소

* 수상실 신연방주 재건 담당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연방정부는 제도적·물적 통합에 치중한 결과 제도면에서는 거의 통합이 완성되었지만, 이로써 해결할 수 없는 동·서독간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정신적·심리적 통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함.

〈부　　록〉

독일 통일 과정 일지

독일 통일 과정 일지

가.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 (1989)

o '89. 1. 15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기념 행사 계기로 Leipzig 에서 매규모 시위 발생

o '89. 5. 2 헝가리의 대 오지리 국경 일부 철조망 철거 계기, 동독 여행자들이 서독으로 탈출 시작

o '89. 5. 8 동독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부정(5.7)을 이유로 저항 세력 조직화 시작

o '89. 9. 10 헝가리의 대 오지리 국경 완전 개방으로 동독 시민의 서방 여행 쇄도

o '89. 10. 7 고르바쵸프는 동독 개혁을 촉구하면서 "늦게 오는 자는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

o '89. 10. 9 Leipzig 에서 5만명 시위대 발생 이후 월요 데모 계속

o '89. 10. 18 호네커 실각, SED 신임 서기장에 Egon Krenz 선출

o '89. 11. 4 동베를린에서 동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 발생 (100만명), SED 독점 철폐 및 Stoph 내각 퇴진 요구

o '89. 11. 7 Willi Stoph 내각 총 사퇴

o '89. 11. 9 동·서독 국경 개방

o '89. 11. 10 베를린 장벽 철거 시작

나. 베를린 장벽 붕괴 후 통일 이전 ('89.11.9 - '90.10.3)

o '89. 11. 3 Willi Stoph 후임에 Hans Modrow가 동독 각료회의 의장에 선출, Modrow는 양독간 계약 공동체 구성 제의

o '89. 11. 28 콜 수상, 10 단계 통일 방안 제시

o '89. 12. 1 동독 헌법에서 SED의 주도권 조항 삭제

o '89. 12. 3 SED 중앙위 및 정치국 해체
Krenz 사퇴
Honecker, Stoph, Mielke 제명
Gregor Gysi는 SED와 사회주의 구출 선언

o '89. 12. 7 동독 최초의 원탁회의 개최

o '89. 12. 8/9, 16/17

SED 특별 전당대회 개최,

Gregor Gysi를 신임 당수로 선출,

Stalin 주의와 결별 선언,

당명은 SED-PDS로 개명

o '89. 12. 11 Leipzig 및 기타 도시의 월요 시위에서

통일 문제 이슈화 시작

o '89. 12. 19 Kohl-Mosrow 1차 정상회담

'90. 4월까지 양독간 조약 공동체 합의

동·서독 화폐 교환 비율 3:1로 결정

o '90. 2. 1 Modrow 수상, 4단계 통일 방안 제의

o '90. 2. 7 Kohl 수상, 독일통일내각위원회 구성

o '90. 2. 12 나토-바르샤바 회원국 회담 (open sky)에서

독일 통일과 인접국 문제 해결을 위한

2 + 4 회담 구성 합의

o '90. 3. 18 동독 인민의회 자유 총선 실시

서독 DM의 즉각적인 도입과 조속한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기민당 중심의

독일 연맹 승리

o '90. 4. 5 동독 최초의 자유 총선에 의한

인민 의회 구성

o '90. 4. 12 Lothar de Maiziere (CDU)가 동독 수상으로 선출됨.

o '90. 4. 19 드메지에르는 기본법 23조에 의한 독일 통일 연설

o '90. 4. 24 Kohl-de Maiziere 회담에서 경제·통화·사회 통합 실시 합의

o '90. 5. 18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국가 조약 서명 (제 1 국가 조약)

o '90. 7. 15 독-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쵸프가 통일 독일의 NATO 회원국 잔류에 동의

o '90. 8.22/23 동독 인민 의회는 기본법 23조에 따라 통일할 것을 결의

o '90. 8. 31 통일 조약 (제 2 국가 조약) 체결

o '90. 9. 12 2 + 4 조약 최초 합의 서명

o '90. 10. 3 독일 통일 선포

〈부　　록〉

통독 관련 연구자료 목록

통독관련 연구자료 목록

<정 치 분 야>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양독간의 국경개방 발표문	100 - 1
독·폴란드 국경보장에 대한 서독국회 결의안	100 - 2
콜수상이 7.17 소련방문에 앞서 행한 시정연설문	100 - 3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발전과정 - 헌법개혁	100 - 4
〃 - 행정제도 및 주택문제	100 - 5
〃 - 정당제도	100 - 6
호네커 동독서기장 방독시(87.9.7-11) 프로그램 (남·북 정상회담 대비)	100 - 7
동독의 재편성을 위한 우선적 법적조치들(영문)	100 - 8
동독이 기 체결한 외국과의 협정처리문제 - 북한과 동독이 체결한 협정내용 중심 -	100 - 9
전동독수상 모드로우 서독방문시 프로그램(남·북 총리회담 대비)	100 - 10
독일의 대외정책 및 독일문제에 관한 기본원칙	100 - 11
통독진행현황 요약(영문, 89.11.9~90.3.18)	100 - 12
통독진행현황 요약(영문, 90.3.18~90.5.18)	100 - 13
양독수상의 조기총선 관련 성명(국문번역)	100 - 14
통독선거를 위한 동·서독간 선거협약(원문 및 번역문)	100 - 15
동·서독 선거제도 및 관계법령 등 자료	100 - 16(1)
제2차 국가조약안 전문(독어원문, 번역중)	100 - 16(2)
동독 국가안전부(Stasi)의 실체	100 - 16(3)
· 통독후 동독과 제3국과의 외교 및 영사관계 처리에 관한 서독 외무성의 회람(요약번역 및 원문)	100 - 17
통독관련 최종 조약("2+4" 회담) (영문원본)	100 - 18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독·쏘간 우호·친선조약문(영문번역)	100 - 19
통독관련 제반조약과 관련, 겐셔외상이 서독하원에서 행한 성명 (독어원문)	100 - 20
수상실 외교안보보좌관(TELTSCHIK)의 통일독일의 신국제질서하의 역할에 대한 기고문(요약 영문번역)	100 - 21
겐셔 외상의 유엔총회 연설문 전문(영문번역문, 독어원문)	100 - 22
연방대통령의 독일통일의 날 경축행사시 연설문(독어원문)	100 - 23
콜수상이 독일통일에 즈음하여 전세계에 보낸 메세지(독어원문)	100 - 24
통독후 첫 연방의회에서 콜 수상이 행한 정부 성명문 (독어원문, 영어요약문)	100 - 25
"겐셔 외교의 비밀" (슈피겔지 10.1자 인터뷰기사 영어원문)	100 - 26
콜 수상이 통독후 처음 행한 유력일간지(Sueddeutsche Zeitung)와의 인터뷰 요약(영어번역)	100 - 27
콜 수상이 유대인 신년에 즈음해 발표한 메세지	100 - 28
통독 관련 후속조치에 관한 외무성의 회람(영문)	100 - 29
쏘련군 철수에 관한 독·쏘간 잠정협정(영문번역)	100 - 30
쏘련군 주둔조건 및 철수절차에 관한 독·쏘간 조약(영문번역)	100 - 31
서독주재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특권 및 면제부여에 관한 규정 (당관 영문번역)	100 - 32
독한협회와 전독문제연구소 공동주최 심포지움 발표자료 (영문 및 국문요약)	100 - 33
주 서백림총영사 영사관할구역 연장 및 총영사에 대한 임시영사기능 부여에 관한 외무부 공한(영문)	100 - 34
구동독 Stasi의 잔재(영문논문)	100 - 35
동독지역의 민주정당 출현(영문논문)	100 - 36
동·서독 행정체제 통합	100 - 37
독·폴간 국경조약(독어원문, 당관 영문번역)	100 - 38
겐셔 외무장관이 국경조약 서명시 행한 연설문(당관 영문번역)	100 - 39
고르바쵸프 방독시 콜수상의 만찬사(주재국 영문번역)	100 - 40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독일은 하나다」(공보처 발행 통합조약 해설자료 : 독어원문)	100 - 41
동·서독간 정지법 석방을 위한 거래	100 - 42
제1차 전독선거 관련자료	100 - 43
CSCE 파리헌장(독문)	100 - 44
동·서독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세력의 위기와 적응전략(독어원문)	100 - 45
도시 자매결연 협정 예(동독의 Eisenach시와 서독의 Marburg시 간의 협정 원문 및 번역문)	100 - 46
신설 5개주 주정부의 각료 명단 및 약력(국문요약, 독어원문)	100 - 47
신설 5개주 개황(영문)	100 - 48
Salzgitter 소재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례 기록보존소 (Erfassungsstelle)에 관한 보고서 및 관련자료	100 - 49
사법·법률체계 통합에 관한 보고서	100 - 50
구동독 법관 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규정 (독어원문)	100 - 51
독일 공산당의 후신인 PDS의 현주소 : 반체제냐 개혁정책 추구냐? (독어원문)	100 - 52
통독의 외적인 측면에 관한 제규정(독어원문)	100 - 53
내독간 국경 탈출자에 대한 발포명령의 가벌성 (독어원문)	100 - 54
신설 5개주 행정지원을 위한 조직정비위원회(Clearingsstelle)의 구성과 임무	100 - 55
통합조약 이후 계속 적용되는 동독의 법률들(독어원문)	100 - 56
제1차 국가조약시부터 통합조약 발효시까지 새로이 제정된 법령 (독어원문)	100 - 57
통합조약의 헌법개정적 측면(독어원문)	100 - 58
통일독일의 외교정책 : 도전과 문제점 등(독어원문)	100 - 59
이전 동독지역에의 행정재판 제도의 도입(독어원문)	100 - 60
이전 동독지역 재산권의 상속 증명(독어원문)	100 - 61
동구 공산주의의 몰락(독어원문)	100 - 6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독 국가보위부(Mfs)의 거세작업과 그 잔재(독어원문)	100 - 63
독일 12대 국회 연정파트너간의 정부시택 합의문 (요약 및 독어원문)	100 - 64
통일독일의 법적인 제문제(독어원문)	100 - 65
Stasi 문서 임시이용규정 요약 및 관련법규 원문	100 - 66
동독주민의 국적인정의 법적인 문제	100 - 67
나토 외무장관 추계회의 공동 코뮤니케(영문)	100 - 68
콜 수상의 향후 4년간 시정연설문(영문)	100 - 69
기본법과 독일의 통일(독어원문)	100 - 70
신설 5개주에 대한 과도기적 행정절차법(목차번역, 독어원문)	100 - 71
동독 공산당의 변신과정 : SED에서 PDS로(독어원문)	100 - 72
독일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구주안보협력회의의 의의	100 - 73
신설 5개주에의 법관법의 도입	100 - 74
이전 동독지역 인사의 복권을 위한 형사처벌 판결 취소 문제	100 - 75
'45 이후 내독관계중 국가연합에 관한 제안들	100 - 76
과거 동독의 정치적 반대자들	100 - 77
신설 5개주의 사법체계 확립	100 - 78
동·서독지역별 분리 변호사 허가규정	100 - 79
구동독 공산당(SED)과 스탈린주의(Stalinismus)	100 - 80
신설5개주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	100 - 81
통합조약 이후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제조약의 처리문제	100 - 82
호네커 전동독 공산당 서기장의 쏘련으로의 탈출 관련자료	100 - 83
구동독 지역으로부터의 이주·피난민에게 제공한 서독측의 제반급부	100 - 84
Stasi 문서 열람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자료	100 - 85
신설 5개주의 사회법 체계 확립	100 - 86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방·주정부간의 행정협약	100 - 87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서독간 대 UN 정책의 유사점과 상이점	100 - 88
통독후 구동독지역 행정체제의 전환	100 - 89
구동독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감봉 및 해고관련 판례	100 - 90
신설5개주의 경제·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건단 설치	100 - 91
구동독지역에의 공무원법 도입	100 - 92
신설5개주 사법체계 수립현황	100 - 93
구동독 공산정권하의 희생자들의 복권문제 처리방침 (연방 법무장관 5.10 발표)	100 - 94
"2+4" 조약의 국제법적 재조명	100 - 95
동독 구체제 청산 관련 가해자 처벌 문제	100 - 96
구동독 잔류 공무원들의 재교육	100 - 97
통독이후 제정된 공무원 관계법령	100 - 98
변혁기의 구동독 원탁회의(Runder Tisch)의 활동	100 - 99
과거 쏘련과 동독간의 외교관계	100 - 100
독·폴간 우호협력조약	100 - 101
구동독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신청에 관한 설명서 및 양식	100 - 102
구동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 해고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	100 - 103
통독이후 국가문서 처리	100 - 104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재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자료	100 - 105
구동독 지방행정의 개편	100 - 106
통일독일의 국제적인 위상	100 - 107
통독에 따른 단체(Verein) 등록의 법적인 제문제	100 - 108
구동독 스파이 처벌 관련자료	100 - 109
구동독 정권하 피해자의 복권·보상문제 처리법(안) 요지	100 - 110
구동독 판·검사 출신 변호사 활동금지 방침	100 - 111
구동독지역 행정체계 확립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	100 - 11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동독지역(신설5개주) 지방자치 행정체계 구축과 문제점	100 - 113
지방자치행정 구축을 위한 구서독지역의 구동독지역 행정지원	100 - 114
독일사연합회의 신설5개주 행정지원 프로그램	100 - 115
과거 양독간 국경 탈출자 총격살해 관련 과거청산문제	100 - 116
구동독 공무원 재임용 조건으로서 "헌법준수 서약 (Verfassungstreu)" 의 의미	100 - 117
과거 양독간 기본조약 체결에 대한 동·서독의 입장에 관한 자료	100 - 118
구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문제	100 - 119
구동독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연방 부처별 행정지원 내역	100 - 120
구동독의 경찰제도	100 - 121
구동독지역 신설연방주(작센주)의 경찰법	100 - 122
구동독지역 신설연방주(브란덴부르크주)의 경찰법	100 - 123
구동독의 경찰법	100 - 124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한 구동독지역 지방행정체제 구축 지원	100 - 125
동·서독 국경개방을 전후한 구동독 피난 및 이주민 문제 실태 분석 결과	100 - 126
통독일년후 구동독 경제재건 및 행정·사법체계 구축현황 (Inter Nationes 제공 영문자료)	100 - 127
통독관련 주요인사 면담록(Ⅰ)	100 - 128
구동독 Stasi 문서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제정 관련	100 - 129
통독을 전후한 연방정치교육센타의 활동	100 - 130
신설5개주의 법치주의 확립	100 - 131
브란트-슈토프 양독 정상회담(제1차) 관련자료	100 - 132
SED의 불법행위 청산에 관한 법(초안)	100 - 133
양독간 국경위원회 설치와 활동	100 - 134
브란트-슈토프 양독 정상회담(제2차) 관련자료	100 - 135
Stasi 문서처리에 관한 법	100 - 136
양독간 통행문제 관련위원회 설치 및 활동	100 - 137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호네커-슈미트 양독 정상회담 세부일정	100 - 138
모드로-콜 양독 정상회담 세부일정	100 - 139
과거 동·서독 정상회담 사례조사	100 - 140
신설주의 지방자치행정체계 구축 현황	100 - 141
동·서독 지역 행정분야 지도층 비교분석	100 - 142
구동독 체제 희생자 복권·보상 신청서 양식 및 설명서	100 - 143
Stasi 문서처리법에 관한 해설	100 - 144
Stasi 문서처리법과 기본법상 언론의 자유	100 - 145
과거 동·서독간 여행·방문 문제	100 - 146
과거 동·서독 국경 탈출·이주문제	100 - 147
국경지역내 동·서독간 협력사업	100 - 148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관련 문서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규정	100 - 149
통독을 전후한 서독에서의 동독 및 통일문제 연구	100 - 150
구동독 최초의 자유총선('90.3.18) 분석	100 - 151
통독과정에서의 민주적 정통성 획득을 위한 절차	100 - 152
통독을 위한 동·서독 협상과 2+4 회담	100 - 153
신설주(구동독지역) 행정체계 확립상의 문제점	100 - 154
구동독 공산당의 지배도구 Stasi	100 - 155
통독총선 이후 동·서독에서의 정치적 견해의 변화	100 - 156
동·서독 기본조약 후속 실천조치	100 - 157
통독이후 정치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방정부 보고서	100 - 158
과거 내독간 국경탈출자에 대한 사살명령자 처벌과 형사상 소멸시효문제	100 - 159
SED 정권이 범한 반법치국가적 행위들의 법적 소멸시효문제	100 - 160
구동독지역 출신 변호사 및 공증인 심사	100 - 161
동·서독 기본조약 이후의 내독간 문제	100 - 162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독교훈(영문)	100 - 163
구동독 국가보위부(Stasi)의 실상	100 - 164
최근 구동독지역 행정체계 구축 현황('92.4월말 현재)	100 - 165
내독관계 발전(영문) - 분단의 벽을 넘어 -	100 - 166
전후세대와 양독관계(영문)	100 - 167
정치범 석방 거래(Freikauf)	100 - 168
독일문제의 재조명(영문) - 통일에서 화해로 -	100 - 169
구동독 사법체계 현황	100 - 170
동독의 대서독정책 변화(영문)	100 - 171
호네커 신변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처리문제	100 - 172
구동독의 민사계약에 대한 서독의 책임한계	100 - 173
독일 정치교육의 과제 - 청소년 재통일	100 - 174
1980년대의 내독관계	100 - 175
구동독지역 "정의구현위원회" (Kommitte fuer Gerechtigkeit) 설립 관련 동향	100 - 176
통독과정에서 기본법 제23조와 제146조에 관한 법적 논쟁	100 - 177
정치범 인도를 위한 서독의 지출액	100 - 178
흡수통합 대신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기대와 우려 - 통독과정에서의 동독 -	100 - 179
연방하원 구동독 조사위원회(Enquete-Kommission) 결의문	100 - 180
Stasi 내부 반대파	100 - 181
통독을 위한 노력(영문자료)	100 - 182
동·서독간 간첩사건(기욤사건 중심) 처리	100 - 183
기욤 간첩사건과 브란트 수상 퇴임에 대한 동독측과 서독공산당(DKP)의 반응	100 - 184
동독간첩 기욤사건에 대한 서독언론의 반응	100 - 185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정치 · 경제 · 사회적 통합실태(영문자료)	100 - 186
구동독 과거청산 특별위원회 동향 보고	100 - 187
Stasi의 활동과 Stasi 자료 - 세미나 참가 출장 보고 -	100 - 188
동.서독간 인권문제 논란(Ⅰ)	100 - 189
형사처벌에 의한 구동독 피해자 복권.보상법 개관	100 - 190
동.서독간 인권문제 논란(Ⅱ)	100 - 191
내독관계에 대한 동.서독측 기관 관할권	100 - 192
내독관계에서 상주대표부 대표의 역할	100 - 193
동.서독간 행정.사법 공조(Ⅰ)	100 - 194
구동독 공산당 불법행위 청산문제	100 - 195
구동독 공산당 통치하 형사처벌의 정치적 악용	100 - 196
1989 동독혁명의 이론적 분석(영문자료)	100 - 197
서독 동방정책의 배경과 전략(영문자료)	100 - 198
구동독지역에서의 노조와 사민당의 조직정비와 역할	100 - 199
정치범 석방을 위해 서독이 동독에 지불한 대가와 거래방식	100 - 200
정권적 범죄 및 통일 범죄의 유형	100 - 201
정권적 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황	100 - 202
통독관련 주요인사 면담록(Ⅱ)	100 - 203
독일 통일문제에 관한 동.서 진영의 입장	100 - 204
CSCE와 유럽장벽의 극복	100 - 205
동독시민의 평화.인권운동	100 - 206
CSCE와 독일문제	100 - 207
CSCE와 독일통일의 국제법적 제 문제	100 - 208
독일(통일) 정책적 관점에서 본 빈(Wien) CSCE 후속 회동	100 - 209
동독과 소련측에 의한 CSCE 최종선언내용 구체적 실천	100 - 210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독측의 CSCE 최종선언 제3항목(Korb 3) 실천에 대한 평가	100 - 211
서독측으로부터 정보유입에 대한 동구권의 대응	100 - 212
CSCE가 독일통일에 미친 영향(Ⅰ)	100 - 213
CSCE 과정에서 범주 Ⅲ(Korb 3)의 실천	100 - 214
동.서관계에서 CSCE를 통한 인도적인 문제해결의 의미	100 - 215
동독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내독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인 제 수단	100 - 216
동독주민 서독방문시 여행안내	100 - 217
제2차 구동독 공산당 불법행위 청산법(안)	100 - 218
내독간 국경탈출자 사살에 대한 형사적 책임	100 - 219
신설주 행정통합 문제	100 - 220
주 헌법재판소의 형사재판 개입 범위 - 호네커 재판 사례 -	100 - 221
내독간 도시 자매결연(Ⅰ)	100 - 222
내독간 도시 자매결연(Ⅱ)	100 - 223
구동독 치하 형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복권법	100 - 224
사법적 측면의 과거청산	100 - 225
구동독 판·검사에 대한 권력남용혐의	100 - 226
구동독 정권적 범죄행위의 유형과 문제점 - Enquete-Kommission 공청회 발표논문 -	100 - 227
구동독 외교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0 - 228
신설주 행정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 현황 - 중간 결산 -	100 - 229
구동독 Stasi 연루자들에 대한 공직 배제 관련 논쟁	100 - 230
구동독 치하 형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복권법 (Ⅱ)	100 - 231
고의적 법률왜곡으로 기소된 구동독 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문	100 - 232
구동독 판사의 고의적 법률왜곡에 대한 형사상 책임문제	100 - 233
통독과정에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이양	100 - 23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제2차 불법청산법' 에 관한 논문	100 - 235
서독내 공산당의 활동과 서독 정부 대응	100 - 236
물권청산법(안) 해설	100 - 237
동독으로부터 여행·방문자에 대한 서독 정부의 재정 지원 조치	100 - 238
서독 상주대표부의 구체적인 활동과 임무	100 - 239
통독과 관련된 정치교육의 새로운 문제 - 주어진 자유에 대한 두려움 -	100 - 240
통독 이후 정치교육과 정치문화	100 - 241
서독 상주대표부의 활동 중 위기상황 대처 사례	100 - 242
구동독 공산당 독재체제하의 탄압 및 주민들의 생활 - 과거청산특별위 회의록 -	100 - 243
신설주 지방행정 개혁 현황	100 - 244
분단시 동·서독 정당간 접촉·교류	100 - 245
시효법의 헌법상 배치 여부	100 - 246
구동독치하 판결로부터의 복권 문제 - 상법, 세법, 외환거래법 위반 -	100 - 247
통독 3년간 신설주 사법체계 확립 현황 - 브란덴부르그주를 중심으로 -	100 - 248
스타지 자료 처리 문제 - 논쟁, 협상, 입법 -	100 - 249
스타지 요원 및 비공식 협력자의 개념	100 - 250
통독 이후 동·서독 지역 주민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견해 - 설문조사 결과 -	100 - 251
통독 관련 정치교육의 실태 및 방법론 (Ⅰ) - 학교에서의 통일 관련 정치교육 -	100 - 252
기본조약 체결과 4대국의 권리 및 책임	100 - 253
1970~89년 동·서독 및 소련 관계 - 과거청산특별위 공청회 발표 논문 -	100 - 254
통독 관련 정치교육의 실태 및 방법론 (Ⅱ)	100 - 255
보상과 반환 간의 선택 문제	100 - 256

자 료 명	분류번호
통일은 서독의 내독정책의 산물이었는가? (영문 자료)	100 - 257
전 동독스타지 대외정찰총국장 Wolf 재판	100 - 258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 현황	100 - 259
독일 통일의 이론적 고찰 - 통합 이론과 민주화 이론 -	100 - 260
베를린으로의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안	100 - 261
내독간 상속분 양도계약 해소	100 - 262
과거 청산을 통한 동질성 회복	100 - 263
1989년 동독 탈출난민 처리 및 협상 과정	100 - 264
서독 동방정책의 재조명	100 - 265
긴장완화정책은 체제변화를 위한 황금미끼였는가?	100 - 266
콜 정부의 동방정책	100 - 267
구동독 법률의 계속 적용 문제	100 - 268
독일 이주민 및 정주민 수용관련 법률	100 - 269
구동독 불법행위에 대한 사면문제	100 - 270
제2차 SED 불법청산법 평가	100 - 271
정주민과 이주민 동화 대책 및 수용 절차	100 - 272
장벽살해명령 관련 구동독 국방위 위원 재판 판결문	100 - 273
강제 이주 희생자에 대한 복권 및 보상	100 - 274
과거청산 특별위 활동보고서에 대한 연방하원 심의 -속기록-	100 - 275

자 료 명	분류번호
연방하원 과거청산특별위 활동보고서	100 - 276
민사당(PDS) 지지도 분석	100 - 277
제2차 SED 불법청산법 관련 난해분야 해설	100 - 278
제1차 동서독 정상회담 전후 동방정책 관련 외교적 접촉 자료	100 - 279
제1차 동서독 정상회담 관련 언론보도 기사	100 - 280
1994년 상반기 동독지역 선거 결과	100 - 281
제2차 동서독 정상회담 관련 언론보도 기사	100 - 282
과거청산문제에 대한 Juergen Habermas의 견해	100 - 283
제2차 SED 불법청산법 해설(I)	100 - 284
신연방주에서의 기민당의 어제와 오늘	100 - 285
제2차 SED 불법청산법 해설(II)	100 - 286
통독이후 법적문제점의 해결과정	100 - 287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의 각종 선거결과 분석	100 - 288
신연방주에서의 정치인식	100 - 289
신연방주의 하반기 선거결과 분석	100 - 290
구동독 국가보위부 자료에 관한 개정법률 해설	100 - 291
재판대상 구동독 공산당 간부 7명의 이력서	100-9501-1
제2차 SED 불법청산법에 따른 보상청구 상황	100-9501-2
독일에 대한 인접국가들의 기대	100-9502-3

자 료 명	분류번호
'80년대 구소련의 독일정책	100-9502-4
'94 연방의회 선거시 PDS 지지자 심층분석	100-9502-5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와 독일통일 중간평가	100-9502-6
CDU/CSU의 대소·대동독 막후채널	100-9503-7
제4차 PDS 전당대회 결과분석	100-9504-8

<정치분야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합조약(제2차국가조약안) 번역문	(번역) 100 - 1
신설5개주 행정체계 확립	〃 100 - 2
동·서독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주석, 서신교환 포함)	〃 100 - 3
탐욕스런 공산당의 잔재(동독 공산당과 그 제휴정당의 재산권 처리 문제)	〃 100 - 4
콜수상의 첫 통독국회 시정연설	〃 100 - 5
독일 공산당의 위기	〃 100 - 6
독일은 하나다(공보처 발행 통합조약 해설자료 : 독어원본)	〃 100 - 7
전 동독 국가보안부(Stasi)의 정체	〃 100 - 8
전독총선에 관한 참고자료	〃 100 - 9
동·서독간 도시간 자매결연	〃 100 - 10
과거 동독지역 희생자들의 복권문제	〃 100 - 11
내독관계성 공식해체 행사시 빌름스 장관 연설문	〃 100 - 12
과거 동독방문자에 대한 의무환전제도	〃 100 - 13
내독관계('70-'80)에 있어서의 돈과 정치	〃 100 - 14
구동독 불법 공산정권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 100 - 15
신설 5개주 행정지원을 위한 연방-주정부 조직정비위원회 (Clearingsstelle)의 임무	〃 100 - 16
통일후 동·서독인들 간의 정치적 동화	〃 100 - 17
독일분단으로부터 통일까지 약사	〃 100 - 18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재산심사 소위원회 중간보고서	〃 100 - 19
UN에서의 동·서독 활동 결산	〃 100 - 20
구동독 출신 법관과 법치주의 형성	〃 100 - 21
SED(구동독 공산당)의 PDS로의 변신에 관한 개관	〃 100 - 22
구동독의 붕괴와 "현실 사회주의" 실패(Ⅰ)	〃 100 - 23
구동독의 붕괴와 "현실 사회주의" 실패(Ⅱ)	〃 100 - 2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서독 상주대표부 설치와 법적인 제문제	(번역) 100 - 25
서독정부의 동방정책은 동독체제의 붕괴를 가속화 시켰는가 지연시켰는가? (1)	〃 100 - 26
〃 (2)	〃 100 - 27
〃 (3)	〃 100 - 28
〃 (4)	〃 100 - 29
〃 (5)	〃 100 - 30
〃 (6)	〃 100 - 31
서독의 대동독 화해정책 재평가를 통한 만프레드 스톨페 사건의 조명	〃 100 - 32
통독이후 독일정세 불안의 이유 - 랄프 다렌도르프 Die Zeit 지에 기고 -	〃 100 - 33
동·서독 협상과 2+4 회담	〃 100 - 34
동독의 멸망원인(Ⅰ) - 민주화 이론에 비추어 본 동독의 사례 -	〃 100 - 35
동독의 멸망원인(Ⅱ) - 민주화 이론에 비추어 본 동독의 사례 -	〃 100 - 36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독 교훈	〃 100 - 37
서독에서의 자유와 통일에 관한 논쟁	〃 100 - 38
호네커의 독일귀환 경위	〃 100 - 39
호네커의 기소에 따른 법률적 난제	〃 100 - 40
통독교훈과 한반도	〃 100 - 41
에리히 호네커를 비롯한 동독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소송	〃 100 - 42
베를린장벽 탈출자 사살에 대한 법적 평가	〃 100 - 43
사민당(SPD)와 구동독 공산당(SED)의 결탁	〃 100 - 44
통독과정에서 CSCE의 의의	〃 100 - 45
호네커와 동독 공산정권의 멸망에 관한 전 동독 국가보위부 (Stasi) 부장 Mielke의 슈피겔지 대담	〃 100 - 46
통독2주년 관련 독일언론 반응(Ⅰ)	〃 100 - 47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바이체커 독일대통령 통독2주년 기념 연설문	(번역) 100 - 48
통독 2주년 콜 수상 기념사	〃 100 - 49
통독 2주년 관련 언론반응(Ⅱ) - 서로 과중한 요구는 자제해야 - (Handelsblatt 지)	〃 100 - 50
통독 2주년 관련 언론반응(Ⅲ) - 동·서독인들간의 내적갈등 - (FAZ 지)	〃 100 - 51
통독 2주년 관련 언론반응(Ⅳ) - 정치문화의 공동성장을 위한 과제 - (Frankfurter Rundschau지)	〃 100 - 52
구동독 Stasi 국장의 대서독 국가반역행위 판결문	〃 100 - 53
구동독 국가보위부 자료관계법	〃 100 - 54
호네커 재판 관련 논쟁(Ⅰ)	〃 100 - 55
호네커 재판 관련 논쟁(Ⅱ)	〃 100 - 56
호네커 재판 관련 논쟁(Ⅱ)	〃 100 - 57
제1차 내독간 국경에서 총격 살해 관련 구동독 국경수비 대원에 대한 판결문	〃 100 - 58
구동독 지방선거(89.5.7) 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문	〃 100 - 59
호네커 재판 관련 논평(Ⅳ)	〃 100 - 60
호네커의 법정 진술(제6차 공판시)	〃 100 - 61
호네커 재판 관련 논평(Ⅴ)	〃 100 - 62
구동독 국가보위부 자료관리 연방담당관 개요 - 임무, 구조, 업무 -	〃 100 - 63
구동독 국가보위부 자료관리 연방담당관 활동에 관한 언론 보도자료	〃 100 - 64
에곤 바(Eogn Bahr)의 투칭 신교 아카데미 연설	〃 100 - 65
호네커 재판 관련 논평(Ⅵ)	〃 100 - 66
CSCE 헬싱키 최종의정서가 내독관계에 미친 영향	〃 100 - 67
통독후 동.서독 주민들의 공동성장 문제 - 슈미트 전 수상의 Die Zeit 지 기고문 -	〃 100 - 68
통독과정에서 나타난 동·서독 정당구조의 변천	〃 100 - 69

자 료 명	분류번호
동·서독간 '특수관계'의 법적·정치적 의미	(번역) 100 - 70
독일 분단시의 단일 국적 문제	〃 100 - 71
미완성의 통일 - FAZ지 사설 -	〃 100 - 72
내독관계와 독일통일에 대한 Kohl 수상과 Egon Bahr의 증언 (연방하원 과거청산특별위원회)	〃 100 - 73
Herbert Wehner 사건(대동독 접촉, 동방정책 추진시의 역할) 관련 논평 - 헬무트 슈미트의 Die Zeit지 기고문 -	〃 100 - 74
구동독 행정인력 감축 문제	〃 100 - 75
신연방주 재건 관련 연방부서 조직 현황	〃 100 - 76
1989년 동구권 경유 동독 탈출난민 일지	〃 100 - 77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5) - 통일과정의 외교·안보정책적 측면 -	〃 100 - 78
독일이주민 및 정주민 수용과 지원 조치	〃 100 - 79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7) - 형법, 구동독 불법문제의 청산 -	〃 100 - 80
'89년 동독 탈출난민의 서독수용 및 지원 - 연방 내무부 작성 -	〃 100 - 81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9) - SED 불법행위 청산, Stasi 자료법 -	〃 100 - 82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14) - 국가와 헌법 -	〃 100 - 83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16) - 신연방주의 형성 -	〃 100 - 84
제1차 동서독 정상회담 관련 문서	〃 100 - 85

자 료 명	분류번호
독일통일문제에 관한 정치교육 사례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	(번역) 100 - 86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21) - 공직근무, 행정구축 -	〃 100 - 87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22) - 법치주의 사법의 확충 -	〃 100 - 88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23) - 국내치안, 정치교육, 통계행정 -	〃 100 - 89
동독 국가보위부 문서의 신빙성 - FAZ 신설 -	〃 100 - 90
브란덴브르크주와 작센주의 주의회 선거결과 분석	〃 100 - 91
콜 수상의 10단계 통일방안	〃 100 - 92
1987년 동독지도부의 호네커 축출 계획	〃 100 - 93

<군 사 분 야>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주재국 외교 · 군사 상황보고	200 - 1
유탄포 장갑차 2000 현대화	200 - 2
주재국 군사상황보고(8. 3~10)	200 - 3
주재국 군사상황보고(8. 23-31)	200 - 4
주재국(서독) 정신전력학교 내용(목차번역, 원문)	200 - 5
주재국 군사동향보고(9. 12-20)	200 - 6
주재국 군사동향보고(9. 21-27)	200 - 7
연방군의 군복무 단축에 따른 대책(요약번역, 독어원문)	200 - 8
주재국 군사동향보고(90. 10. 1-11)	200 - 9
구주안보협의력회의(CSCE) 신뢰구축에 관한 스톡홀름 합의문 (독어원문)	200 - 10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10. 12-17)	200 - 11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 동독군 탈퇴에 관한 합의 의정서 (독어원문)	200 - 12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	200 - 13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	200 - 14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11. 14-19)	200 - 15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	200 - 16
유럽 재래식전력 감축 협정문(영문)	200 - 17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	200 - 18
나토 국방장관 추계회의 공동 코뮤니케(영문)	200 - 19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	200 - 20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91. 2. 4~2. 15)	200 - 21
통독관련 주요군사동향('91. 2. 18~3. 8)	200 - 22
통일독일 연방군의 미래임무	200 - 23
통독관련 군사동향(4. 22~5. 4)	200 - 2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후 주요군사동향	200 - 25
통독후 주요군사동향	200 - 26
나토 국방장관 추계회의 공동 코뮤니케	200 - 27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6. 18~6. 24)	200 - 28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6. 26~7. 1)	200 - 29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7. 2~7. 8)	200 - 30
서구동맹(WEU) 장관회의 코뮤니케	200 - 31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7. 9~ 7. 15)	200 - 32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7. 16~ 7. 29)	200 - 33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7. 30~ 8. 5)	200 - 34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8. 6~ 8. 12)	200 - 35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9. 9~ 9. 16)	200 - 36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9. 17~ 9. 23)	200 - 37
통독이후 주요군사동향(9. 30~10. 7)	200 - 38
독일연방군의 운영계획(영문)	200 - 39
독일의 안보정책(영문)	200 - 40
통독후 주요군사동향(10. 8~10. 14)	200 - 41
통독후 주요군사동향(10. 15~10. 28)	200 - 42
통독후 주요군사동향(10. 29~11. 4)	200 - 43
통독후 주요군사동향(11. 5~11. 11)	200 - 44
통독후 주요군사동향(11. 12~11. 18)	200 - 45
나토 정상회담('91. 11. 7, 로마) 코뮤니케 : 영문	200 - 46(Ⅰ)
통독후 주요군사동향('91. 11. 19~11. 25)	200 - 46(Ⅱ)
통독후 주요군사동향('91. 11. 26~12. 2)	200 - 47
통독후 주요군사동향('92. 1. 1~ 1. 9)	200 - 48
통독후 주요군사동향('92. 1. 10~ 1. 16)	200 - 4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후 주요군사동향('92. 1.17~ 1.24)	200 - 50
통독후 주요군사동향('92. 1.25~ 2. 3)	200 - 51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3. 9~3.21)	200 - 52
〃 ('92.3.22~3.29)	200 - 53
〃 ('92.3.30~4. 4)	200 - 54
〃 ('92.4. 5~4.12)	200 - 55
〃 ('92.4.14~4.28)	200 - 56
〃 ('92.4.29~5. 5)	200 - 57
〃 ('92.5. 6~5.12)	200 - 58
〃 ('92.5.18~5.24)	200 - 59
〃 ('92.5.25~5.31)	200 - 60
〃 ('92.6. 1~6. 7)	200 - 61
〃 ('92.6. 8~6.14)	200 - 62
〃 ('92.6.15~6.21)	200 - 63
〃 ('92.6.22~6.28)	200 - 64
〃 ('92.6.29~7. 5)	200 - 65
〃 ('92.7. 6~7.12)	200 - 66
〃 ('92.7.13~7.19)	200 - 67
〃 ('92.7.20~7.25)	200 - 68
〃 ('92.7.27~8. 2)	200 - 69
〃 ('92.8. 3~8. 9)	200 - 70
〃 ('92.8.10~8.16)	200 - 71
〃 ('92.8.24~8.30)	200 - 72
〃 ('92.8.31~9. 6)	200 - 73
· 통독후 독일의 군사현황	200 - 74
통독후 연방군 구조개편 방향	200 - 75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9. 7~ 9.13)	200 - 7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9.14~ 9.20)	200 - 7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9.21~ 9.27)	200 - 7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 9.28~10. 4)	200 - 7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0. 5~10.11)	200 - 8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0.12~10.18)	200 - 81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0.19~10.25)	200 - 82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0.26~11. 1)	200 - 8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1. 2~11. 8)	200 - 8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1. 9~11.15)	200 - 8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1.16~11.22)	200 - 8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1.30~12. 6)	200 - 8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2. 7~12.13)	200 - 8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2.12.14~12.20)	200 - 8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 4~ 1.10)	200 - 9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18~ 1.24)	200 - 91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1.25~ 1.31)	200 - 92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2. 1~ 2. 7)	200 - 9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2. 8~ 2.14)	200 - 9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2.15~ 2.21)	200 - 9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2.22~ 2.28)	200 - 9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3. 1~ 3. 7)	200 - 9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3. 8~ 3.14)	200 - 9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3.15~ 3.21)	200 - 9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3.22~ 3.28)	200 - 10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3.29~ 4. 4)	200 - 101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4. 5~ 4.11)	200 - 102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4.12~ 4.18)	200 - 10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4.19~ 4.25)	200 - 10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4.26~ 5. 2)	200 - 10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5. 3~ 5. 9)	200 - 10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5.10~ 5.16)	200 - 10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5.17~ 5.23)	200 - 10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5.24~ 5.30)	200 - 10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5.31~ 6. 6)	200 - 11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6. 7~ 6.13)	200 - 111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6.14~ 6.20)	200 - 112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6.21~ 6.27)	200 - 11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6.28~ 7. 4)	200 - 11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7. 5~ 7.11)	200 - 11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7.12~ 7.18)	200 - 11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7.19~ 7.25)	200 - 11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7.26~ 8. 1)	200 - 11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8. 2~ 8. 8)	200 - 11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8. 9~ 8.15)	200 - 12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8.30~ 9. 5)	200 - 121
동·서독간 군사·안보분야 교류·협력	200 - 122
구동독 군수산업체의 구조전환과정	200 - 12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9. 6~ 9.12)	200 - 12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9.13~ 9.19)	200 - 12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9.20~ 9.26)	200 - 12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 9.27~10. 3)	200 - 127

자 료 명	분류번호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0. 4~10.10)	(번역)200 - 12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0.11~10.17)	〃 200 - 12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0.18~10.24)	〃 200 - 13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0.25~10.31)	〃 200 - 131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1. 8~11.14)	〃 200 - 132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1.15~11.21)	〃 200 - 133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1.22~11.28)	〃 200 - 134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1.29~12. 5)	〃 200 - 135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2.13~12.19)	〃 200 - 136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3.12.27~'94. 1. 9)	〃 200 - 137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4. 1.10~ 1.16)	〃 200 - 138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4. 1.17~ 1.23)	〃 200 - 139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4. 1.31~ 2. 6)	〃 200 - 140
주재(주변)국 군사·안보 동향('94. 2. 7~ 2.13)	〃 200 - 141
러시아 군대의 독일철수	〃 100 - 142
통일 결과로서의 독일군축	〃 100 - 143

〈군사분야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쏘련군 주둔조건 및 철수에 관한 독·쏘간 조약	(번역) 200 - 1
쏘련군 주둔에 관한 동독·쏘간 협정	〃 200 - 2
구동독 인민군의 독일연방군 통합	〃 200 - 3
통일독일군의 미래	〃 200 - 4
통일독일 연방군의 미래임무	〃 200 - 5
독일의 군사통합	〃 200 - 6
독일연방 국방성의 통독1주년 독일연방군 현황보고	〃 200 - 7
통독2주년 기념 국방장관 연설문 - 통독 2년간의 성과 -	〃 200 - 8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10) - 통일 과정에 있어서의 연방군 -	〃 200 - 9

<경 제 분 야>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화폐, 사회 및 경제통합을 위한 국가조약	300 - 1
독일통일 공채발행계약과 연방 및 주정부예산 절감계획	300 - 2
동서독 공업규격 통합	300 - 3
동서독 경제통합이후 동독지역에 도입된 노동 및 사회보장제도	300 - 4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발전과정 - 경제제도 개혁	300 - 5
〃 - 경제적 문제점 및 전망	300 - 6
통합 공업규격(DIN)의 목록(영문판)	300 - 7
양독간 경제관계 진전상황 요약(영문, 89.11.9-90.3.18)	300 - 8
제1차국가조약 부칙Ⅱ항 규정에 의해 동독지역에 적용되는 서독의 법령집(화폐통합 관련)	300 - 9
〃 (경제통합관련)	300 - 10
동독내에 주거지, 본점 또는 지점이 없는자의 영업행위 또는 자유업의 허가에 관한법	300 - 11
동독내 환전 자산취득의 적법성 증명에 관한 법	300 - 12
동독내 통화변경에 따른 불법행위 처리에 관한법	300 - 13
통독비용	300 - 14
동독에의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해설책자(독문)	300 - 15
재무성장관의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설문(독문)	300 - 16
경제통합이후 변동상황(영문요약, 독문)	300 - 17
인민 공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에 관한 법(독문, 목차번역)	300 - 18
동독에 대한 투자저해요소(독문, 국문요약)	300 - 19
서독경제 활성화(독문, 국문요약)	300 - 20
동독의 물가상승(독문, 국문요약)	300 - 21
동독농민 농업정책에 반발(독문, 국문요약)	300 - 22
동독의 재정원칙에 관한 법(원문 및 목차번역)	300 - 23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독 관세법(원문 및 목차번역)	300 - 24
동독연방 및 주정부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원문, 목차번역)	300 - 25
콥수상 세금인상 반대(8.27 게네랄 안차이거지 기사번역)	300 - 26
통독예산 200억 마르크(8.28 헤랄드 트리뷘지 기사번역)	300 - 27
연방예산 4,000억 DM 이상으로 상승 (8.29 게네랄 안차이거지 기사번역)	300 - 28
동·서독 경제·사회 통합 이후 기존통계의 조정 및 향후 통계 작성상의 문제(국문번역, 원문)	300 - 29
무역·자본 및 지불거래에 관한법(원문 및 목차번역)	300 - 30
동독의 새로운 조세제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발간책자, 목차번역)	300 - 31
30년간의 내독교역 - 경제·정치적 의미 - (독어원본)	300 - 32
내독교역의 전망(영어원본)	300 - 33
동독 통계법(목차번역, 독어원본)	300 - 34
내독교역 관련 법령집(독어원본)	300 - 35
서독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통독비용 관련, 독어원문)	300 - 36
동독지역 몰수재산권 반환신청에 관한 해설자료 및 신청서 양식	300 - 37
5대 경제연구소, 신탁청의 구조적 오류 및 업무과중 비판 (신문기사 요약번역)	300 - 38
독일 체신장관, 동독지역 전화통신 개선계획 관련 동향 (신문기사 요약번역)	300 - 39
독·쏘간 경제·산업·과학기술분야 협력조약(당관 영문번역)	300 - 40
동독지역에의 사회적시장경제 도입(영문, '89.11.9-'90.4.20까지 경제정책)	300 - 41
통합조약과 임대차법(독어원문)	300 - 42
미해결 재산권의 법적인 측면(독어원문)	300 - 43
이전 동독지역의 EC 단일시장 경제권으로의 편입·통합(독어원문)	300 - 44
쏘련 점령하 구동독이 몰수한 재산의 미반환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300 - 45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내독간 무역과 EC 단일시장(독어원문)	300 - 46
반 법치국가적 형사처벌에 의해 몰수된 재산권의 반환신청 설명서 및 신청양식	300 - 47
재산권 반환신청에 관한 지방행정기관 업무처리 지침(독어원문)	300 - 48
이전 몰수재산권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심리에서 밝힌 법무장관의 의견	300 - 49
독일 야당인 사민당(SPD)의 동독지역 재건계획	300 - 50
독일 상공회의소 조사 구동독지역 경제현황 및 전망	300 - 51
신설5개주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처리 간소화	300 - 52
구동독지역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방의 재정지원	300 - 53
신탁청과 주정부 및 연방정부 공동협력안	300 - 54
투자촉진을 위한 미해결 재산권 처리문제 재조정	300 - 55
기업사유화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을 위한 법률	300 - 56
구동독지역 주택임대료 인상 관련자료	300 - 57
과거 동독기업의 독일마르크에 의한 대차대조표 작성에 관한 법 개관	300 - 58
구동독 소유 행정·재정재산 재분류 절차와 관리책임에 관한 규정	300 - 59
신설5개주에 대한 농업지원	300 - 60
통독에 즈음한 독일 전경련(BDI)의 활동	300 - 61
구동독지역의 협동조합체제(Genossenschaft) 전환 가능성	300 - 62
구동독지역 우편·통신분야 확충	300 - 63
신설5개주에 대한 국가적 투자촉진 대책 및 재정지원 현황	300 - 64
이전 몰수재산 미반환을 위한 투자증명서 발급 관련 법규 및 양식	300 - 65
구동독지역 주거현대화를 위한 지원조치	300 - 66
"기업사유화에 대한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에 관한 법" 설명자료	300 - 67
최근 신탁청 활동동향	300 - 68
신설 5개주에 대한 경제지원	300 - 6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탁청 최근 활동동향	300 - 70
통독이후 관세행정의 개편	300 - 71
쏘련 점령하 구동독지역 몰수재산 미반환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원)문	300 - 72
통일독일의 재정현황과 통독과 관련한 재정문제	300 - 73
신탁청 관리재산의 지방행정기관으로의 이관 및 관계법령	300 - 74
신탁청 관리 재산의 지방행정기관으로의 이관에 따른 신청서(양식) 및 설명자료	300 - 75
통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300 - 76
신설 5개주의 등기부 열람 문제	300 - 77
구동독 농업구조 재편을 위한 새로운 농업구조 조정법 제정	300 - 78
하원 신탁청 소위원회 구성과 임무	300 - 79
신설 5개주에 대한 EC의 지원	300 - 80
신탁청 관리재산중 지방행정기관으로 이관되는 재산	300 - 81
구동독 경제재건을 위한 구동독 경제학자의 제언	300 - 82
구동독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처리문제	300 - 83
구동독 주택관련 국유재산의 처리문제	300 - 84
구동독 주택관련 국유재산의 원소유권자에게의 반환문제	300 - 85
신설5개주에서의 영업활동(영문책자)	300 - 86
신설5개주 농업재건을 위한 각종 지원조치	300 - 87
구동독의 대외채권과 채무의 처리	300 - 88
독일통일과 연구·과학·기술정책	300 - 89
구동독지역(신설주)의 연구체계 재편	300 - 90
구동독지역(신설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시책	300 - 91
'90년대 구동독지역 투자전망(영문판 신탁청 제공자료)	300 - 92
구동독 과학분야 청산을 위한 "청산 및 조정위원회" (KAI) 설치	300 - 93
구동독 경제의 붕괴 원인	300 - 9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동독지역 농촌 주거환경 현대화 프로그램	300 - 95
구동독지역 발전현황	300 - 96
통독이후 구동독지역 과학·기술·연구 중점분야	300 - 97
신탁청의 기업사유화 전략 관련 논의	300 - 98
독일 5대 경제연구소의 '91 추계 경제전망 보고서	300 - 99
구동독의 농업구조 재편	300 - 100
구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제3차 보고서)	300 - 101
통독의 경제적 제측면(영문자료)	300 - 102
"경제5현" 의 '91~'92(동독 포함) 경제평가보고서(요약분)	300 - 103
최근 신탁청 활동동향('91.10월호)	300 - 104
최근 신탁청 활동동향('91.11월호)	300 - 105
신설5개주에 계속적용되는 구동독 농업관계 법령	300 - 106
구동독지역(신설연방주)에 대한 투자 : 경제성 발행 영문책자	300 - 107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92.1월호)	300 - 108
통독이후 교통망 통합문제(영문자료)	300 - 109
신설주에 있어서 기업반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적 문제들	300 - 110
통독이후 산업재산권 관련 법안 및 설명자료	300 - 111
양독간 경제·화폐·사회통합 관련 참고문헌 목록 (세계경제연구소 발행)	300 - 112
통독의 경제·사회적 측면에 관한 참고문헌 목록 (세계경제연구소 발행)	300 - 113
최근 신탁청 활동동향('92년 2월호)	300 - 114
경제통합에 있어서의 신탁청의 역할	300 - 115
MBO 방식에 의한 신탁청 기업매각계약서 견본	300 - 116
구동독 국유기업 반환제도와 관련 규정	300 - 117
구동구권(동독 포함) 기업의 구조개편과 사유화 성공의 조건	300 - 118
구동독 경제재건을 위한 야당인 사민당의 제안	300 - 11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탁청 기업 사유화의 실질적인 장애요소인 미해결 재산권 문제	300 - 120
독일 5대 경제연구소 '92 춘계 경제전망 보고서	300 - 121
"기업 사유화의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에 관한 법" 제2차 개정시안(정부측 설명자료)	300 - 122
통독이후 상속권의 제문제	300 - 123
통일조약상의 가족법(해설)	300 - 124
구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 지원조치(요약)	300 - 125
구동독지역 주택분야 재산권 문제 처리 신속화에 대한 지침 (연방 건설성)	300 - 126
구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 경영적 적응과정(제5차 보고서)	300 - 127
구동독 대내외 부채청산을 위한 기관설립과 재정조치들	300 - 128
임금인상 투쟁이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및 통독비용에 미치는 영향	300 - 129
구동독으로부터 승계한 재정부담 청산과 추정 소요액	300 - 130
Stasi 보유 구동독 부동산 재산 처리상의 문제점	300 - 131
제2차 구동독 재산법 개정(초안) 해설	300 - 132
동·서독간 교역 및 경제협력	300 - 133
동·서독 교역과 정치적 배경	300 - 134
신탁관리기업의 신속한 사유화 방안	300 - 135
통독이후 새로운 독일의 경제정책	300 - 136
구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 현황('91년말 현재)	300 - 137
연방 미해결 재산권 처리	300 - 138
「보상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	300 - 139
구동독 은행 시스템 통합 - 독일 연방은행 보고서 -	300 - 140
독일통일이후 재정현황과 재정상의 문제점	300 - 141
과거 내독간 교역에 있어서 경제협력사업의 유형들	300 - 142
과거 내독간 교역에 있어서 지불 및 신용거래	300 - 143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92.5월호)	300 - 144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 -	300 - 145
통독이후 구동독지역내 여성실업자 증가원인과 추세	300 - 146
신설주(구동독지역)에 설립된 고용촉진 및 자질향상회사 실태	300 - 147
숫자로 본 경제통합 현황	300 - 148
구동독지역 최대 투자장애요인인 미해결 재산권 문제	300 - 149
구동독지역 경제의 구조전환과 재건	300 - 150
구동독지역 기업 경영인 현황	300 - 151
구동독지역 임금구조 변동추세	300 - 152
구동독지역 최근('92.3월말 현재) 노동시장 현황	300 - 153
화폐통합 : 경제적 고려에 우선한 정치적 결정	300 - 154
환경통합의 길 - 환경협력과 환경정책 요건 -	300 - 155
신설주 경제재건을 위한 심리적 조건	300 - 156
자영업과 구동독 경기부양	300 - 157
신설5개주의 재정상 문제점	300 - 158
구동독지역 주택 사유화 절차(해설 및 체크리스트)	300 - 159
동·서독간 경제교류 현황(영문)	300 - 160
동·서독간 거래수지(영문)	300 - 161
신용청산기금 현황 - 독일 재무성 보고서 -	300 - 162
신탁청의 기업사유화 추진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 -	300 - 163
내독간 자동차 교통량	300 - 164
동·서독 경제관계(영문)	300 - 165
통일독일에서의 상업적 권리보호의 표준화	300 - 166
구동독지역의 산업생산요소	300 - 167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 현황('92년 3월말 현재)	300 - 168
제2차 재산법 개정(안)	300 - 169
신속한 사유화의 문제점 - 신탁청 활동에 대한 비판 -	300 - 170
신설주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	300 - 171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300 - 172
구동독지역의 임금정책(영문)	300 - 173
독일 경제개관 및 전망(영문자료)	300 - 174
'92/'93 재정현황과 통독이후 재정정책상 문제점	300 - 175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92.7월호)	300 - 176
구동독지역의 경제적 적응문제(영문자료)	300 - 177
통독과 환율정책 및 EMS(영문자료)	300 - 178
구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제6차 보고서)	300 - 179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92.7) -	300 - 180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92.8) -	300 - 181
투자우선법 원문	300 - 182
투자우선법 해설자료	300 - 183
독일 5대 경제연구소 '92 추계 경기전망 보고서	300 - 184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92.9/10월호)	300 - 185
구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 현황(92년 9월말 현재)	300 - 186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연방 재정 건실화 방안"	300 - 187
구동독지역 체제 이행 과정상의 제 문제	300 - 188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 보고(92.11) -	300 - 189
통일독일 93년 경제전망(영문자료)	300 - 190
신설주 교통분야 재건실태	300 - 191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연방 재정 건실화 방안 해설(영문자료)	300 - 192
구동독지역 산업구조 개편 현황(영문자료)	300 - 193
접경지역 지원법(Zonenrandfoerderungsgesetz)	300 - 194
서독측의 내독간 접경지역 지원	300 - 195
"구동독지역 경기부양 공동대응책" '92년 결산보고	300 - 196
최근 독일경제 동향 - '92년 4/4분기 -	300 - 197
미해결 재산권 처리의 의의와 목적	300 - 198
구동독지역 가계소득의 분포와 만족도	300 - 199
최근 동독경제 현황(영문자료)	300 - 200
사민당 연대협약(안) - 독일 경기부양, 동독재건, 환경개선 및 사회정의 -	300 - 201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93.1) -	300 - 202
내독관계에서 양독주민들의 상대편 지역에 은행구좌 설치	300 - 203
독일 경제현황에 관한 콜 수상 연설문(영문자료)	300 - 204
구동독 산업 정비와 재건을 위한 신탁청의 책임	300 - 205
과거 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법	300 - 206
농업구조조정법에 의거한 농장주들의 권리	300 - 207
통독으로 인한 국가부채	300 - 208
독일 5대 경제연구소 '93 춘계 경제전망 보고서	300 - 209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	300 - 210
'93 춘계 독일 경제 현황 (영문 자료)	300 - 211
구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 (제8차 보고서)	300 - 212
신설주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현황	300 - 213
과거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법(안) 해설	300 - 214
내독간 신용대부 (Kredit) 거래와 그 정치적·경제적 의미 - '83, '84의 대규모 대 동독 은행차관을 중심으로 -	300 - 215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일독일의 임금 및 고용현황 - '93년 1/4분기 -	300 - 216
신설주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300 - 217
구동독 계획경제의 기술혁신력 부재: 동독 체제의 근본적인 붕괴 원인	300 - 218
몰수재산 관련 보상법 정부(안)에 대한 논평	300 - 219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	300 - 220
통독후 구조적응 과정 - 베를린-브란덴부르그 지역 -	300 - 221
구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 현황 ('93년 6월말 현재)	300 - 222
통일독일의 재정 정책 및 운용 계획 ('93 ~ '97)	300 - 223
독일 경제 현황 - '93년 2/4분기 -	300 - 224
독일의 산업입지 확보 방안 - 정부 보고서 (요약) -	300 - 225
'93/94 공공분야 재정 현황	300 - 226
신탁청의 사유화 전략 - 실적과 문제 (영문 자료) -	300 - 227
사유화 과정상의 문제점 - 미시적 · 거시적 접근 (영문 자료) -	300 - 228
신설주의 경제재건 및 지역개발 정책 (영문 자료)	300 - 229
통일 비용 · 수익 산정 방법론	300 - 230
미래 산업입지로서의 독일 (영문 자료)	300 - 231
구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 (제9차 보고서)	300 - 232
통일독일 경제 현황 - '93년 여름 (영문 자료) -	300 - 233
신탁청 기업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 보고 ('93.8) -	300 - 234
대동독지역 공공부문 재정이전 현황 (1991~1994년)	300 - 235
독일 6대 경제연구소 '93 추계 경제전망보고서	300 - 236
'93 추계 독일 경제 동향 (영문 자료)	300 - 237
동서독지역 소득 비교 (1990~93)	300 - 238
신탁청의 조직개편 및 재정 현황	300 - 239
최근 신탁청 활동 동향	300 - 240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 보고 ('93.12) -	300 - 241
신설주 경제의 구조적응상의 문제점	300 - 242
내독교역관련 반출·지불·신용보험	300 - 243
1993/94 동계 독일 경제 동향	300 - 244
구동독 국유부동산의 신탁청 이관	300 - 245
신탁청 조직 개편 법률(안)	300 - 246
구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 현황 ('93년 12월말 현재)	300 - 247
구동독의 유산 - 냉전이 동독경제에 미친 영향 -	300 - 248
신탁청 연간 결산보고서 (1990 ~ 1992)	300 - 249
신설주에 대한 투자촉진대책	300 - 250
신탁청 임무의 자회사 이관 계획 - 재무성 보고서 -	300 - 251
신탁청 및 자회사의 직원 및 봉급 현황 - 재무성 보고서 -	300 - 252
신탁청 조직개편 및 직원, 봉급체계에 관한 연방심계원의 의견서	300 - 253
동·서 베를린간의 소득 격차	300 - 254
신연방주의 경제 상황	300 - 255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 보고 ('94.1) -	300 - 256
구소련 점령고권에 의한 몰수재산 반환 금지	300 - 257
신연방주 경제 및 사회통합 현황	300 - 258
신설연방주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 (제10차 보고서)	300 - 259
독일 6대 경제연구소 '94 춘계 경제전망 보고서	300 - 260
신연방주 기업에 대한 공공발주 현황 보고서	300 - 261
독일의 산업입지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확충 문제	300 - 262
신연방주 산업별 생산성 분석	300 - 263

자 료 명	분류번호
신연방주 산업입지 강화를 위한 경제 정책	300 - 264
몰수재산 보상 및 조정에 관한 법률안	300 - 265
신탁청의 재정현황(영문 자료)	300 - 266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94. 3) -	300 - 267
구동독 미해결 재산권 처리 현황('94년 3월말 현재)	300 - 268
1993년도 동·서독 전세가격 비교	300 - 269
구동독 대외무역 총괄회사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 요약 부분 -	300 - 270
신연방주의 산업생산 현황	300 - 271
1993년도 동서독지역 경제현황 평가 - 영문 자료 -	300 - 272
신연방주의 중소기업 확충	300 - 273
'94 춘계 독일경제 현황 및 전망 - 영문 자료 -	300 - 274
구동독 대외무역총괄회사에 대한 함부르크 경제연구소 전문감정서(결론 부분)	300 - 275
'94 춘계 독일경제 현황 - 영문자료 -	300 - 276
몰수재산 반환배제의 위헌 주장에 대한 반론	300 - 277
신연방주의 수출 동향	300 - 278
신연방주의 소득 현황	300 - 279
연방의회 동독 대외무역총괄회사 조사위원회 보고서	300 - 280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 보고('94. 5) -	300 - 281

자 료 명	분류번호
몰수재산 원상회복에 관한 의견	300 - 282
신연방주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현황과 전망	300 - 283
신탁청 활동 감독 및 계약이행 관련 사항 검토	300 - 284
신연방주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문제점	300 - 285
동·서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비교분석	300 - 286
독일연방정부의 부채현황	300 - 287
신연방주의 연금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300 - 288
1994년도 2/4분기 독일경제분석	300 - 289
신탁청 기업 사유화 실적 - 신탁청 월간보고('94. 6) -	300 - 290
신연방주 가계의 취업 및 수입상태	300 - 291
신연방주의 소비자물가 상승	300 - 292
신탁청의 1993년도 연간보고서 관련 주요 통계	300 - 293
신연방주의 농업구조 변천과정	300 - 294
신탁청의 재정현황 및 향후계획	300 - 295
신연방주의 건축경기 현황	300 - 296
1994년도 상반기 신연방주 경제현황(영문)	300 - 297
신연방주의 출산율 감소현황 분석	300 - 298
독일 6대 경제연구소 '94 추계 경제전망 보고서	300 - 299
신연방주 재건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	300 - 300
통일이후 구동독 지역의 상품 변천 모습	300 - 301

자 료 명	분류번호
베를린지역의 취업현황과 전망	300 - 302
신탁청의 발전과정과 해체후 후속 조직의 성격	300 - 303
신연방주에 대한 세계상 지원	300 - 304
연방정부의 신 재정정책	300 - 305
'94 3/4분기 독일경제 분석	300 - 306
신탁청의 조기사유화 평가	300 - 307
신탁청의 활동결산 - Der Spiegel지 -	300 - 308
신탁청 해체 및 후속 조직의 역할	300-9501-1
'94 신연방주 경제성장 및 '95 전망	300-9502-2
과거 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법률 해설	300-9502-3
신연방주 투자현황	300-9502-4
신탁청 후속조직의 법적 문제	300-9503-5
독일의 단기·중기 경제전망(영문)	300-9504-6
독일 6대 경제연구소 '95 춘계 경제전망 보고서	300-9504-7
1995년도 독일 연방정부 예산	300-9504-8

<경제분야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독의 생산성과 경제질서 - 변천하는 동독경제 -	(번역) 300 - 1
대동독 경제지원	〃 300 - 2
동독의 재산권 반환 논쟁	〃 300 - 3
신탁청 정관	〃 300 - 4
신탁주식회사 정관	〃 300 - 5
신탁청 조직개편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	〃 300 - 6
동독 공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에 관한 법(신탁법)	〃 300 - 7
독일통일의 경제·사회적 전망 (쾰른 독일경제연구소 전문감정 보고서 요약)	〃 300 - 8
5대 경제연구소 전문감정에 비추어 본 독일통일 비용	〃 300 - 9
신탁청, 동독 공유기업 정비에 총력 경주	〃 300 - 10
내독경제 관계법령	〃 300 - 11
미해결 재산권의 처리문제	〃 300 - 12
서기 2000년까지의 통일독일 주택 전망	〃 300 - 13
과거 동·서독간 통행문제	〃 300 - 14
내독간 경제관계 및 그 정치적 평가	〃 300 - 15
기업사유화의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을 위한 법률(안) 설명서	〃 300 - 16
통독경제의 구조전환	〃 300 - 17
구동독 경기부양책에 관한 보고서	〃 300 - 18
의회 및 행정부 소재지 Bonn-Berlin 이전 비용	〃 300 - 19
신탁청 역할의 재조명	〃 300 - 20
구동독 경기부양을 위한 공동 대응책	〃 300 - 21
통일독일 농업문제	〃 300 - 22
신설5개주(구동독지역)의 농업정책	〃 300 - 23
통독의 희생양 : 신탁청과 암살된 Rohwedder 청장	〃 300 - 2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신설5개주 기업사유화의 제문제에 대한 연방경제성 산하 학술자문회의 전문감정 보고서	(번역) 300 - 25
구동독지역을 위한 올바른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노선의 지속적 추구(독일 경제5현의 특별보고서)	〃 300 - 26
EC와 내독무역의 관계	〃 300 - 27
EEC의 대동독관계에 비추어본 내독무역의 의의	〃 300 - 28
화폐·경제·사회통합 1주년에 즈음한 통독의 중간평가(Ⅰ)	〃 300 - 29
화폐·경제·사회통합 1주년에 즈음한 통독의 중간평가(Ⅱ)	〃 300 - 30
화폐·경제·사회통합 1주년에 즈음한 통독의 중간평가(Ⅲ)	〃 300 - 31
구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Ⅰ)	〃 300 - 32
구동독지역의 전체경제 및 기업경영적 적응과정(Ⅱ)	〃 300 - 33
통독과 EC 통합에 즈음한 '90년대 독일 교통정책	〃 300 - 34
체신통합에 관한 동·서독 체신부장관 공동성명	〃 300 - 35
위기에 처한 경제통일	〃 300 - 36
동독의 국가 주도 명령경제로부터 통일독일의 사회복지적 시장경제로 전환(Ⅰ)	〃 300 - 37
통독이후 부담의 배분을 둘러싼 투쟁	〃 300 - 38
신탁청 부동산회사 개관	〃 300 - 39
연구기술부문의 독일통일	〃 300 - 40
신연방주내 구동독 국유재산 사유화에 관한 문답식 해설	〃 300 - 41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긴급대책	〃 300 - 42
화폐·경제·사회통합 2주년 각료회의 콜 수상 연설문	〃 300 - 43
구 동·서독지역 최근 경기 동향(FAZ)	〃 300 - 44
통일독일의 90년대 경제정책 - 산업 최적지로서의 독일을 위한 전략 -	〃 300 - 45
상반된 이해관계하에 전개된 내독간 경제교류	〃 300 - 46
구동독 재건 관련 콜 수상 연설문	〃 300 - 47
구동독 경제의 몰락과 국가파탄	〃 300 - 48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동독 경제의 파국적 실태	(번역) 300 - 49
구동독 지역에 대한 산업정책의 전환	〃 300 - 50
신연방주 재건 지원 실무기획단 중간보고 및 건의안	〃 300 - 51
통독직전 구동독 경제위기에 관한 분석 보고서 - 국가기획위 위원장의 정치국 보고서 -	〃 300 - 52
화폐통합에 관한 연방은행 보고서	〃 300 - 53
동독의 외환 획득 사업	〃 300 - 54
내독간 비상업적 지불 및 청산교류	〃 300 - 55
신설주 경제정책의 오류	〃 300 - 56
연대협약(Solidarpakt) 합의문	〃 300 - 57
'연대협약' 관련 논평 -. 위험스런 협약 -	〃 300 - 58
구동독 경제 및 기업경영의 통합. 적응과정(제7차 보고서)	〃 300 - 59
'연대협약' 관련 논평(Ⅱ) - 놓쳐버린 좋은 기회 -	〃 300 - 60
'연대협약' 관련 논평(Ⅲ) - 공동합의하에 과세부과 -	〃 300 - 61
구동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언 -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	〃 300 - 62
과거 몰수재산 보상법안 관련 논평 - 부당한 보상 규정 -	〃 300 - 63
내독간 경제교류중 물품거래 절차 및 유의사항(Ⅰ)	〃 300 - 64
내독간 경제교류중 물품거래 절차 및 유의사항(Ⅱ)	〃 300 - 65
화폐통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변형과정상의 위기 -	〃 300 - 66
1995년 이후 통일비용 부담 현황	〃 300 - 67
내독간 경제교류중 물품거래 절차 및 유의사항(Ⅲ)	〃 300 - 68
내독간 경제교류중 용역거래 절차와 유의사항	〃 300 - 69
동·서독 화폐통합 - 경제적 이성보다는 정치적 결단 -	〃 300 - 70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내독간 경제 교류 관련 신용 대부 허가	(번역) 300 - 71
내독간 경제 교류 관련 서독 정부 보증 (Garantie)	〃 300 - 72
화폐통합 3주년 관련 언론 논평 - 3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 -	〃 300 - 73
독일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 성장강화, 산업입지구축, 긴축재정운용 -	〃 300 - 74
과거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연방 정부의 법안 - 강연 내용 -	〃 300 - 75
휘청거리는 독일 경제 - Die Zeit지 논평 -	〃 300 - 76
내독간 경제협력사업의 제 유형과 절차 (유의사항)	〃 300 - 77
숫자로 본 신설주 경제 현황	〃 300 - 78
동·서독간 청산단위가 아닌 경화를 통한 지불거래 주요내용	〃 300 - 79
구동독 기업의 민영화 - 체제전환의 핵심	〃 300 - 80
몰수재산 보상법 - 수정안 및 관련 자료 -	〃 300 - 81
신탁청의 딜렘마 - 비생산적 파괴와 그 집행인 -	〃 300 - 82
법의 도구화 - 부진한 투자활동 -	〃 300 - 83
통일독일의 경제문제 진단 - 쉴러 전 경제장관의 저서 요약 -	〃 300 - 84
변형이론의 현 주소 - 지금까지의 연구서 분석 -	〃 300 - 85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2) - 신탁청에 의한 기업 사유화 -	〃 300 - 86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3) - 미해결 재산 문제의 처리 -	〃 300 - 87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4)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붕괴 -	〃 300 - 88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6) - 계획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 -	〃 300 - 89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8) - 구동독 재건을 위한 재원조달 -	〃 300 - 90
구동독 대외무역총괄회사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 관련 기사 -	〃 300 - 91

자 료 명	분류번호
연방의회 동독 대외무역 총괄회사 조사위원회 보고서 - 요약 부분 -	(번역) 300 - 92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12) - 경제통합의 과정 1 -	〃 300 - 93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13) - 경제통합의 과정 2 -	〃 300 - 94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15) - 경제통합의 과정 3 -	〃 300 - 95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17) - 경제통합의 과정 4 -	〃 300 - 96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18) -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	〃 300 - 97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19) - 우편 및 통신 -	〃 300 - 98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20) - 환경 인프라 및 도시개발 -	〃 300 - 99
소련점경치하 몰수재산의 반환금지와 독일통일과의 관련성 - FAZ, GA 기사 -	〃 300 - 100
소련점경치하 몰수재산 문제와 2+4회담 - 고르바초프의 Spiegel지 기고문 -	〃 300 - 101
몰수재산 관련 2+4 및 동서독 회담 일지	〃 300 - 102
신탁청의 결산과 전망	〃 300 - 103
연방하원의 연대부과금 관련 논쟁 동향	(요약) 300-9502-1
신연방주 재건지원금 남용 관련 논쟁	〃 300-9502-2

<사 회 복 지 분 야>

자 료 명	분 류 번 호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발전 과정 - 사회발전	400 - 1
〃 - 사회·정치적문제	400 - 2
동독의 임금협상 뉴스	400 - 3
동독의 고용촉진법(90.6.28 제정, 1차 국가조약안 후속법령)	400 - 4
동·서독 통합이후 동독지역의 실업재정 및 사회보험 운영현황 (요약)	400 - 5
사회보험에 관한 법	400 - 6
기존연금의 서독수준으로의 상향조정 및 기타규정(연금조정법)	400 - 7
제1차 국가조약 부칙Ⅱ항 규정에 의해 동독지역에 적용되는 서독의 법령집(사회통합 관련)	400 - 8
동·서독 경제·노동상황(7월)	400 - 9
노동분쟁 중재기관의 설립 및 중재절차에 관한 법(독문, 번역본)	400 - 10
통독후의 단체교섭 등으로 동독 경제력 악화	400 - 11
공공써비스, 수송·교통노조 파업 예고 (8.28 게네랄 안차이거지 기사번역)	400 - 12
동독 9만 공공써비스 종사자 경고파업 (8.30 게네랄 안차이거지 기사번역)	400 - 13
동독, 최고 15만명의 도제필요(8.24 게네랄 안차이거지 기사번역)	400 - 14
동독 의료보험 민간의료기관에 의한 의료급여 예정 (요약번역, 원문)	400 - 15
동독 공직근로자 매월 200 DM 임금인상(요약번역, 원문)	400 - 16
독일 노총의 단체협약 체결현황 보고(목차번역, 원문)	400 - 17
동독·서독 근로자 임금실태(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18
광산에너지 노조, 노총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조확장 계획 (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19
동독의 노동시장 상반기 동향(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20
동독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불확실(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21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독 에너지 공급의 생태학적 근대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발간책자, 목차번역)	400 - 22
동독 노총 해체(신문 요약번역)	400 - 23
서독 상업은행 · 보험조노 300 DM 이상 임금인상 요구 (신문 요약번역)	400 - 24
동독 경제 및 사회질서 개편후 사회보장정책적 과제 (논문 요약번역, 원문)	400 - 25
동독 청소년기관 설치법(목차번역, 독어원본)	400 - 26
취업촉진에 관한 지침(목차번역, 독어원문)	400 - 27
장애자 고용촉진에 관한 지침(목차번역, 독어원문)	400 - 28
서독지역 실업감소, 동독지역 실업증가(신문기사 요약번역, 원문)	400 - 29
고용창출 조치령(목차번역, 독어원문)	400 - 30
임금수준의 지역적 차이(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31
철강산업 단체교섭 어려울 것으로 예상(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32
직업훈련의 개별적 촉진에 관한 지침(독어원문, 목차번역)	400 - 33
동독발행 신분증(여권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외무성 회람 (독어원문, 영문번역)	400 - 34
동 · 서독 노동시장 동향 격차심화(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35
동독지역에 약 1,729천명의 단축근로자 존재(신문기사 요약번역)	400 - 36
독 · 쏘간 노동 · 사회분야 협력협정(당관 영문번역)	400 - 37
동 · 서독 노조통합 과정(번역요약, 독어원문)	400 - 38
서독의 신설 5개주에 대한 환경보호 지원(영문)	400 - 39
동 · 서독 노동시장 상반된 추이 여전히 계속 (요약번역, 신문기사 원문)	400 - 40
연방고용청 '90 독일 고용실태 분석(요약)	400 - 41
독일정부의 대 동독지역 실업대책(요약)	400 - 42
'91.1월 고용상황	400 - 43
신설5개주 환경재건 프로그램	400 - 4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을 전후한('90) 구동독지역 실업현황 및 대책	400 - 45
신설5개주 환경정화문제	400 - 46
동·서독 노총의 통합에 따른 문제	400 - 47
통독후 통합 "연금법" 제정을 위한 해결과제	400 - 48
통합조약중 환경오염 관련 구채무 면제규정	400 - 49
신설5개주 보건·의료체계 확립 문제	400 - 50
통독후 환경문제에 관한 종합대책	400 - 51
동·서독 사회통합을 위한 서독 연금법의 동독 적용	400 - 52
동구지역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 전망	400 - 53
전환기에 처한 노동시장	400 - 54
동독의 단체협약 발전추이	400 - 55
연금개정 내용('92)	400 - 56
구동독지역 실업대책으로서의 신탁청의 사회복지 계획	400 - 57
구동독지역 여성실업자 고용창출 대책	400 - 58
구동독지역에의 아동·청소년 부조법의 도입	400 - 59
통합조약에 따른 구동독지역에의 의사법 도입	400 - 60
구동독기관 종사자들의 이전근무기간 인정 합의	400 - 61
"투자장애 제거법" 상의 구동독 환경오염 관련 구채무 면제규정 설명서	400 - 62
사회부조(Sozialhilfe) : 신설연방주 주민에 대한 해설 책자	400 - 63
가족정책(동독지역 가정에 대한 급부)	400 - 64
동·서독 적십자사 통합 관련	400 - 65
과거 내독간 건강·보건분야 전권위임자 접촉과 활동	400 - 66
구동독 환경오염 잔재 청산 책임 소재	400 - 67
통독후 구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노동자 이동현황	400 - 68
통독후 실업증가 원인과 대책	400 - 69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후 새로운 노조의 형성과 임금협상 자치권	400 - 70
구동독지역 노동시장 변동 추세	400 - 71
통독과정에서의 노조정책	400 - 72
고용시장과 고용정책	400 - 73
통독과정에서의 여성문제 논쟁	400 - 74
구동독 변혁과정에의 적응에 따르는 비용	400 - 75
사회적 통합정책상의 제수단과 문제점	400 - 76
최근 독일 노동시장 동향	400 - 77
구 동·서독 가족·부녀·아동 분야 사회복지 혜택 비교	400 - 78
구 동·서독 사회보장정책 제규정 비교 (연방정치교육센타 발간자료)	400 - 79
구 동·서독 사회보장제도 비교(내독관계성 발간자료)	400 - 80
과거 양독관계에 있어서 적십자사의 역할	400 - 81
신설주에 대한 환경복구정책	400 - 82
과거 양독간 보건협정 구체화를 위한 서독정부 시행령	400 - 83
내독관계성과 독일적십자사간에 체결된 내독간 환자운송에 관한 협약	400 - 84
구동독 피난민 정착·지원 문제	400 - 85
구동독 피난민을 위한 "긴급수용법" 및 개정법 원문	400 - 86
구동독 피난민을 위한 "긴급수용법" 시행령 및 개정령 원문	400 - 87
구동독지역 노동행정체계 구축 현황	400 - 88
구동독 실업자 해소를 위한 고용촉진법 개정	400 - 89
통독이후 복지 향상 실태	400 - 90
통독과 여성문제	400 - 91
신설주 여성의 사회적 참여 및 지위	400 - 92
내독간 상속재산의 반입. 반출	400 - 93
통일독일의 주택정책	400 - 9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독으로부터 이주에 따른 이사물품 반출	400 - 95
내독간 사체. 유골의 반입. 반출	400 - 96
내독관계에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선물소포로 발송이 가능한 의약품	400 - 97
내독간 보건 분야 교류 · 협력	400 - 98
화폐통합이후 3년간 노동시장 동향 (영문 자료)	400 - 99
신설주의 실업자 취업 지원	400 - 100
통일독일의 사회정책적 문제	400 - 101
통일 전후 동독지역 보건 · 사회 시설	400 - 102
구동독지역 재활원 시설 및 구조	400 - 103
동 · 서독 청소년 대상 여론조사 결과	400 - 104
동 · 서독 주민대상 평등권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400 - 105
통일독일의 실업문제	400 - 106
신설주의 사회보장제도 구축	400 - 107
구동독지역의 직업교육 기회	400 - 108
신연방주의 사회법	400 - 109
신연방주의 가전제품 보유에 관한 여론조사	400 - 110
신연방주의 고용촉진대책	400 - 111
동 · 서독지역 사회보장 예산	400 - 112
신연방주 실업의 심리적, 사회적 영향	400 - 113
1993년 산업별 임금협약 체결 현황	400 - 114
신연방주의 사회정책적 재건 현황	400 - 115

〈사회복지분야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환경보호문제 - 양독간 환경통합달성 -	(번역) 400 - 1
통일독일의 사회복지정책	〃 400 - 2
신설 5개주 실업현황과 대책	〃 400 - 3
동독으로부터의 이주민·탈출자들의 서독정착에 관한 지침서 ('91.1 기준)	〃 400 - 4
피난과 출국의 동·서독 이주 40년사	〃 400 - 5
신설 연방주(구동독지역)의 보건·의료체계 개편	〃 400 - 6
사회복지국가로 가는 과정 - 구동독지역 통독후 1년 결산 -	〃 400 - 7
구동독 주택의 구채 청산 문제	〃 400 - 8
분단시 동·서독 사회복지 체계·수준 비교	〃 400 - 9
동서독 노조 통합 과정	〃 400 - 10

〈교 육 분 야〉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양독 교육위원회 구성	500 - 1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 발전과정(교육제도 발전)	500 - 2
동·서독 학제 대비표	500 - 3
통독대비 교육예산 증액	500 - 4
향후 통독일정과 관련한 교육정책 보고	500 - 5
교육제도의 현상과 현안 문제점	500 - 6
동서독 연구 및 학문 공동발전 전망(관계자료)	500 - 7
90년 신학기 동독교육계 현황	500 - 8
동독의 교육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전개	500 - 9
독일 고등교육 2,000년대(장관 기조연설내용 요약 보고)	500 - 10
동·서독 체육통합계획	500 - 11
동·서독간 체육교류현황	500 - 12
동독 각정당의 학교제도에 관한 견해(요약번역, 원문)	500 - 13
교과서 없는 동독학생들(요약번역, 신문기사 원문)	500 - 14
동독의 스포츠를 인수하는 댓가(신문기사 원문)	500 - 15
독일 청소년 자연보호연구 현상모집 공고(요약번역, 원문)	500 - 16
독일 및 유럽통합과 직업교육정책(요약번역, 원문)	500 - 17
공산주의 이론 연구자에 대한 지원금지조치(요약번역, 원문)	500 - 18
주재국 교육정책의 변화(각급학교 수업연한 단축) (번역요약문 및 원문)	500 - 19
동독 공산당법 폐지후 교육관련자료(번역요약문 및 원본)	500 - 20
동·서독 교육위원회 최종합의사항(요약번역)	500 - 21
주재국 교육계 동향보고(통독 및 EC 통합을 중심으로)	500 - 22
통독후 신설5개주 교육개혁안	500 - 23
제250차 주문교상 및 교육자문위원 전체회의 결과	500 - 24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서독 체육통합 계획	500 - 25
신설 5개주 전산교육 강화(국문요약번역, 독어원문)	500 - 26
통일독일의 대학교육정책	500 - 27
동·서독간 학술연구 통합과정(독어원문)	500 - 28
90년대의 교육정책 전망(직업교육관계)	500 - 29
통독연구에 관한 다양한 입장과 경향(독어원문)	500 - 30
올림픽을 향하여 - 독일스포츠 발전사 - (독어원문)	500 - 31
동·서독간 체육교류를 위한 의정서	500 - 32
구동독 대학의 잔재청산(Abwicklung) 관련 논쟁	500 - 33
신설5개주 고등교육 개혁 프로그램	500 - 34
통독이후 교육예산의 증가	500 - 35
독일 동부지역 고등교육기관의 진흥방안	500 - 36
구동독 청소년에 대한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과 통독이후 영향	500 - 37
통독이후 독일의 학교 : 구 동·서독간 상이점 극복방안	500 - 38
신연방 5개주 교과서 부족	500 - 39
신연방주(구동독지역) 일반학교의 새로운 구성	500 - 40
동독학교 교육의 2가지 실패요인	500 - 41
구동독지역 대학 학과(시설) 폐지 및 신설	500 - 42
통독이후 구동독 주민들의 심리적 적응현황	500 - 43
동·서독 청소년 단체간 청소년 여행에 관한 합의서('82.9.20)	500 - 44
양독간 청소년 단체여행에 관한 협약('89.9.1)	500 - 45
신설주(구동독지역) 교육과 학문분야 장려조치(설명자료)	500 - 46
구동독지역에서의 역사학 재정립	500 - 47
구동독 체제하에서의 역사학 비판	500 - 48
동·서독간 심리적 시련	500 - 49
통독과정에서의 교육분야	500 - 50

자 료 명	분류번호
동독역사의 재평가	500 - 51
동·서독 청소년 교류	500 - 52
동·서독간 청소년단체 접촉사례	500 - 53
구동독 청소년들의 극우화 경향 분석	500 - 54
구동독지역의 청소년 보호실태 - 라이프찌히 사례 중심 -	500 - 55
양독간 청소년 교류문제 관련 담당자 면담록	500 - 56
구동독 청소년들의 정치적 성향 - 브란덴부르그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	500 - 57
통독후 동독지역 청소년들의 교육관과 미래관	500 - 58
통일독일 청소년들의 생활 및 인생관	500 - 59
구동·서독지역 어린이들의 교외생활 비교	500 - 60
서독 정부의 청소년·학생을 위한 내독간 견학여행 장려 대책	500 - 61
동·서독 지역주의 교사 현황	500 - 62
통독 전후 동독지역 대학 실태	500 - 63
독일통일의 동질감 형성과 역사교육	500 - 64
전환기의 역사와 민족동질성	500 - 65
통일독일의 국가로서의 의미	500 - 66

〈교육분야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동·서독 과학·기술 협정	(번역) 500 - 1
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	〃 500 - 2
신설5개주 정치교육의 출발점	〃 500 - 3
동·서독 체육통합에 따르는 제문제	〃 500 - 4
신설5개주의 대학교육 개혁안('91~'95)	〃 500 - 5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점	〃 500 - 6
내독간 과학·기술 협력 가능성과 한계	〃 500 - 7

〈문 화 · 종 교 분 야〉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양독간 문화교류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	600 - 1
동독 변혁이후의 카톨릭 교회(독어논문)	600 - 2
독일 분단 · 통일과 언어 이질화 문제	600 - 3
통독이후 구동독지역 문화예술 지원	600 - 4
동 · 서독 문화분야 통합현황	600 - 5
구동독 문화분야 재건을 위한 구체적 지원조치	600 - 6
Stasi와 구동독 공산당의 교회정책	600 - 7
교회의 Stasi 청산작업	600 - 8
통독과정에서의 문화분야	600 - 9
내독간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례 - 구동독 주민 면담록 -	600 - 10
통독후 동독주민의 정신적 전환문제	600 - 11
내독관계에서 동독으로부터 예술품.문화재 반출	600 - 12
내독간 문화교류(Ⅰ)	600 - 13
내독간 문화교류(Ⅱ)	600 - 14
신설주의 문화 및 문화정책 - 독일 바이마르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	600 - 15
신설주의 문화 구조 변화	600 - 16
구동독 지식인의 반체제활동과 문화	600 - 17
구동독 구교 교회와 Stasi	600 - 18
신교 교회와 구동독 공산당-국가	600 - 19
동 · 서독의 공동성장 문제	600 - 20
통일독일의 심리적 격차	600 - 21
구동독 교회의 정치적 영향과 Stasi	600 - 22

<문화·종교분야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슬픔이 없는 민족 (구동독 작가 Rolf Schneider의 지식인으로서 체험)	(번역) 600 - 1
동·서독간 문화교류	〃 600 - 2
구 동독의 문화정책	〃 600 - 3
동·서독간 문화협정	〃 600 - 4
동·서독간 신교통합	〃 600 - 5
과거 서독교회의 대 동독지원	〃 600 - 6
통일독일의 문화정책	〃 600 - 7
제7회 한·독교회협의회의 공동성명 ('93. 5. 2~7, Bad Saarow)	〃 600 - 8
동서독 교회의 통합과 문제점	〃 600 - 9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11) - 문화, 언론, 스포츠 -	〃 600 - 10

<언 론 분 야>

자 료 명	분 류 번 호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 발전과정 - 언론매체	700 - 1
서독 공보처의 통독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계획(관계문서)	700 - 2
독일 언론재편(요약번역, 원문)	700 - 3
언론의 지방분권화(논문 요약번역, 원문)	700 - 4
통독후 이전동독지역 언론현황(독어원문)	700 - 5
통독관련 독일방송 재편현황(요약번역, 독어원문)	700 - 6
통독관련 독일언론 상황보고	700 - 7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제도" 소개 홍보용 책자 (책자개요번역, 원문책자)	700 - 8
신설 5개주(이전동독지역) 방송자문위원회 구성	700 - 9
독일 방송제도 개편	700 - 10
독일 방송제도 연구	700 - 11
구동독 신문·잡지의 재편	700 - 12
독일통일 전후 언론·방송 홍보정책	700 - 13
동·서독간 방송협력에 관한 합의서	700 - 14
구동독 국가보위부(Stasi)의 대서방 언론 평가	700 - 15
구동독지역의 공영방송체계 확립현황	700 - 16
동.서독 통신분야 교류(Ⅱ)	700 - 17
동.서독 통신분야 통합과정 및 현황	700 - 18
동.서독 통신분야 교류(Ⅲ)	700 - 19
동독 이주민들의 '서독 TV' 시청	700 - 20
내독간 언론인들의 활동 보장	700 - 21
통독직전 동독주민들의 서독 라디오·TV 시청 현황	700 - 22
내독간 통신교류 관련 구동독의 법률 목적	700 - 23
통독과정에서 라디오·TV의 역할 (영문 자료)	700 - 24

〈언론분야 : 번역〉

자 료 명	분 류 번 호
구동독의 대중매체 정책과 구서독측으로부터의 영향	(번역) 700 - 1
구 동독인들의 구서독 라디오·TV 이용 현황	〃 700 - 2
동.서독 통신분야 교류(Ⅰ)	〃 700 - 3

<기 타 분 야>

자 료 명	분 류 번 호
Jakob-Kaiser 재단이 작성한 동독 발전과정 - 위기로부터의 발전(Ⅰ및 Ⅱ)	800 - 1
신설 연방주 주민을 위한 일상생활정보(120개 문답식 소책자)	800 - 2
독일 통일과정(연대기별 사건중심, 독어원문)	800 - 3
통독후 여론조사 결과	800 - 4
통독후 여론조사 결과('91.5.13 Spiegel)	800 - 5
통독이후 여론조사 결과(Spiegel지 7.22~29자)	800 - 6
연방내무성이 실시한 구동독지역 문제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800 - 7
통독 1주년 관련 언론보도, 각계반응	800 - 8
통독이후 1년간 각 분야별 통합 현황	800 - 9
통합조약(Einigungsvertrag) 본문 및 의정서 영문판	800 - 10
동·서독지역 대학생들의 통독이후 여론조사 결과	800 - 11
통일대비 특별정책 연수 주제강연 내용(요약)	800 - 12
"독일통일 소사전" (Handwoerterbuch der Deutschen Einheit) : 연방정치교육센타 발행 책자	800 - 13
전독문제연구소 '69~'91 활동보고서	800 - 14
통독이후 여론조사 결과(Der Spiegel 지 '92.4.27자)	800 - 15
신설주(구동독지역)에서의 보수우파(CSU와 DSU) 득표 가능성	800 - 16
전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 처리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800 - 17
구동독의 대변혁과 독일통일에 관한 참고도서 소개	800 - 18
독일분단에서 통일까지 연표 및 참고문헌	800 - 19
한민족 통일여성 재독일협의회 주최 통일강연 및 토론회 (내용요약)	800 - 20
연도별 내독관계성 예산(1949~1990)	800 - 21
구동독의 감사제도	800 - 22
통독과정 주간동향('92.7.13~7.19)	800 - 23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통독과정 주간동향	800 - 24
독일통일이 재정감사에 미친 영향	800 - 25
독일 연방감사원 현황	800 - 26
최근 통독관련 여론조사 결과	800 - 27
통독과정 주요동향('92. 7.27～ 8. 2)	800 - 28
통독 2주년 각 분야 통합현황	800 - 29
통독과정 주간동향('92. 9.24～ 9.30)	800 - 30
통독과정 주간동향('92.10. 1～10. 7)	800 - 31
통독과정 주간동향('92.10. 8～10.14)	800 - 32
통독과정 주간동향('92.10.15～10.21)	800 - 33
통독과정 주간동향('92.10.22～10.28)	800 - 34
통독과정 주간동향('92.10.29～11. 4)	800 - 35
통독 2주년을 즈음한 여론조사 결과	800 - 36
통독과정 주간동향('92.11. 5～11.11)	800 - 37
독·한 협회 주최 통일문제 심포지움 결과 보고	800 - 38
서독 내독관계성 주요사업 예산 내역	800 - 39
통독과정 주간동향('93. 1 .1～ 1. 6)	800 - 40
통독과정 주간동향('93. 1. 7～ 1.13)	800 - 41
통독이후 여론조사 결과 - '93.1.18자 Der Spiegel 지 -	800 - 42
통독과정 주간동향('93. 1.14～ 1.20)	800 - 43
통독과정 주간동향('93. 1.21～ 1.27)	800 - 44
통독과정 주간동향('93. 1.28～ 2. 3)	800 - 45
통독과정 주간동향('93. 2. 4～ 2.10)	800 - 46
통독과정 주간동향('93. 2.11～ 2.17)	800 - 47
통독과정 주간동향('93. 2.18～ 2.24)	800 - 48

자 료 명	분 류 번 호
호네커 관련 여론조사 결과	800 - 49
통독과정 주간동향('93. 2.25~ 3. 3)	800 - 50
통독과정 주간동향('93. 3. 4~ 3.10)	800 - 51
통독과정 주간동향('93. 3.11~ 3.18)	800 - 52
통독과정 주간동향('93. 3.19~ 3.26)	800 - 53
통독과정 주간동향('93. 3.27~ 4. 4)	800 - 54
통독과정 주간동향('93. 4. 5~ 4.11)	800 - 55
통독과정 주간동향('93. 4.12~ 4.18)	800 - 56
통독과정 주간동향('93. 4.19~ 4.25)	800 - 57
통독과정 주간동향('93. 4.26~ 5. 2)	800 - 58
통독과정 주간동향('93. 5. 3~ 5. 9)	800 - 59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 - 중부유럽과 동아시아 변혁과정 (세미나 결과보고)	800 - 60
통독과정 주간동향('93. 5.10~ 5.16)	800 - 61
통독과정 주간동향('93. 5.17~ 5.23)	800 - 62
통독과정 주간동향('93. 5.24~ 5.30)	800 - 63
통독과정 주간동향('93. 5.31~ 6. 6)	800 - 64
통독과정 주간동향('93. 6. 7~ 6.13)	800 - 65
통독과정 주간동향('93. 6.14~ 6.20)	800 - 66
통독과정 주간동향('93. 6.21~ 6.27)	800 - 67
통독과정 주간동향('93. 6.28~ 7. 4)	800 - 68
통독과정 주간동향('93. 7. 5~ 7.11)	800 - 69
통독과정 주간동향('93. 7.12~ 7.18)	800 - 70
통독과정 주간동향('93. 7.19~ 7.25)	800 - 71
한반도 통일과정상의 문제점 - 한·독 통일문제 세미나 발표 논문 -	800 - 72
통독과정 주간동향('93. 7.26~ 8. 1)	800 - 73

자 료 명	분류번호
통독과정 주간동향('93. 8. 2~ 8.15)	800 - 74
통독과정 주간동향('93. 8.16~ 8.29)	800 - 75
통독과정 주간동향('93. 8.30~ 9.12)	800 - 76
통독과정 주간동향('93. 9.13~ 9.19)	800 - 77
통독 3주년 현황과 평가	800 - 78
독일 통일 소사전	800 - 79
『독일통일과 신연방주(구동독지역) 재건에 관한 자료집』	800 - 80
『독일통일과 신연방주(구동독지역) 재건에 관한 자료집』 (정본)	800 - 81
신연방주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실적 - 제4차 보고서 -	800 - 82
동독주민의 통일에 대한 만족도	800 - 83
독일인들의 불안요인에 관한 여론조사	800 - 84
베를린 장벽 개방에서 통일시까지 서독정부의 조치	800 - 85
통독후 100일간 독일정부의 대내외적 조치	800 - 86
신연방주 주민생활 관련 여론조사 분석	800 - 87
독일, 분단에서 통일까지 - 공보처 발행 책자 -	800 - 88
베를린 유권자들의 PDS 지지관련 정치성향 분석 (Spiegel, Focus)	800 - 89
베를린 장벽 개방 일지	800 - 90
내적 통합을 위한 개념 형성	800 - 91
베를린 장벽 개방	800 - 92

자 료 명	분류번호
동·서독 주민들의 1995년도 전망 여론 조사	800-9501-1
작센-안할트주 Wittenberg시 재건사례	800-9503-2
사회주의 도시로부터 자본주의 도시로의 변환과정 분석	800-9504-3
작센주 Leipzig 재건 사례	800-9504-4

《기타분야 : 번역》

자 료 명	분류번호
통일독일 여론조사 결과(동·서독 독일인을 묶는 것과 가르는 것)	(번역)800 - 1
통독 1주년 보고서(I)	〃 800 - 2
통독 1주년 보고서(II)	〃 800 - 3
슈미트 수상의 동독방문 세부일정	〃 800 - 4
호네커 서기장의 서독방문 세부일정	〃 800 - 5
최근 구 동·서독지역 지도층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 결과	〃 800 - 6
독일통일 1,000일 보고서 - 구동독 지역 지원 현황 -	〃 800 - 7
동·서독 주민간 심리적 통합 문제 - Allensbach 여론조사 결과 -	〃 800 - 8
바이체커 대통령 통독 3주년 기념사	〃 800 - 9
콜 수상 통독 3주년 기념사	〃 800 - 10
통독 3주년 관련 언론 반응(I) - 주요 일간지 사설 -	〃 800 - 11
통독 3주년 여론조사 결과	〃 800 - 12
통독 3주년 관련 언론 반응(II) - Der Spiegel지 -	〃 800 - 13
『독일통일과 신설연방주(구동독지역) 재건에 관한 자료집』 목차	〃 800 - 14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1) - 독일통일 과정 -	〃 800 - 15
바이체커 대통령 퇴임 기자 회견 - 독일통일 관련 부분 -	〃 800 - 16

자 료 명	분류번호
동독인들의 심경과 PDS 역할에 관한 de Bruyn의 진단	〃 800 - 17
빌리브란트 수상의 동독방문 세부일정	〃 800 - 18
슈토프 구동독 수상의 서독방문 세부일정	〃 800 - 19
제12대 독일연방의회의 통독관련 의정활동(Ⅰ)	〃 800 - 20
제12대 독일연방의회의 통독관련 의정활동(Ⅱ)	〃 800 - 21
기민당·기사당의 집권후 독일의 내적통일 달성계획	〃 800 - 22
제12대 독일연방의회의 통독관련 의정활동(Ⅲ)	〃 800 - 23
사민당의 집권대비 독일의 내적통일 달성계획	〃 800 - 24
헬무트 콜 수상의 기자회견 전문	〃 800 - 25
통독 4주년 관련 자료(1) - 대통령 연설문, 수상 성명문 -	〃 800 - 26
통독 4주년 관련자료(2) - 콜 수상 FAZ 인터뷰 -	〃 800 - 27
통독 4주년 여론조사 결과 - Die Zeit지 -	〃 800 - 28
제2차 전독총선 결과분석 - Kohl의 승리와 구동독지역의 분위기(Die Welt 기사) -	〃 800 - 29
독일통일 4주년 보고서	〃 800 - 30
튀링엔주의 재건 현황	〃 800 - 31
구동독과 북한간의 경제교류	〃 800 - 32
동독은 재정난 때문에 국경을 개방했는가?	〃 800 - 33

자 료 명	분류번호
Helmut Kohl 수상의 '95년도 신년사	(번역) 800-9501-1
통독 및 신연방주관련 주간 주요동향(2. 6-12)	(요약) 800-9502-1
통독 및 신연방주관련 주간 주요동향(2)	〃 800-9502-2
통독 및 신연방주관련 주간 주요동향(3)	〃 800-9503-3
통독 및 신연방주관련 주간 주요동향(4)	〃 800-9503-4
통독 및 신연방주관련 주간 주요동향(5)	〃 800-9503-5
통독 및 신연방주관련 주간 주요동향(6)	〃 800-9503-6
통독 및 신연방주관련 주간 주요동향(7)	〃 800-9503-7
통독 및 신연방주관련 주간 주요동향(8)	〃 800-9504-8
제4차 신연방주 재건실적 보고서	(번역) 800-9504-2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 관련 주간 주요동향(9)	(요약) 800-9504-9
통독 및 신연방주 재건 관련 주간 주요동향(10)	〃 800-9504-10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등장한 한국(FAZ 기고문)	(번역) 800-9504-3

각 분야별 통합현황 및 평가

인 쇄 : 1995. 5. 12

발 행 : 1995. 5. 15

발행처 : 통일원 통일정책실
제2정책관실

☎ 720 - 2148
725 - 0762

〈비 매 품〉